



아직도 식량자급률은 낮고 농산물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후계인력 육성과 농업분야 취·창업을 확대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격변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림공직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지금보다도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에게는 박근혜정부의 농정방향과 로드맵을 재확인함으로써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분발하는 거울이자 채찍이 되고, 국민에게는 우리 농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방화와 고령화란 위기 앞에서 대 역전을 꿈꾸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뚝뚝 나아가다보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비전을 성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0961-0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우리는 **어리** 를 바라보면서
어려 께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리 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우리는 **어리** 를 바라보면서
어려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머 리 말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더 멀리가기 전에 박근혜정부가 계획한 농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서둘러 개선하여 당초에 설정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박근혜정부의 농정구상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정책과제 추진상황과 주요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과는 확산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농정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이며, 이전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농업인 등 정책고객들이 고령화와 개방화란 메가트랜드 속에서 누적되어 온 상실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된 농업과 농촌, 한정된 예산, 비효율이 고착된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자는 농정비전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농정을 추진하고자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농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십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추가하여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화·규모화와 함께 첨단과학 기술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식량을 확보하고 수출농업을 지향하는 한편,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고령농을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농정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지역과 산업, 사람이 어우러지는 종합농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과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농정, 정부 3.0과 자조·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농정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개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주민들과 영세고령농에게는 편안한 삶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 늦도록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처럼 작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지난 20년간 미루어 왔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여 더 이상의 의무수입 증량을 중단시키고, 중국·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국과의 FTA도 큰 갈등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ICT·BT 등과 융복합한 스마트 팜을 확산하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농외소득 관련 정책을 6차산업화란 틀 속에서 체계화 하였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영세고령농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식량자급률은 낮고 농산물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후계인력 육성과 농업분야 취·창업을 확대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격변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림공직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지금보다도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에게는 박근혜정부의 농정방향과 로드맵을 재확인함으로써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분발하는 거울이자 채찍이 되고, 국민에게는 우리 농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방화와 고령화란 위기 앞에서 대 역전을 꿈꾸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나아가다보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비전을 성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5.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목 차



I. 박근혜정부의 농정구상

1. 농정여건 및 과제	008
2.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농정방향	012
3. 박근혜정부 농정의 특징	019

II.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 성과와 과제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024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041
3.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061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076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088

III. 부문별 주요 농정 추진사례 30선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사례	106
1-1 쌀관세화로 의무수입쌀 추가 증량 중단	
1-2 유희자원을 활용한 식량자급률 제고	
1-3 도시농업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1-4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변화	
1-5 생산자·소비자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1-6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례	132
2-1 들녘경영체의 확대 및 활성화	
2-2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	
2-3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2-4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2-5 식품 및 외식 산업의 육성	
2-6 농자재산업 육성 및 이용 효율화	

3.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사례	158
3-1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3-2 직접지불제도의 확충과 소득안정	
3-3 농산촌관광 활성화	
3-4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금융부담 완화	
3-5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지원 내실화	
3-6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선진화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사례	184
4-1 농촌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4-2 농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편의시설 지원	
4-3 귀농·귀촌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및 농촌 활력 제고	
4-4 농촌지역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4-5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4-6 주민 참여에 의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210
5-1 경영체DB 등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농정	
5-2 지역특성에 기초한 현장농정	
5-3 ICT 기반의 농업현장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	
5-4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 제고	
5-5 협업을 통한 농정 시너지효과 창출	
5-6 소통과 공감을 통한 농정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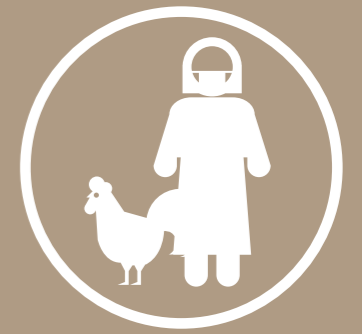
IV. 박근혜정부의 주요 농정 추진내역 (2013.2.25~2015.8.30)

1.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238
2. 주요 정책 도입 및 대책 수립	245
3. 주요 회의 및 행사	253

부록. 박근혜정부 농정 평가

1.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인지도 및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274
2. 박근혜정부 농정 성과에 관한 워크숍 개최 결과	288





I

박근혜정부의 농정 구상

1 농정여건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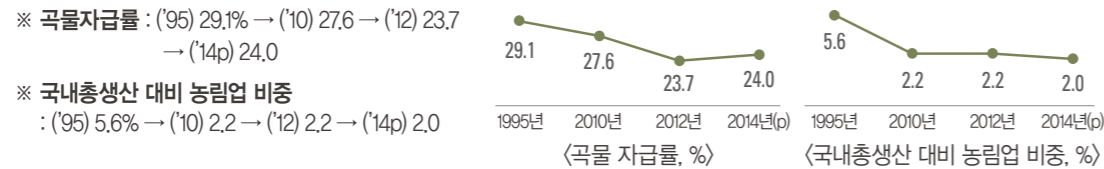
2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농정방향

3 박근혜정부 농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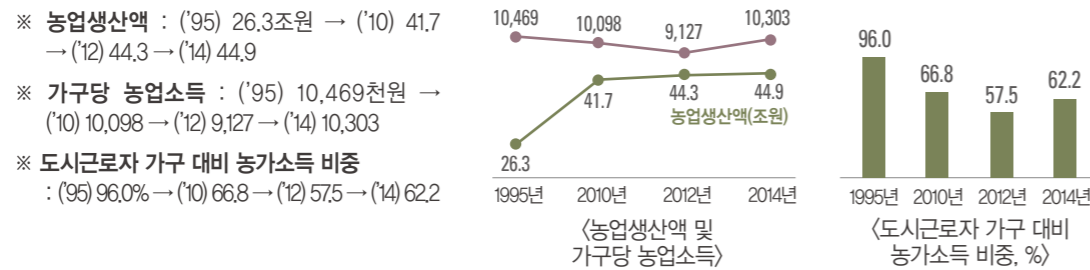
1 농정여건 및 과제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개방 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20여년간 농업·농촌에 대한 3차례의 대규모 투융자를 추진하였음에도 농업·농촌의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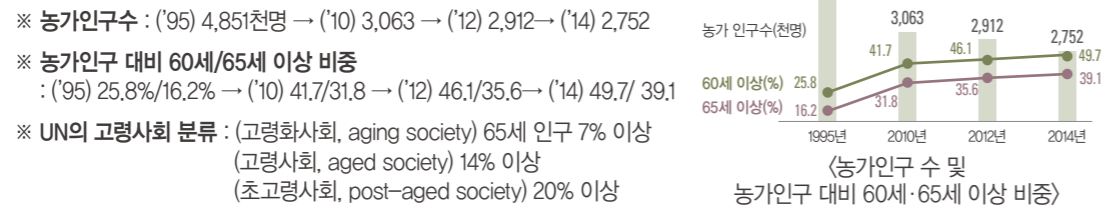
'90년대 이후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업 비중도 감소



농업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격차도 확대



산업고도화, 도시화 과정에서 젊은 층 위주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5세('14)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전



농업·농촌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비판이 겹치면서 납세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

- 농업계로부터도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이 없고, 농정방향과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한편,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 이외, 쌀 관세화·FTA·TPP 등 우리 농업에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개방화 이슈로 인해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94년 WTO 가입 시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치적 타협 등으로 쌀 관세화가 20년간 유예되면서 무려 40만 9천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이 수입되어 쌀 산업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만톤 → ('04) 20.5 → ('14) 40.9

- 특히, '14년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하여 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심화



▲ 쌀 관세화 반대 시위



▲ 수확을 앞둔 벼

한·칠레 FTA 이후 '12년까지 한·미, 한·EU FTA 등 8건의 FTA가 발효되고,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 협상도 진전

-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의 FTA체결 결과에 따라 농업계는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를 우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직접 챙기겠습니다.”

(‘12.11.19, 한농연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대통령)

대내외적인 농업·농촌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농정에 대해 내·외부에서는 기대와 비판적 시각이 교차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악영향으로 우리 농업이 더욱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 식량부족, 농업비중 감소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농업의 역할 축소와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
- 폭우·폭설·태풍·가뭄 등의 빈발에 따른 농업재해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잦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붕괴
- 타 산업에 비해 수익창출력이 낮고 근로여건이 열악한 농업을 젊은층이 기피하면서 농업의 인적기반이 붕괴
- 농업계 내부에서는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자조적 평가도 존재

※ 국가예산 증가율(%) : (‘10) 2.9 → (‘12) 5.3 → (‘15) 5.5
 ※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 : (‘10) 4.4 → (‘12) 4.2 → (‘15) 3.7



▲ 폭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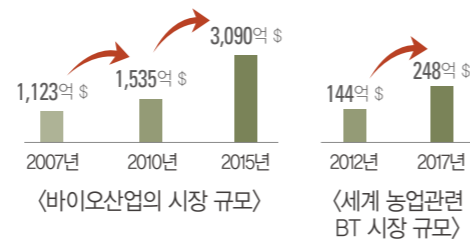
▲ 가뭄으로 드러난 저수지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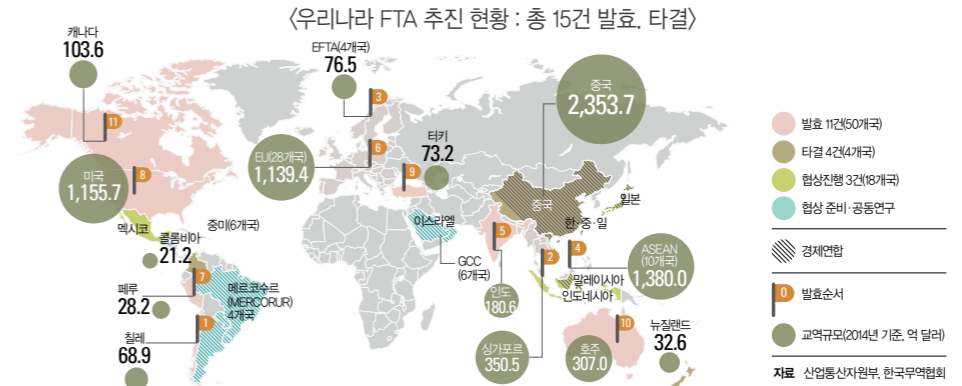
▲ 살처분 현장

다른 한편에서는 내·외부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여건변화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및 생활패턴의 변화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농업·농촌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ICT·BT 등 첨단기술, 새로운 지식·아이디어, 융복합 지원 플랫폼 등은 우리 농업·농촌에 성장기회를 제공



- FTA확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할랄 등 국내·외 식품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 창출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력의 기술과 경험·아이디어, 네트워크 등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우리 농업에 접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
- ※ 귀농·귀촌 가구수(전체/40대이하) : (‘10) 4,067/1,841, (‘12) 27,008/10,729, (‘14)44,586/17,611

따라서, 박근혜정부 농정은 개방화와 고령화, 농업인의 불안과 위기감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은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

농업계 내·외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역량 결집 노력 필요

한·미, 한·EU FTA발효, 한·중 FTA 비준, 한·일 FTA협상 등 전면적 개방화에 대응하여 한국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 진출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필요

- 특히, ICT·BT 융복합, 6차산업 등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

2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농정방향

박근혜정부 농정의 패러다임

개방화체제 진입과 고령화, 농정에 대한 불신·불안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와 배려, 소통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 및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개방화 등 거대한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 일부 대규모 농가 위주의 '돈 버는 엘리트 농업' 정책은 양극화로 농업 내부의 농·농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 없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

박근혜정부는 쌀 관세화, FTA 확대 및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성을 기초로 한 창조, 배려, 소통 농정을 추진

-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 등 규모화된 농가와 중소농을 중심으로 농업의 집단화·규모화·첨단화, 6차산업화 및 공동경영을 촉진
-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들녘단위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와 기계화, ICT를 결합한 스마트 팜으로 생산성 제고와 품질 향상
- 농업생산 중심의 획일적 소득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산·가공·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산업화와 지역중심의 특화농업 발전을 통해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 다양화
-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려 농정과 농업 구조의 고도화 도모



경제부흥, 국민행복 등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농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박근혜정부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효율성·경쟁력	농정목적	효율성, 형평성, 복지 중시
개별경영체 중심	농정대상	지역공동체 중심
농업·식품의 분산적 접근	정책내용	창조산업과 6차산업화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접근방법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다양성, 책임성 강화

- **농정목적**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효율성 중심의 농정에서 효율성과 농업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정으로 전환
 - 그동안의 경쟁력, 생산성 등 효율성 일변도의 대외 지향적인 정책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농업계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 노출
 - ▶ 개방화 시대에 기술적 효율성과 함께 농업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농업인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행복을 높임으로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 **농정대상** 개별경영체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협동과 공동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조직화, 규모화의 이점을 살리고 사회적 갈등 해소
 - 개별경영체 중심의 정책은 경영체간 경쟁을 촉진시켜 규모화가 진전되는 등 농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농가의 양극화와 함께 농업과 융복합되는 지역 및 공동체 차원의 당면 문제 해결에 한계
 - ▶ 농업·농촌의 고령화·과소화 현상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논·밭 농업 공동체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력 제고



▲ 공동체 경영

- **정책내용** 생산중심에서 가공·유통을 결합한 6차산업 중심의 융복합 농업과 전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 강조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 중심의 농정은 생산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농가의 경영구조가 단순해지고 농산물 가격하락 시에는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 유발
 - ➔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생산을 넘어 농업·농촌이 가진 일터·쉼터·삶터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6차산업, 농촌관광, 임대주택 등 다양한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
-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농정에 대한 자율성, 책임성을 강조
 -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은 지역이 가진 여건이나 부존자원, 개발의지 등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성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농정의 현상성이 저하되면서 전국의 농정이 획일화되는 문제
 - ➔ 지역중심의 농정과 농업인의 자율 및 책임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자조·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과 농촌 주민의 자율 및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 강화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 수립 경과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농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167명)를 구성하여 운영('13.4~)

- 생산자, 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언론,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농업계 내·외부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국민공감위 산하에 6개의 분과위원회와 1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핵심과제를 논의
- 분과위원회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26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소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총 76회 회의 개최)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12.5~'12.11)를 반영하여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작성 및 확정

- 발전계획(안) 검토를 위해 교수, 연구기관 등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공모(355건 접수)를 실시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



박근혜정부 농정의 주요 내용

농정비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

- 전업농과 중소농 및 영세고령농, 그리고 소비자들이 박근혜정부 농정을 통해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배려와 소통의 농정 추진

정책구조 경쟁력, 소득, 복지 등 3대 축을 기초로

-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농식품 경쟁력 강화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 농촌 복지 증진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선정

- 특히,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농정 제1의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식량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박근혜정부 농정의 새로운 동력 확보
- 경쟁력, 소득, 복지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 분야이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융복합, 협업, 정책 연계, 자율과 합의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효율성에 기반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어하겠습니다.” (*13.1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장관)

〈농정의 비전, 전략 및 과제〉



5대분야 정책의 추진방향

● **농식품 정책** 농업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확대 및 참여·합의 기반의 자율적 농산물수급관리 강화

- 농식품 공급은 양적확대에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공급확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에 고려하는 산지생태축산 등 친환경농축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영양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 정부의 인위적 수급방식을 자율과 합의에 의한 수급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운용을 억제하고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급조절매뉴얼을 토대로 투명하게 관리



▲ 산지생태축산

● **경쟁력정책** 들녘경영체를 통한 공동체 경영 및 지역농업을 조직화하고, ICT·BT 융합의 창조농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들녘경영체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농업을 미래의 성장산업화·수출산업화 추진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로 농기계 이용 효율화 및 밭농업기계화 촉진
 - ※ 농기계 사용일수/대 : (*12) 8.3일 → (*13) 9.5 → (*14) 10.5
 - ※ 밭농업 기계화율 : (*12) 55.7% → (*14) 56.3
 - ※ 논농업 기계화율 : (*12) 94.1% → (*14) 97.8



▲ 농기계 임대사업소

- 농업계와 기업계가 갖고 있는 역량 및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 농산물 구매·가공·수출·종자 등 상생협력사례 발굴(*15.8월 기준 29건)

- 종자, 에너지 관리 등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및 농업과 ICT·BT 융복합을 추진하고, 기술·자본·전문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정비

● **소득정책** 농가유형별 소득정책 및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원 확충

-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전문화 정책과 직접지불제도를 통한 소득지지 정책을 보완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
- 재해보험 확대, 직접지불제 강화 및 정책금리인하 등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기능 강화
-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가족·겸업·영세농 일자리 및 소득원을 확충



▲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3 박근혜정부 농정의 특징

- **복지정책**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 노력, 지역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도시 수준의 생활복지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역별 획일적 복지 공급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및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추진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촌의 여건에 맞게 복지서비스(농협, 우체국 등) 전달체계 개선
 - 고령화와 인구감소, 교통불편 등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은 목욕탕 등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확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14.8.12)

- **일하는 방식**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
 - **공감농정**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과 정책고객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정방향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협업농정** 관계부처, 양청(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 제고
 - **과학농정** 경영체 DB 구축, 재정투융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사업 구조조정 실시
 - **현장농정** '이동필의 1234',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과정을 확인·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문화 형성 유도
 - **창의농정** 오래된 불합리한 농정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 위임전결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방향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 추진

새정부 출범 초기에 농업계 내·외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농정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일부 전업농 위주의 돈 버는 농업에서 탈피, 농업과 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명확한 농정철학을 토대로 우리 농정의 지향점과 원칙, 우선순위,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한 방향을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유도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공간, 산업, 사람을 고려한 농정 추진

생명·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강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귀농·귀촌, 도시농업, 농촌관광, 농촌마을가꾸기 등을 통해 농업 생산자와 도시민이 함께 농촌이 가진 일터·쉼터·삶터로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산

- 농촌이란 공간 위에서 산업과 사람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농업경영체의 성격과 특성을 기초로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전면적 개방화 체제 진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체 DB 등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지역 및 경영체의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주산단지 조성,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추진

전업농은 규모화·전문화·ICT 융복합 등에 의한 첨단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중소농은 조직화·공동체농업·6차산업화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영세고령농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배려

-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자조·자립을 기반으로 도농상생 등 외부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협업농정 추진

지역이 스스로 자조·자립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깨끗한 농촌만들기 등 자발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

부족한 재원의 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복지(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및 수출·융복합산업(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 분야 등에서 협업 강화

객관적 통계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농정 추진

농업·농촌·식품 분야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경영체 DB 등을 구축하여 과학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구제역 및 AI 발생 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위치추적확인시스템(GPS)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 제고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및 해외협력 강화 등 글로벌 농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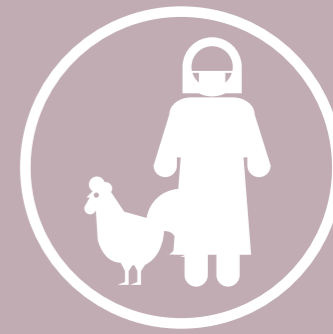
신뢰와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중장기적 농업·농촌발전을 유도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젝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남북농업협력 강화 추진

개도국에 대한 농업기술 전수 등 지원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ODA사업과 해외농업개발을 연계하는 등 국제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안정적 대응체계 마련

II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 성과와 과제

-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3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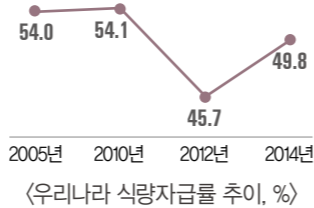
추진 배경

정부는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 일정 수준 성과

- ※ 경지정리(누계) : ('90) 577천ha → ('95) 690 → ('00) 802 → ('04까지 지원 후 중단) 826
- ※ 수리답률 : ('90) 73% → ('95)75 → ('00) 77 → ('10) 80 → ('12) 81 → ('13) 81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 빈번한 자연재해 등에 따른 식량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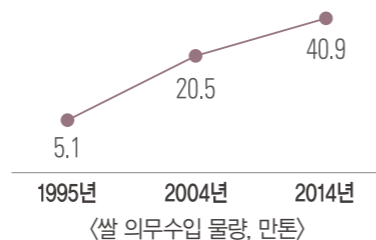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중에서 낮은 편이며,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본원적 기능인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주요 OECD국가의 식량자급률('13) : 미국 127%, 프랑스 120, 영국 60
 -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이 : ('05) 54.0% → ('10) 54.1 → ('12) 45.7 → ('14p) 49.8
 - 주요품목 자급률('14P) : 쌀 95.7%, 옥수수 4.2, 밀 1.1, 콩 35.9



- 그동안 쌀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 투자로 주식인 쌀은 어느 정도 자급기반을 마련(95.7%) 하였으나, 오히려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 하락 등 쌀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

- 쌀은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약 2만톤 정도를 늘려 수입하였으므로 쌀 재고에 큰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의 강한 반대와 사회적 갈등 우려 때문에 지난 어느 정부에서도 관세화 추진을 시도하지 못함

- ※ '95년도의 첫 쌀 의무수입 물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1%(51천톤)에 불과했으나, '14년도에는 소비량의 9%(409천톤)로 크게 증가됨
-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만톤 → ('04) 20.5 → ('14) 40.9



최근 축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축산업의 성장으로 사료곡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사료의 자급률이 극히 저조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위협 요인

- ※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원료 자급률 : ('12) 24.0% → ('14) 23.3

- 여름철 쌀 중심의 영농형태로 겨울철 답리작을 통한 맥류, 사료작물 등 이모작 재배 확대가 가능함에도 유희자원을 활용한 작물재배가 저조
 - ※ 겨울철 유희논에 보리, 밀, 사료작물 등 5%(47천ha) 재배 시 식량자급률 약 1.5%p 상승
- 우리나라는 산지 이용률이 낮으므로 축산과 연계한 산지축산 확대 시 사료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고급 축산물 공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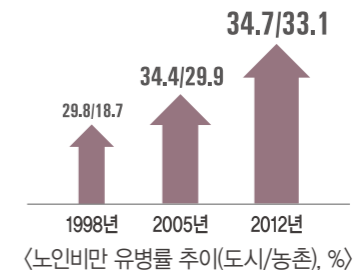
국민들의 식습관이 신선농산물보다는 패스트푸드, 간편식 등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기반이 매년 감소

- ※ 마늘/고추 재배면적(천ha) : ('05) 32/61 → ('10) 22/45 → ('12) 28/46 → ('14) 25/36(10년간 7/25 감)
- ※ 김치 수입(천톤) : ('05) 111 → ('10) 193 → ('12) 219 → ('14) 213('05 대비 91.8% 증)

- 국민의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도 지속 하락 추세이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의 절반 수준('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 ※ 수입농산물 보다 비싼 우리 농산물의 구입 의사(%) : ('09) 37.0 → ('12) 34.1 → ('14) 29.5
 -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 (한국) 36.1%, (일본) 63.0%

- 농촌지역 고령자는 영양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도시보다 높고, 비만도도 증가되어 도시와 별 차이가 없는 실정

- ※ 노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07~'10) : 동 지역 : 19% < 읍·면 지역 : 21%
- ※ 노인비만 유병률 추이(도시/농촌) : ('98) 29.8%/18.7% → ('05) 34.4/29.9 → ('12) 34.7/33.1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식량안보의 틀을 다지고,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3.3.22, 농림축산식품부 연두업무보고, 장관)

- 따라서, 영유아·미취학 어린이부터 건강한 식(食)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식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요층을 만들고, 도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농촌 고령자에 대해서는 식생활·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농산물은 기상영향을 많이 받고 저장성이 낮아 수급 및 가격 불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

※ '10년의 경우 배추가격이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 급등, 다음 날은 34% 급락 사례 발생

- 또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단기효과 위주의 인위적 수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모두 불신과 비난을 받는 상황
- 특히, TRQ·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정부의 임시처방적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비판 제기
-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가계 부담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상존
-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여 일정수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질적 난제로 존재
-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개선 적극 추진 필요

박근혜정부의 농정에서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농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 쌀 관세화 △ 식량 자급률 제고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 제공 △ 유통경로 간 경쟁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관리체계 구축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등을 추진

주요 정책

지난 20년간 농정의 최대 숙제였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14년 말)하고, 쌀 관세화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

농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쌀 관세화(513%)를 결정하고, 국회보고 후 '1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함으로써 향후 의무수입 증량 중단

※ 단,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등 부대 조건을 삭제하고 통보하였으나, WTO 검증이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밥쌀용 쌀 의무수입량은 탄력적으로 운용

- '13년부터 농업계와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하여 관세화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최소화



▲ 쌀 관세화 반대시위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 쌀 관세화가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14)
 - ※ 변동직불금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인상 : ('05~'12년산) 170,083원/80Kg → ('13~'17년산) 188,000(↑10.5%)
 - ※ 쌀 고정직불금 인상 : ('12) 70만원/ha → ('15) 100
 - ※ 이모작 직불금 인상 : ('14 신규) 40만원/ha → ('15) 50
 -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 ('12) 3만원/3.3㎡ → ('15) 3.5
 - ※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인하 : ('12) 3% → ('15) 2
 - ※ 구곡·신곡 및 수입산·국산 혼합유통·판매 금지('15)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유희농지를 활용하여 작물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제도개선

겨울철 논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모작 직불금을 신설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단기임대차 허용('15) 등 제도개선

- ※ 이모작 직불금 : ('14 신규도입) 40만원/ha → ('15) 50
- ※ 이모작 목적의 겨울농지 단기임대차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15.1월)

이모작으로 생산된 보리, 밀 등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SPC·아이쿱 생협·CJ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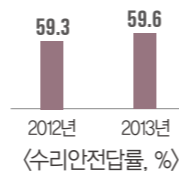
- 안정적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맥류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지속 확대
- ※ 맥류재배면적/생산량 : ('12) 31천ha/94천톤 → ('14) 38/112

축협 등이 간척지 유희농지를 활용해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강우로 가을파종이 어려웠던 농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봄 파종을 적극 추진

- ※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면적 : ('12) 1,355ha → ('15) 2,358
- ※ '15년 봄파종 확대로 맥류·조사료 재배면적 5,858ha(보리 1,624ha, 밀 691ha, 조사료 3,543ha) 추가 확보
- ※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 마련('13.5), '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5.4)

극심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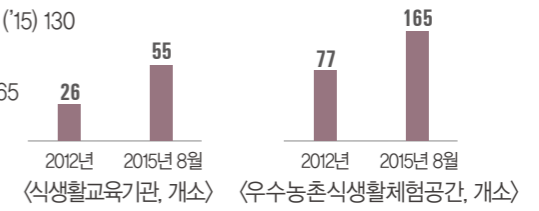
- ※ 10년 빈도 가뭄에도 물 걱정 없는 수리안전담발 : ('12) 59.3% → ('13) 59.6
-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12) 2,100억원 → ('15) 3,810(추경 760억원 포함)
- ※ 수리시설 개보수 : ('12) 2,600억원 → ('15) 8,322(추경 2,835억원 포함)



소비자의 건강한 식(食)문화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확대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영유아·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천과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 단위에서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어린이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운영 : ('12) 30개소 → ('15) 130
- ※ 식생활교육기관 : ('12) 26개소 → ('15.8) 55,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 ('12) 77개소 → ('15.8) 165
- ※ 소비자교육인원 : ('12) 5,200명 → ('14) 36,000
- ※ '아침밥먹기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
- ※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 수립('15.2)



농촌 고령자의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식재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식생활·건강개선사업' 추진

- '15년에는 공동체성이 우수하고, 경로당 또는 마을 회관에서 공동식사 및 교육이 가능한 경기 양평군 관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추진
- 사업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농산물을 기초로 한 식습관 교육 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



▲ 마을회관 공동식사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총괄조정, 올바른 식단 구성, 식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보건소 노인 신체기능 저하 방지, 노인성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건강강습, 신체기능측정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 농협, 풀무원, 낙농진흥회, 양계협회 등 농촌 노인의 영양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 중심의 농식품 기부 활동
- ※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간 연계, 노인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

소비자에게 농식품 안전 소비 식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정보누리(www.foodnuri.go.kr)' 운영('14.1) 및 모바일 앱 개발

※ '농식품정보누리' 접속자수 : ('12) 168,357명 → ('14) 378,312



농식품 정보누리 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범위 확대

※ 표시품목 : ('12) 12개 품목 → ('13이후) 16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공감 확산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유도

※ 목표 '24년까지 도시민의 10% 수준 도시농업 참여('14년 : 108만명 → '24년 : 480)

※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13.5),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마련('15.3)

-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확대
- 관계부처·지자체·국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 붐 조성
-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도시농업단체와 농업인단체의 협업 체계 강화
- 부산('15.3), 서울('15.6) 등 대도시에서의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도시농업 박람회

직거래, 공영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활성화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생태계 조성

ICT 기술을 활용한 포스몰(POS-Mall),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개설('14.9) 및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 개국('15.7) 등 다양한 유통모델 도입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 ('12) 11,146억원 → ('14) 22,131(수산·가공품 포함)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로컬푸드 매장 : ('12) 3개소 → ('15.8) 9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5.6)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수립('13.5)

산지와 소비지 간 연계를 위해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매 이외에도 정가·수익매매 거래 활성화

- 도매조직 중심의 유통 확대를 위해 안성·밀양 등에 물류센터 건립
 - ※ 안성 물류센터 유통 실적 : ('12) 9,596억원 → ('13) 10,047 → ('14) 10,070 → ('15.8) 7,922(전년 동기 대비 12.2% 증)
-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 정가·수익매매 거래 비중 확대
 - ※ 정가·수익매매 시장사용료 인하(0.5% → 0.3), 시설사용료 인하(5% → 0)
 - ※ 정가·수익매매 비중 : ('12) 8.9% → ('14) 14.1 → ('15.5) 18.4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 '1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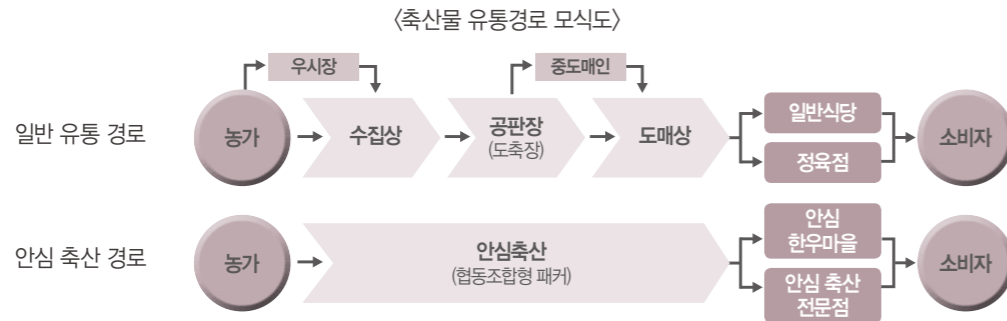


공영홈쇼핑 개국식, '15.7.14

“농산물 수급은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 대통령)

축산물은 협동조합형 패커를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6~7단계 → 3단계)하고, 기존 유통채널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유통 효율화 제고

- 패커 유통 점유율 : (‘12) 소 10.9%/ 돼지 4.7% → (‘15.6) 27.3/ 19.1
- ※ 패커(일반형 유통) :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을 한 조직내에서 수행



정부주도로 물가안정 목적의 수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자·소비자·유통 및 학계전문가 등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13.4)’ 및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13.6)’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수급관리체계 구축

- ※ (‘13.6) 양돈 공급과잉으로 ‘13.3월 돼지 도매가격은 두당 경영비 28만원보다도 낮은 24만원으로 형성되었으나, 축산인의 자율적 모돈 감축(13만두) 조치로 ‘13.12월의 가격은 두당 33만원으로 회복
- ※ (‘14.2) AI 발생시 업계의 자율적 비축으로(‘14.3, 111만 수)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급락 차단
육계 가격 : (‘14.1) 1,588원/kg → (‘14.2) 1,473 → (‘14.3) 1,676 → (‘14.4) 1,966

- ※ (‘14.3) 양파 가격하락 시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 추진으로 8월상순 가격 안정
- ※ (‘15.5) 배추 가격상승 시 비축물량 방출, 출하조절 등으로 6월중순 가격 안정
- ※ (‘15.6) ‘15년 원유가격 인상요인(15원/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산자·수요자 등이 참석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어려운 국민경제 및 원유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동결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낙농진흥회 이사회

가격 변동률이 큰 주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한 관리

- ※ 가격안정대 : 최근 5개년간 월별 도매가격의 중앙값에서 표준편차의 1/20내의 상한 및 하한가격 범위내
-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수급위기 단계별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의 역할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

할당관세 등을 통한 물가안정 목적의 임시처방적 수입관리 조치 자제

- 가뭄으로 인해 마늘·양파 생산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TRQ 도입과 증량분 탄력적 운용으로 수급 조절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및 사료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희산지를 활용한 산지생태축산을 한국형 축산모델의 하나로 육성(산림청·농촌진흥청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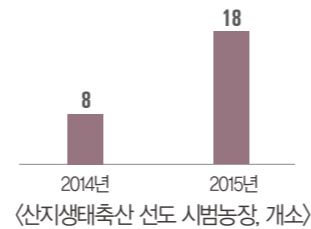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절차를 허가제 → 신고제로 간소화하고 방목허용면적을 3ha → 5ha로 확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절차 및 면적 개선 내용〉

기 존	산지구분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 : 신고 허용면적 : 3ha 	준보전산지 (전체 산지면적의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5ha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 : 까다로운 허가 허용면적 : 3ha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전체 산지면적의 51%)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을 선정하고, 운영 사례집 및 매뉴얼 제작·보급

- ※ 산지생태축산 선도 시범농장 : ('14) 8개소 → ('15) 18
- ※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3.7)



산지유형에 따른 산지양계모델 개발 등 산지축산 R&D 본격 추진

- ※ 산림청은 밤나무·대추재배지·고로쇠조림지 등을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 연구중('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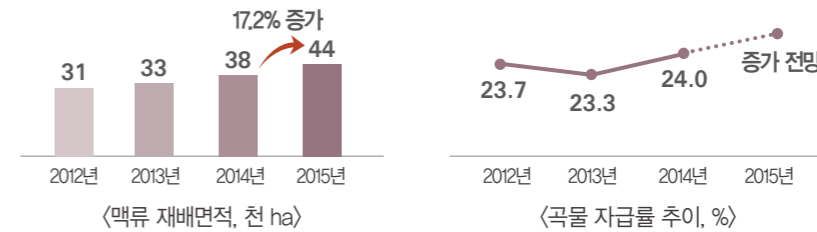
산지를 활용한 양계 모습

성과

지난 20년간 농정 최대의 숙제였던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추진으로 쌀 산업 기반 유지

- 쌀 관세화 조치로 의무수입량의 추가 증량을 중단시켜 국내 쌀산업 보호
 - ※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14년 쌀 의무수입량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8,700톤이며, 쌀 관세화('15.1.1) 시행으로 추가적인 의무 수입 증량 중단

유희자원을 활용한 사료작물재배 및 답리작 확대 등의 노력으로 곡물 자급률이 증가 추세로 전환



- ※ 답리작 : 겨울철 논에 보리, 밀, 조사료 등을 이모작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원을 확대하고, 곡물자급률 제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食)문화 형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 농촌 고령자의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도 연계된 다양한 시도 추진



도시농업 확산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농간 파트너십 강화

-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어 농촌관광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
- 농업계는 도시농업이 일반농업과 결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였으며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전국적 붐 조성
 - ※ 도시농업 지역협의체 구성(85개 지자체) 및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36개 지자체)
 -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농업 홍보, 나눔행사 등 전국적 확산



▲ 국회 생생텃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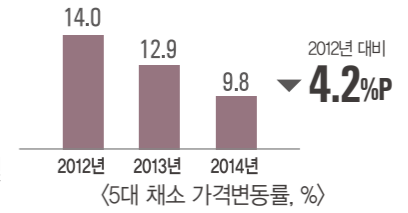
농축산물의 새로운 유통모델 확산 및 유통비용 절감

-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비중 확대 : ('12) 8.4% → ('13) 10.9 → ('14) 14.4
 - ※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산 및 유통 계열화 등
- 협동조합형 패커의 유통 점유율 증가 : ('12) 소 10.9%/돼지 4.7% → ('14) 24.9/16.9
 - ※ 패커유통에 의한 유통단계 축소로 소 8.7%, 돼지 6.0%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14 기준 1,593억원 절감 추정)
- 유통비용 절감 : ('12) 2,919억원 → ('13) 4,291 → ('14) 6,241(전년 대비 4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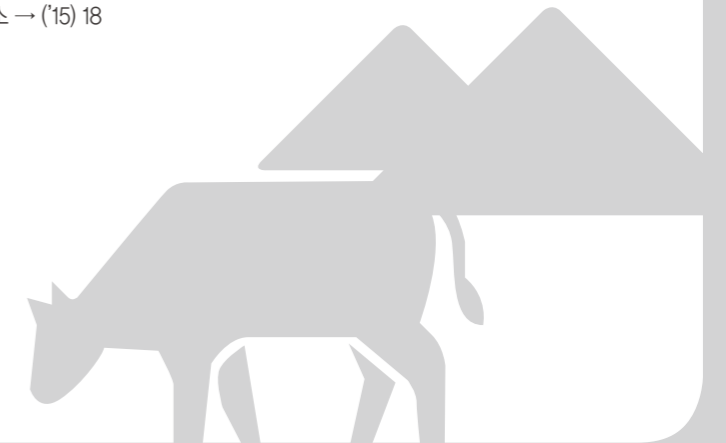
참여와 협의에 의한 자율·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 대폭 완화

-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 진폭이 크게 감소되어 물가안정에 기여
 -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12) 14.0 → ('13) 12.9 → ('14) 9.8 ('12년 대비 4.2%p 감)
- 축산물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급불안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가격안정 및 재정비용 절감
 - ※ (돼지) '13년 민간 자율 모든 감축(13만두)으로 가격 조기 정상화 : ('13.3) 24만원/두 → ('13.12) 33(경영비 28)
 - ※ (닭) '14년 SI 발생 시 업계 자율비축('14.5, 111만수)으로 '08년 SI 발생 시 지원한 수급대책(수매) 대비 556억원 예산 절감
 - ※ (원유) '15년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자율 동결로 6억원 예산절감 (43천톤, 리터당 15원)
- 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임시처방적 수입 조치는 최대한 자제하여 농산물 수급정책의 신뢰성 제고
 - ※ 박근혜정부 출범('13.2.25) 이후 가격이 평년대비 56%·10% 올랐던('15.6.19기준) 양파·마늘 이외에는 수급안정을 위해 TRQ를 증량한 농산물은 없음



한국형 친환경 축산 모델로서의 산지생태축산 확산 기반 마련

- ※ 산지생태축산시범농장 선정 : ('14) 8개소 → ('15) 18



향후 과제

쌀 관세율 513% 등 쌀 양허표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되도록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등 노력 요구

- 한편,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국내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영농기술개발 노력 등을 적극 추진 필요

지금까지는 쌀 위주의 지원으로 밭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주산지 중심으로 밭농업 인프라를 확대하여 농산물 생산·수급 조절 필요

※ 쌀 관련 예산 : ('05) 3.5조원(농림예산 대비 21.7%) → ('14) 4(29.4)

※ 기반정비율('14) : 논 77%(720/934천ha), 밭 14%(106/757천ha)

- 밭에 대한 기반정비를 강화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파종, 이식, 수확용 농기계 개발·보급 확대



- 밭작물 및 지역특화품목으로의 연구개발과 사업예산 재편성, 농지제도 개선, 관련기관 역할 조정 등 필요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종합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이모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 신품종개발 보급 및 작부체계별 매뉴얼 보급
- 산지, 간척지, 기타 유휴지의 사료작물 재배성과 분석 및 재배 매뉴얼 보급 등

소비자에 대한 식생활소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의 범위와 소재를 다양화하여 도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 소비자 참여형 식생활소비 정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의 범위를 생활원에·원예치료 등까지 확대하고, 양봉·곤충·소(小)동물 등 소재 다양화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영양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지역으로도 확대

- 관련기관(단체)의 참여 확대 및 기관(단체)간 역할 분담 체계화, 기관간 협업에 의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새로운 농식품 유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유통 활성화, 유통 시설 운영의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

신유통모델 활성화	인프라 운영 효율화	생산-유통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몰 등 ICT를 활용한(빅데이터) 유통 확대 및 산지 유통 기능 강화 • 공영 홈쇼핑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수익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의 거래형태 관련 논란 조기 해소 • 물류센터 집배송·상품화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규모화, 품질 표준화 유도 • 지역농협, APC 활성화 등 산지 중심의 농협경제사업 확대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 지자체의 자율적 수급 조절 참여 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등 추진

농업관측 고도화	지자체 자율 수급조절	계약재배 등 수급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측과 통계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수급조절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청(R&D), 농협 (현장조사) 등 협업 작황 정보와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연계해 정확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산지 중심의 품목별 협업체, 발공동영역체 육성 지자체 주도로 지역특화품목의 수급조절 강화 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재배를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축 상시화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품목자조금 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산지축산, 동물복지 등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생태축산 모델 확립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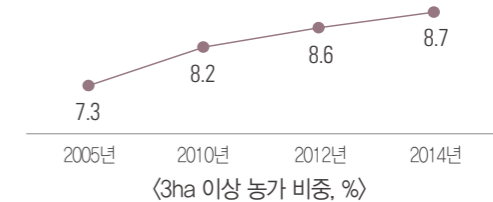
- 임간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를 일시 사용신고로 완화
- 산지양계 모델 개발 연구 확대* 및 초지조성 이용기술 개발**
 - ※ ('14) 밤나무재배지 → ('15) 고로쇠조림지, 대추재배지 등으로 확대
 - ※※ '한국형 산지초지 조성 및 이용기술개발' 등 11개 과제 30개 세부연구 추진('14~)



추진 배경

'90년대 이후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규모화, 전업농 육성, 농업 인프라 확충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는 등 일정 수준 성과

※ 3ha 이상 농가 수 및 비중
 : ('95) 70천호/4.7% → ('05) 93/7.3 → ('10) 97/8.2
 → ('12) 99/8.6 → ('14) 9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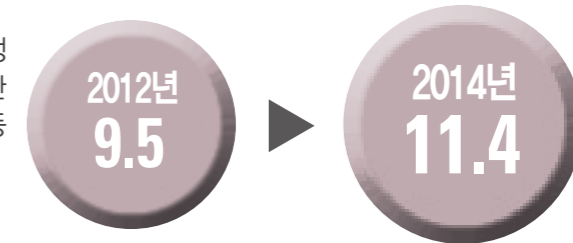


그러나, 농가당 평균 경영규모는 농업강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개별농가 단위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한계

※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13) : 1.5ha
 ※ 농업강국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 미국 176.9ha('12), 네덜란드 25.9('10), 스위스 17.8('10), 뉴질랜드 7.9('10, 초지 제외), 일본 1.8('13)

- 농업의 규모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농간 양극화는 농촌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

※ 소득상위 20%농가와 하위 20%농가의 농업소득격차 : ('12) 9.5배 → ('14) 11.4



〈소득상위 20%농가와 하위 20%농가간의 소득격차, 배〉

- 소규모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조직화·규모화하여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확대하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09년부터 추진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생산비 절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들녘경영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노동집약적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재배로는 경쟁력 확보가 곤란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농업으로 육성 가능
 - ※ ICT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폰과 PC로 언제 어디서나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고급화 등이 가능하여 경쟁력 제고에 유리
- 주산지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ICT 융·복합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농식품분야와 융·복합하는 ICT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소비패턴의 고급화, 환경·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감안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입산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선결 과제

- 그동안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등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2) 67.8점 → ('14) 61.6(6.2점 감)
-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오히려 감소
 -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 ('10) 194천ha → ('12) 164 → ('14) 83
- 따라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 마련이 핵심과제로 대두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고, 특히 한·중 FTA는 농업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한·칠레 FTA 이후 '12년까지 8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도 발효·타결('13~'15)

- 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 필요
- FTA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마케팅 강화 및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 필요

식품·외식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나, 국산원료 이용 비율이 31.2%('13)에 불과하고, 쌀을 포함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 ※ '13년 식품 및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약 157조원이며, 연평균 6% 성장
- ※ 1인당 쌀소비량 : ('84) 130.1kg → ('03) 83.2 → ('13) 67.2 → ('14) 65.1
-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식품·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 가공 기술 개발 강화 및 식품 가공업체 육성, 규제 개선 등 추진 필요
- 외식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시 대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

국내 농자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농자재산업의 수출 토대 구축 필요

- ※ 호당평균 농업 경영비 증가추이 : ('10) 1,712만원 → ('12) 1,846 → ('13) 2,061 → ('14) 2,188
- 경영비 부담이 큰 농기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 종자로열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강화하고, 종자기업의 품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 농업인의 고품질 종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파의 경우 '13년의 수입종자 사용 비중이 85%에 달함

FTA 등 개방화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 조직화·규모화 촉진 △ ICT 등 첨단 스마트팜 확산 △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 △ 농식품 수출확대 및 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 식품·외식산업 육성 △ 농자재산업 육성 등을 추진

“농업이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결합한 첨단융복합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15.3.27, 농축수산단체장 오찬간담회, 대통령)

주요 정책

소규모 개별농가단위 경영구조의 한계 극복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들녘경영체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촉진

들녘경영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 들녘경영체의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50ha → 400ha로 확대(‘15.2)
- 지원대상 장비는 3종(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 공동 영농장비 모두가 가능하도록 개선(‘15.1)
- 들녘경영체 참여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분산된 농지도 공동영농이 가능하면 참여를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정시설을 보유할 경우 RPC 연계의무도 면제

〈들녘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 존		개 선
50ha ·규모화 한계	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면적	400ha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 12.)
50ha 이상 집단화된 경작지		산간지역은 2~3개로 분리되어도 허용
공동영농장비 3종 지원 ·단순 농작업 공동체	들녘경영체 지원요건	공동영농장비 모두 지원

들녘경영체 규모화 촉진으로 경쟁력 강화
200ha 규모 들녘경영체 3천개 육성시 쌀 농업의 60~70% 담당

사업시행지침 개정(‘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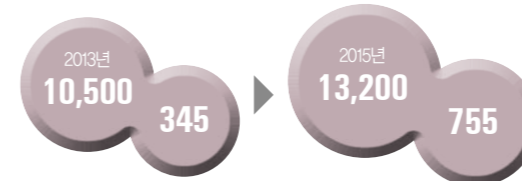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공동농업경영의 개념, 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지원내용 등 포함

시설원예 및 축산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 팜 확산(‘17년까지 스마트 온실 4천ha, 축사 7백호 육성)

시설원예에는 수출·고소득 품목(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중심으로 첨단스마트 팜 지원 확대

- 자동개폐·온습도·양액관리시설 등 ICT융복합시설 설치 지원 등
-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수립(‘13.8)
- ※ 원예시설 현대화/스마트팜(누계) : (‘13) 10,500ha/345ha → (‘15) 13,200/755



〈원예시설 현대화/스마트팜 면적(누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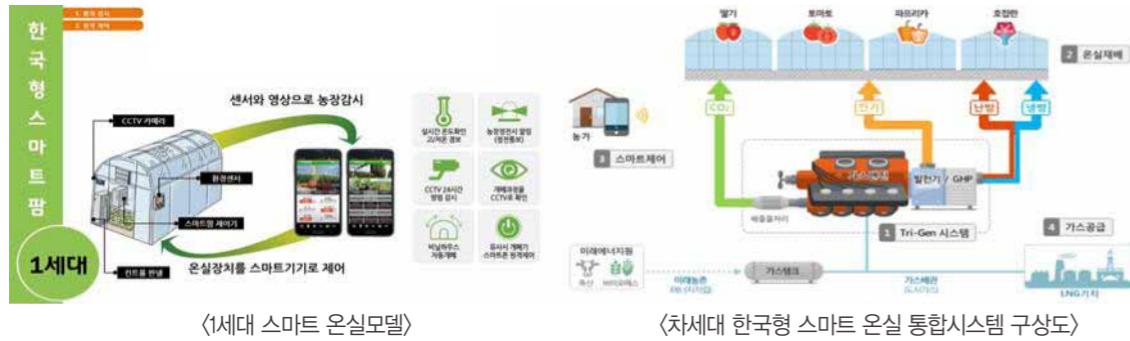
▲ 스마트 팜 개념도

축산은 ICT 기술을 접목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돈 등에 적용된 사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양계 및 소 등으로 대상 확대

※ (‘14신규) 양돈 30호 → (‘15) 양돈·양계 120

우리나라의 기후와 온실 재배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개발(첨단수출형, 연동복합형, 단동간편형 등) 및 농가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 강화

- 참외·수박농가를 대상으로 단동형 스마트온실 표준모델을 개발(‘15.6)하고, 연동형 스마트온실 모델개발 등도 지속 추진
-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및 시설원예 환경가이드라인 자료집 배포(‘15.2)



-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등을 위해 권역별 현장지원센터('14 : 1개소 → '15 : 8)를 설치·운영하고 현장 실습형 교육농장을 지속 확대('14 : 3개소 → '15 : 8)
- ICT를 활용한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토마토대학, '15.7~11)을 운영하고,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및 방문연수와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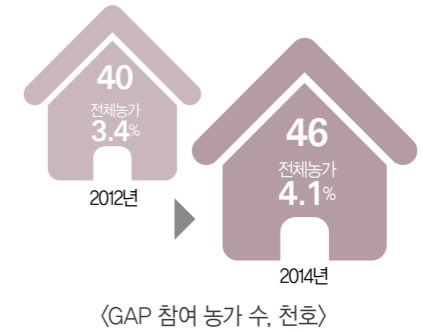
소비패턴의 고급화, 환경·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철저한 친환경인증관리 추진

- 인증과정에서 민간인증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중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민간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신설 및 인증기관 지정요건 강화,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도입('15년) 등으로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유기농업 자재의 품질검사 확대('12 : 1,233품목 중 60품목 → '15.8 : 1,237품목 중 936품목)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확충

-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14 : 5년 → '15 : 8)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속 지원
 -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 ('12) 63천ha → ('15) 77
- 권역별로 설치·운영중인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를 활용하는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잡초관리 등 재배기술 개발·보급
- 농가의 GAP(농산물우수관리)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 ※ GAP 인증신청 통합처리 및 구비서류 간소화(12종→3), 인증처리 기간 대폭 단축(126일 → 42)
 - ※ GAP 참여 농가 : ('12) 40천호(전체농가 3.4%) → ('14) 46(4.1)
 - ※ 'GAP농산물 확산 계획' 수립('14.12)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으로 친환경축산 여건 조성
 -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15.6) : 유기(95호), 동물복지(65), 무항생제(7,556), 환경친화농장(8)
 - ※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 ('12) 85개소 → ('14) 108
 -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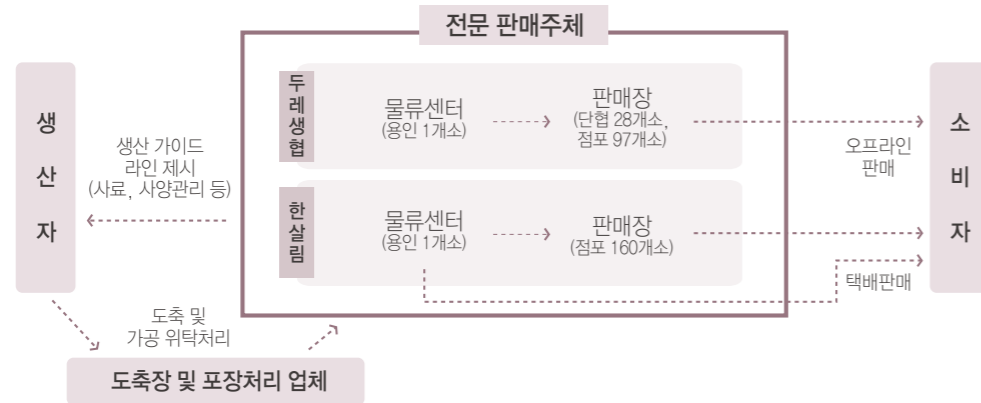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판매 채널을 확대·구축

- 친환경농산물 유통기업과 친환경단지간 연계를 확대하고, 생협·직거래·로컬푸드 매장 등 유통·판매 채널을 다양화
 - ※ 소비자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14 : 300억원 → '15 : 400) 확대
 - ※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방안' 수립('13.9)
-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 구축



“FTA 등 개방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15.1.12,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 대통령)

-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가 참여 확대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세계 유기농 엑스포(충북 괴산, ’15.9), <전문 판매주체를 통한 친환경축산물 공급체계 예시>



친환경 6차산업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축산 페스티벌 개최(’15.10) 등 추진

중국, 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약 180회의 전문가 회의·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에 대해서도 이해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 한·중 FTA는 초민감 품목과 민감품목 비중(63.4%)이 어느 FTA보다 높음
 ※ 기체결 FTA의 초민감품목 및 민감품목 비중 : 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

농가피해 보전책을 강화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효기준을 개선하여 한·EU FTA발효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신규 도입 등 추진

- ※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효기준
 가격요건 :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90% 이하
 총수입량 요건 :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수입량 보다 증가
 수입량요건 : 해당연도 상대국 수입량이 직전 5년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수입량 보다 증가

FTA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증대, 경영안정, 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전략 및 대책마련

- ※ 농가소득, 경영안정을 위해 10년간(’16~’25) 총 1,595억 원 규모의 한·중 FTA 대책 마련(’15.6)
- ※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10년간(’15~’24) 2.6조원 규모의 연영방 FTA 대책 마련(’14.9, ’15.6)

FTA를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할랄시장, 동남아 등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 및 진출 등 적극 공략

중국·할랄·아세안 등 새로운 거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홍보 및 정보제공 등 강화

-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 中 온라인 쇼핑몰 ‘1호점’(’13.10), ‘알리바바’(’14.10), ‘티몰’(’15.5)과 연태시 ‘따웨이청 백화점’(’15.2)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 국내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사랑채, 인사동 전통주 갤러리, 공항 등에 한국식품 홍보·판매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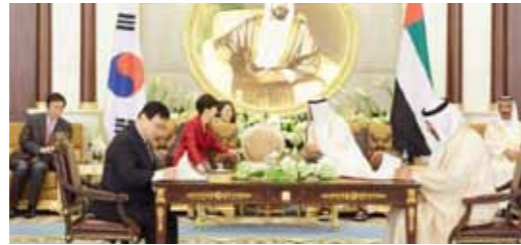
“우리 농업도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유망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합니다.”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 대통령)

“대기업의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 대통령)

- 중화권·아세안 등의 국가는 한류 문화와 연계하여 K-Food Fair를 개최(‘13년 4개국 5회, ‘14년 4개국 7회) 하는 등 국가별 식품·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홍보·판촉 추진
- 민간의 할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를 체결(‘15.3.5)하고, 민·관 할랄식품 협의체(‘15.3~ , 7회)를 통해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15.6.30)’ 수립·추진
 - ※ 할랄인증 업체수 : (‘14년) 133개소 → (‘15.6월말) 148(11.3% 증)
 - ※ 품목수 : (‘14년) 404개 → (‘15.6월말) 488(20.8% 증)
-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및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등 추진
 - ※ (정보제공) 中 권역별 시장정보(‘14.3), 동남아 6개국 시장정보(‘14.4), 중남미 2개국 시장정보(‘14.11), 中 온라인 마케팅 전략(‘14.12), 주요 7개국 소비동향 및 트렌드(‘15.1), 쌀 수출 핸드북(‘15.1), 중동지역 할랄시장 진출 전략 발간·배포(‘14.9) 등
 - ※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13년 189회, ‘14년 199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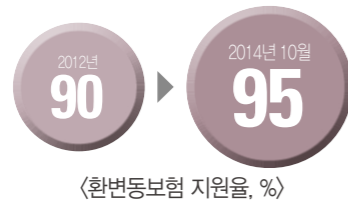
▲ 상해 K-Food Fair, ‘14.6.28



▲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 ‘15.3.5

‘농수산물 수출개척 협의회’ 운영(‘14.1~‘15.8, 6회) 등을 통해 수출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소

- 환율변동에 의한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도입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 ※ 환변동보험 도입(‘14.1) 및 환변동보험 지원을 상향(90% → 95, ‘14.10)
 - ※ 수출보험 지원한도 상향(1천만원 → 3, ‘14.8)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검역·위생기준 등 각 국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등 추진
 - ※ 삼계탕(미국), 우유·포도(중국), 유제품(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품목 검역협상 타결(‘13년 7개, ‘14년 12개, ‘15.6월 8개 품목)로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 기회 확대
 - ※ 인삼 CODEX 세계 식품규격 채택(‘15.7), 중국 김치 위생기준 개정 추진
 - ※ 정부 주도 하에 수출업체의 ‘對日 수입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14년~) 등을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수출 유관 기업과 시설을 집적하고 R&D 및 수출 중심 형태로 운영되도록 단지조성 지원
 - ※ 국내외 109개 투자 양해각서 체결, 국내 5개 기업 분양계약 체결, 외국 6개 기업 투자 신고(‘14.5~‘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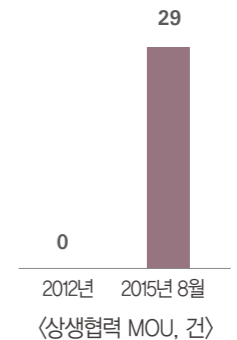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14.11.24

농업계와 기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역량과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 상생협력추진본부(대한상공회의소, ‘14.9) 중심으로 농산물 구매·가공·수출·종자 등 상생협력 사례 발굴(‘15.8 기준 29건) 및 성과 확산



▲ 농식품부-상공회의소 농식품 수출 및 소비확대를 위한 MOU 체결, ‘14.8.20



“과학기술을 토대로한 농식품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14.12.16,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인 네덜란드의 농업처럼 우리 농업도
R&D 투자를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4.2.24,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업무보고, 대통령)

국산 농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요창출, 농업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식품 및 외식산업의 육성

식품 및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식품산업·안전·국민건강을 포괄하는 신식품정책*(‘14.3) 수립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 7대분야 35개 과제 추진
-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쌀 가공산업 5개년 계획’ 수립(‘14.10)
- ‘한식정책 발전방안(‘14.1)’,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15.2)’,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15.4)’ 등을 통해 한식·외식산업의 정책적 기반 구축



2013 대한민국 김치문화 축제, '1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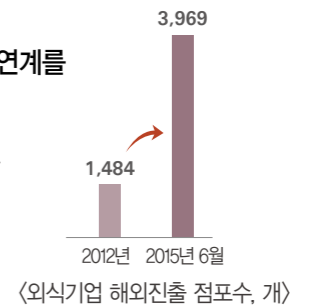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식품표준화 등 추진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쌀 가공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 확대
※ 시설·운영자금 : 금리 3% → 2.5(‘15.8.1)
※ 마케팅 지원사업 : 미라클 프로젝트, 스타 상품 만들기 홍보 지원, 쌀 가공품 판매망 확충 지원 등
- 정육점에서도 소세지 등 축산가공품 제조·판매(식육즉석가공판매업)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13.5),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13.10)
※ 창업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15.7), 메즈거라이 컨설팅(매년 20개소) 등 지원 추진

- 김치(‘01)에 이어 인삼제품의 CODEX 세계규격화 승인(‘15.7)
※ 향후, 고추장·된장도 규격화 추진 예정
- 원료농산물 정보DB 구축(‘15.6) 및 용도별 쌀 품종 개발*(계속)
※ ‘15년 기준, 국가품종목록 등재 241개 벼 품종 중 가공기능성 등 특수용도 품종 68개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 ※ 외식종합자금 금리 인하(3~4% → 1.8~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15말 → ‘16말)
- ※ 외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 (‘12) 1,484개 → (‘15.6) 3,969



종자·농기계 등 농자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

수입대체 품종개발 및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품종 개발 강화(‘13.7~)
※ 주요품목 : (수출)고추, 배추, 무, 수박, 벼, 감자, 옥수수, (수입대체)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파프리카, 백합, 감귤, 돼지, 닭
- ※ 종자 수출액 및 목표 : (‘13.7~‘15.5) 802만불 → (‘21목표) 20,000
-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을 통한 로열티 절감 품종 개발·보급
※ 대상품목 : 딸기, 장미, 국화, 난, 카네이션, 거베라, 참다래, 버섯, 약용작물 등
- 종자기업의 품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전북 김제시에 ‘16년 완공 목표로 54.2ha규모(20개 기업 입주)의 단지 조성중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제고

- ※ 농기계 임대사업소 : ('12) 251개소 → ('13) 294 → ('15) 379
- ※ 농기계 사용일수/대 : ('12) 8.3일 → ('13) 9.5 → ('14) 10.5
- ※ 밭농업 기계화율 : ('12) 55.7% → ('14) 56.3
- ※ 논농업 기계화율 : ('12) 94.1% → ('14) 97.8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14.10)

농기계 R&D지원 등으로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자재 가격 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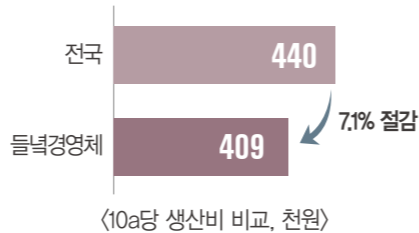
- ※ 농기계 R&D투자액 : ('12) 98억원 → ('13) 72 → ('15) 79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발전소 온배수, 소각장 등의 폐열 활용('15 : 77억원), 지중저수열 냉난방('15 : 8.8억원/ha) 등의 에너지 절감형 시설 지원

성과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산 및 생산비 절감 효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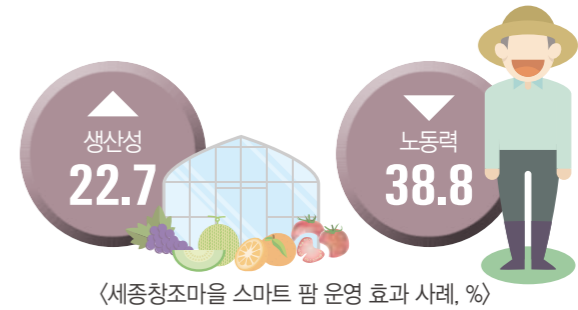
- 총개수/면적 : ('12) 118개/24천ha → ('13) 132/27 → ('14) 158/32 → ('15) 224/51
- ※ 공동 농작업을 통해 10a당 전국평균 대비 생산비 7.1% 절감 효과('14년)



- 조직화·규모화의 진전에 따른 경영구조개선으로 논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적 경영 형태로 발전
- ※ 자급률이 낮은 보리·밀 등 동계작물 이모작 추진, 쌀 생산을 줄이고 논콩·조사료 등 생산, 1차 산물만 생산하던 경영체가 가공·체험 등으로 경영범위 확대

스마트 팜 효과 가시화 (생산성 증가, 노동력 절감, 안전 강화)

- 세종 창조마을 스마트 팜(딸기)
 - ※ 생산량 22.7% 증가, 노동력 38.8% 절감, 지능형 영상보안을 통한 도난방지·안전강화
- 장수 지능형 양돈 관리(돼지)
 - ※ MSY : (전) 15.2두 → (후)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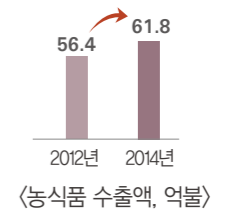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망 확충 등에 따라 소비확대 기반 마련

- 민간인증기관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 민간인증기관 취소 :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14.6 : 3,821건 → '15.6 : 1,791)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확대 : ('12) 4,658개소 → ('14) 4,954 → ('15계획) 5,300
 - ※ 롯데슈퍼-친환경단체 직거래 MOU체결('15.5) → 유기농매장 확대(109개소) → 생산자 판로확대 등 선순환 구조형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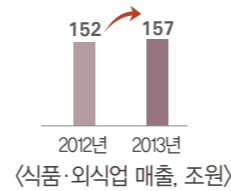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 증가(9~27%)

- '12~'14기간 중 농식품 수출은 연평균 4.8%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전체 평균 2.3%보다 높은 수준
- ※ 농식품 수출액 : ('12) 56.4억불 → ('14) 61.8(9.5% 증)



고부가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에 기여

- 식품·외식산업 매출 규모 확대 : ('12) 152조원 → ('13) 157
- 쌀 가공제품 다양화로 1인당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 : ('05) 4.1kg → ('10) 6.9 → ('14) 8.9



쌀 케익



쌀 아이스크림



쌀 과자

◀ 다양한 쌀 가공제품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식육즉석가공판매 확대 추이 : ('13) 0개소 → ('14.10) 4,818

〈한국형 메쯔거라이 확산모델 : 어반 나이프(Urban Knife)〉

지하 : 제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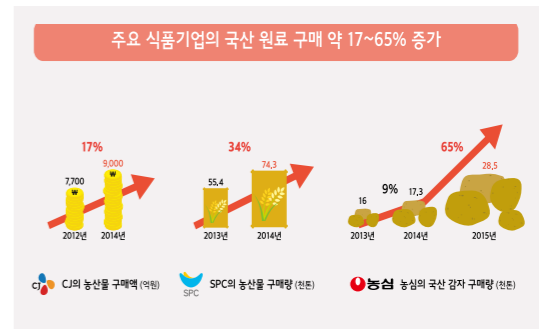
1층 : 독일식 정육점
'어반나이프 메쯔거라이'

2층 : 스테이크 식당
'어반나이프 그릴'

3층 : 소세지 매장·식당
'어반나이프 델리레스토랑'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및 국산 식재료 소비증가
※ 평균 매출액 : ('12) 124억원 → ('13) 155(25.0% 증)
※ 국산 식재료 평균 구매액 : ('12) 11.4억원 → ('13) 27.9(144.7% 증)
- 국내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국내산 식재료 수출 증가
※ 해외진출 점포수 : ('12) 1,484 → ('15.6) 3,969(167.5% 증)
※ 국산 식재료 수출(추정치) : ('13 신규조사) 202억원 → ('14) 247(22.2% 증)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으로 주요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구매액이 약 17%~65% 증가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 ('12) 29.7% → ('13) 31.2



국산 신제품 개발 및 농기계 공동이용 등을 통해 경영비용 절감

-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의 국산제품 개발로 농업인 로열티 지불액 절감
※ 농업인 로열티 지불액 : ('12) 176억원 → ('14) 136(23% 감)
※ 딸기 품종의 경우 국산화율 : ('12) 74.5% → ('14) 86.1
- 골든시드 프로젝트 2년간 105개 품종을 개발, 8백만달러 수출 및 56억원 수입대체
※ (사례) 권농종묘의 '권농빨강 2호'는 유럽시장에서 일반배추의 10배 가격(3천달러/kg)으로 판매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발농업기계화 촉진

향후 과제

들녘경영체 내 소규모 개별경영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과수·채소 등 밭작물 주산지에 대해서 조직화·규모화도 추진

-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등에 의한 규모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별경영 구조를 탈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 논 총 재배면적 / 호당 재배면적('14) : (전체평균) 82만ha/1.21ha, (전업농) 42만ha/6.0ha

● 들녘경영체 등을 통한 조직화·규모화로 중소농의 경쟁력 강화 필요



- (현행) 쌀 단작, 단순 시설·장비 지원 → (개선) 사업 다각화 및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
- 잉여 자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추진('16년 신규 예산사업 추진)
-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등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사회에 자본 투입·산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모델 마련 필요

스마트 팜과 창조마을을 확산하고, 현장애로 해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R&D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 팜 확대 및 창조마을 확산을 위한 지원방향〉

국산기자재 표준화 미흡, 시설 투자비용 부담 * 첨단온실 신축: 7.5~30억 원/ha	▶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보급, 현장지원단 및 정책지원 확대 * 단동형(참외·수박)·연동형(딸기) 개발('15, '12), 수출첨단형(파프리카, '16) 개발 * 원예 ICT연계시설 비중 확대(60%) 및 축종 확대(양돈 → 양계·낙농), 모태펀드 홍보
창조마을에 대한 현장의 관심 및 이해도 저조	▶ 지역개발사업 메뉴에 포함되도록 사업지침 개정('15) *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설명회 개최
기술 중심의 제한적 SNS 컨설팅	▶ 가격, 수급 등 정보교류, 정책홍보 및 학습의 장으로 확대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aT,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 운영

〈현장문제 해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R&D 지원체계 구축〉

현장문제 해결,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 미흡	▶ 현장설명회, SNS, 홈페이지 등 기술수요 접수채널 다양화 ▶ 과제 선정 시 전문투자자 참여, 결과물의 시장가치평가 의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부족	▶ '상부상조 플랫폼' 구축하여 연구기관 기자재 등 공동 활용 ▶ 기술, 시제품 등을 위탁 개발하는 R&D 확대('15:14억원 → '16:22억원)
우수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체계 미흡	▶ 경진대회 정례화 →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집중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소)와 농업 창업 기관(46개소) 간 연계망 구축 * 6차산업 컨설팅, 기술, 자금, 대기업 유통망 등 원스톱 지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노력

- 그동안 추진했던 친환경농산물 신뢰 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강구
-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식품 유통망을 지속 확충할 필요

중국·할랄 등 신시장 개척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 엔저 등의 영향으로 대 일본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아세안, 할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검역, 통관, 할랄인증 등 수출기업 및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파악·해소



3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 (중국) 라벨링 표시 강화('13.6), (홍콩)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제정('14.8), (인도네시아) 할랄식품인증 의무화('19) 등
- ※ 주요 할랄시장 4개국 수출 매뉴얼 제작·배포('15.12),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및 본격 가동('17~)

-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식품 외식산업 분야 규제 발굴(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협업) 강화

- ※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시설기준 마련, 국내 할랄인증 표시제품 유통 허용 등

식품·외식산업과의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기반구축 및 농업계와의 연계 강화

- ※ 식품원료 농산물 통합정보 DB 구축,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도입('15) 등



추진 배경

'90년대 이후 농가소득정책은 직불제 등을 활용한 농업소득의 보완과 농산물 가공·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

- 농가소득 하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불금 확대 및 다양한 직불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영농규모가 작은 중소농의 소득증대 기여 정도는 제한적이고, 국가 재정여건 등으로 직불제 확대도 한계

- ※ 직불제 종류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 등

- 농촌지역 가공산업 활성화 및 2·3차 산업 유치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확대해 왔으나, 체계적인 농외 소득원 창출에는 한계

- ※ 농외소득 : ('95) 6,931천원 → ('10) 12,946 → ('12) 13,585 → ('14) 14,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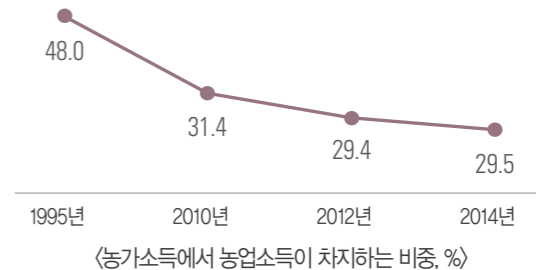
다각적 소득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자재·에너지 비용 등의 증가로 농가소득 및 경영여건이 악화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축소되고, 농·농간 소득 양극화 및 도·농간 소득 격차도 확대

- ※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 : ('95) 48.0% → ('10) 31.4 → ('12) 29.4 → ('14) 29.5

- ※ 농업소득 : ('95) 10,469천원 → ('10) 10,098 → ('12) 9,127 → ('14) 10,303

- ※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 : ('95) 96.0 → ('10) 66.8 → ('12) 57.5 → ('14) 62.2



따라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의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전업농은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직불제, 규모에 맞는 재해보험 확충 및 재해지원을 현실화
- 중소규모 농업인은 소득원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경영비 절감 유도
특히, 단순 판매에서 벗어나 생산·가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영세고령농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배려를 통해 농촌주민의 복지지원제도 개선 필요

그 밖에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인 점을 감안,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가 농업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확대 등 개선이 필요

또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사후복구 지원에 의한 생계형 차원의 지원은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개편 및 농업인의 재해보험 참여 제고방안 강구 필요

- 특히,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농가의 가입이 확대되도록 보험대상 품목과 보장금액 개선 필요
- 농업재해보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 경영안정 및 위험관리를 위해 일정수준의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 보험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



▲ 농업용시설 태풍 피해 ▲ 태풍에 의한 배 낙과 피해

세계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구제역·AI 등 가축질병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

※ AI 발생국 수 : ('12) 14개국 → ('14) 18 → ('15.8) 29

- 우리나라에서 '10~'11년 구제역·AI 발생시 과도한 살처분 등에 따라 산업적·사회적·재정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된 시행착오 경험을 토대로 가축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화된 방역체계 마련 필요
※ '10~'11년간 구제역 피해규모 : 3,748호 348만두, 재정비용 2조 7천억원

개방화, 재해, 질병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 농업의 6차산업화 △ 직불제 확대 △ 농산촌 관광활성화 △ 정책자금 금리인하 △ 재해보험 등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가축질병 방역체계 선진화 등을 추진

주요 정책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유통·관광·휴양을 융복합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농산업의 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사업 유형,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사업모델 발굴, 창업코칭, 판로개척 등)

- 공모전, 6차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수 사업모델 발굴
- 창업희망자에 대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
※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 ('12) 12개소 → ('14) 22(신규 6) → ('15) 30(신규 8)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14.11.19.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 대통령)

“직불제를 확충하고, 농업경영비를 최대한 낮추는 등으로 튼튼한 농가소득·경영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3.22. 농식품부 연두업무보고, 장관)

- 6차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여 6차산업 우수 경영체 육성 및 6차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
 - ※ '14년도 6차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중 342개 경영체가 최초 인증 획득('15년 신규 202개소 인증)
- 안테나숍 설치(15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33개소), 유통품평회(3회), 판촉전(2회) 및 6차산업 판매 플랫폼 구축(네이버)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 (안테나숍) 매출액 644백만원, (품평회·판촉전) 현대백화점, GS홈쇼핑 등 34개 업체 입점
 - ※ 네이버 모바일 쇼핑물 '산지직송' 내 '6차산업 전용관' 개설('15.9.8. 21개 업체 입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제고
 - ※ 농림축산식품부 :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9개소)에서 기술·경영·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가 풀(센터별 40~70명)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 ※ 농촌진흥청 :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에서 기술개발·이전·표준화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제품 제작 및 관련 시설 지원
 -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혁신센터의 주요 테마와 연계한 협업과제를 발굴(7개)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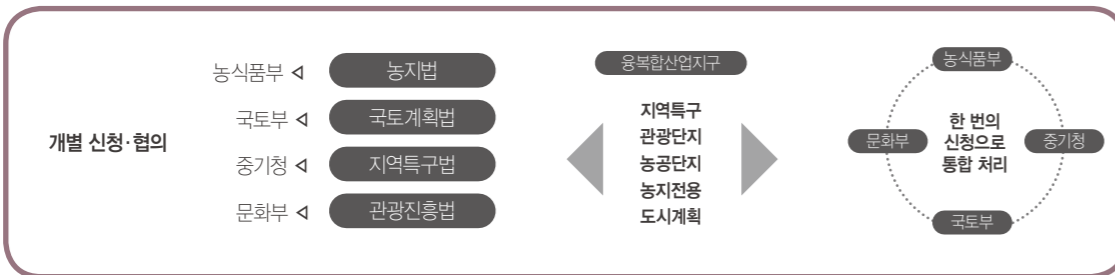
6차 산업이 가능한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주산지 중심으로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9개소)하여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특화품목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 ('14년 신규) 3개소(순창·하동·영동) → ('15) 6개소(서천·영광·문경·서귀포·횡성·의성)
- ※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13.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5.6월), 도별 지원 전문기관 설치(9개소)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기 존	개 선
6차산업 관련규제의 One-stop 처리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 및 산업발전 한계 · 관련 사업의 개별적 추진으로 투자 효과 저조 ·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정·통합 처리 ·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 및 종합적 추진 · 사업간 통합·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One-stop 신속 처리
▶ 규제의 일괄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협업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일정 수준의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직불금 지원 확대를 위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의 조기 인상은 물론 변동직불금 쌀 목표가격 상향, 밭 직불제도 대상 품목 제한 폐지 및 지원액 인상 등 추진

- ※ 쌀 고정직불금 : ('12) 70만원/ha → ('15) 100(당초 '17년 100만원으로 인상 계획)
- ※ 쌀 목표가격 : ('05~'12년산) 170,083원/80kg → ('13~'17) 188,000
- ※ 밭 직불제 지원 : ('12) 19품목 → ('15) 품목제한 폐지(26개 품목은 40만원/ha, 그 외에 품목은 25만원/ha 지급)
- ※ 동계논 이모작 직불도입 및 지원 : ('14신규) 40만원/ha → ('15) 50

〈농가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 존 ('12년)

개 선 ('15년)

대상농지	논	밭	논	밭
경영안정 (위험관리)	쌀 변동직불		쌀 변동직불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 (공익형)	쌀 고정직불 (70만원/ha)	밭고정직불 (19개 품목)	쌀 고정직불 (100만원/ha)	밭고정직불 (전품목 25만원/ha 기준 26개품목 15만원 추가)



〈쌀 고정 직불금 단가 조기인상, 만원/ha〉



〈쌀 목표가격 인상, 원/80kg〉



〈귀농인 등 신규농의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15년)〉



19품목 2012년 ▶ 26 전품목 2013년 ▶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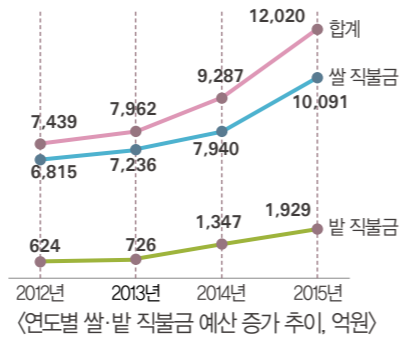
〈밭직불 대상 품목 확대〉



〈동계논 이모작 직불 도입('14) 및 단가 인상, 원/ha〉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시범 (양파·콩·포도) 실시('15)〉



〈연도별 쌀·밭 직불금 예산 증가 추이, 억원〉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 농가경영안정 및 위험 관리를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15)

- 3개 품목(양파, 콩, 포도) 시범 사업(14개 시·군) 추진 후 적용 품목 확대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 전원(田園)의 생태가치 활용 및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육성 추진

농촌마을, 산림, 음식, 승마 등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 코레일·민간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철도인프라와 다양한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확대('14 : 9종 → '15 : 55**)
 ※ 농촌마을, 농가맛집, 양조장, 농촌민박, 자연휴양림, 체험목장, 6차산업 현장 등
 ※※ 으뜸촌기차여행 15종, 하나투어, NH여행 등 민간여행사 관광상품 40종 운영중('15.5~11월)
 (으뜸촌)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전체분야에서 농촌관광 1등급인 우수체험마을
-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16)'의 일환으로 승마장 및 체험 승마 확대, 승마전문인력 양성 등 대중화 여건 조성(한국마사회 협업)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 등의 협업을 통해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프라 확충 등 4대전략 목표를 설정·추진중
- 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확대하고, 산림 내 캠핑·레포츠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관광 활성화(산림청 협업)



▲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13.10.20



▲ 체험 승마

농촌관광 정보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하여 농촌체험마을·농가민박·농가맛집 등 우수한 관광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온라인몰을 통한 농촌관광상품 판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여행사 대상 설명회 및 팸투어, 주한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 등 추진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험마을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등급평가를 지속 확대('14 : 300개소 → '15 : 350)하고, 평가우수마을을 으뜸촌(23개소)으로 선정
- 농촌 민박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식품위생·소방안전·서비스 분야의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 이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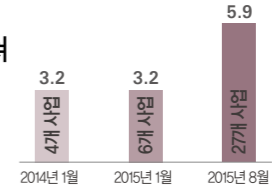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 개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농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촌 민박 전국 23천여개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국한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관광(체험마을, 교육, 관광농원)까지 확대
- 그린벨트 내에서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일정규모 이하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
- 초지내에 축산체험(경관) 및 간이 휴게시설(1천㎡이하),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마장(5천㎡이하) 등 부대시설 설치허용
- 보전산지 안의 임업용 산지에서 산악승마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금융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14~'15.8월 기간중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3차례에 걸쳐 정책자금을 인하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 ('14.1) 4개 사업 3.2조원, ('15.1) 6개 사업 3.2조원, ('15.8) 27개 사업 5.9조원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적용 대상사업(4개 → 25) 확대



〈금리인하 적용사업 수 및 자금규모, 조원〉

농신보의 위탁보증 한도를 확대(3천만원 → 5)하고 무보증 신용한도를 상향 조정(1.5천만원 → 2)하여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금융조달 지원

※ 조합공동사업법인('14)·귀농인을 포함한 예비농업인('15) 보증지원 추가,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 보증한도 증액('13 : 1억원 → '14 : 2),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도입('14)

재해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위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적 운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12 : 51품목 → '15 : 62)과 재해대상의 범위 확대

※ 과수 보상 범위 확대 : ('12) 특정위험보장 → ('13) 종합위험보장 도입
 ※ 보상수준 향상 : ('12) 가입금액의 60~80% → ('15) : 60~85, 또는 90까지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 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15.1)
-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한 평가('14)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15.6)
 ※ 손해평가사는 '15.12월부터 매년 1회 선발하여 '20년까지 2,000명 양성

자연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후복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구지원단가 인상* 및 피해농가 의무 완화 등 추진

※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실거래가의 55%에서 58% 수준으로 상향

AI·구제역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상시 방역체계 마련

'10~'11년 구제역·AI 발생 시 과도한 살처분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 시행착오 경험을 토대로 현장상황에 기초한 탄력적 방역체계 구축

※ '10~'11년 구제역 피해규모와 재정비용 : 3,748호 348만두, 2조 7천억원

- 살처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 규정 개정
- 구제역은 평시 백신접종 및 발생시 긴급백신(3가 → 단가, O3039)을 투입하여 접종
※ 접종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시 백신관리·효능검사 체계 구축
- AI는 이동제한 농가라도 정밀검사 후 출하를 허용함으로써 농가피해 경감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첨단 방역체계 구축

※ 'AI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14.8),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15.7)

- 입식-사육-출하 각 단계별 질병검사를 강화하여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 질병감염 의심가축을 찾아내어 선제적인 방역 조치
※ 돼지는 이동 시 마다 구제역 검사, 오리는 출하하기 전 검사 등을 의무화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전체 축산농가의 생산·유통이력정보를 DB화하고, 축산차량에 GPS 장착·등록('12년 0대 → '14년 47천대)토록 하여 방역 관리
※ 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제한 조치
- 전체 방역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질병 확산 경로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농림축산검역본부-KT공동)
- 소 이력제에 이어 돼지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15.8 7천농장, 11백만두)하여 가축방역 및 역학조사에 활용
※ 돼지 이력제 도입을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2.27), 시행('14.12.28)
- 방역시설 취약농가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확대(농가당 최대 1~2억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AI 방역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최소화〉

기 존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500m·3Km·10Km) 일률적 설정 ● 모든 이동 차량 소독 	방역대 설정 및 소독 탄력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 (KAHIS)과 GPS를 활용, AI 확산 위험도를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설정 ● 모든 이동 차량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m 또는 3km 이내 일괄 살처분 	살처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확산 위험도를 분석하여 선별적 살처분, 비감염 축산물 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대 내 전체 이동 제한 	이동제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 허용

방역 선진화를 통한 살처분·이동통제 최소화로 재정지출 감소 및 국민 불편 경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14.11)



▲ 차량소독



▲ 농가소독



▲ 구제역 백신접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 방역기관인 지자체 간의 권한과 기능,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방역 기능 역할 분담 주요내용〉

구분	주요역할
농식품부	● 국가 방역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협조 및 지자체 지원·감독
검역본부	● 진단 및 역학분석 교육, 종합통제시스템(KAHIS) 구축, 축산차량 GPS 관리 ● 지역별 지도·점검 등 지자체 방역 기술지원 총괄
지자체	● (시·도)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 및 책임방역 총괄 ● (시·군) 질병발생 사전예방, 초동대응 및 사후관리 등 현장 방역 ● (시·군) 진단 및 역학조사 등 초동대응
방역본부	● 시료채취, 초동대응 및 DB 현행화 등 방역 지원업무

축산농가 등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및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 도입('14)

※ 계열업체는 소속농가의 방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되, 의무를 소홀히 한 계열화사업자는 정책자금지원 제한
 ※※ 방역 소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최대 80% 감액, 과태료 처분액 상향(5백만 원 → 10)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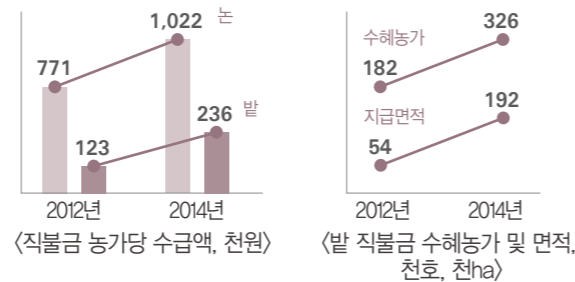
6차산업 인력에 대한 맞춤형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 창업자 수와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

- 창업자수(개소)
: ('13) 360 → ('14) 392 → ('15) 435
※ 창업코칭, 시제품생산,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 인증사업자 매출액(백만원)
: ('13) 747 → ('14) 831 → ('15) 931
※ 인증사업자 선정(342개소) 및 현장규제해소



논·밭 직불제 확충 및 밭작물 중심의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시범도입으로 농가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직불금 농가당 수급액(쌀/밭)
: ('12) 771천원/123천원 → ('13) 892/132 → ('14) 1,022/236
- 수혜 농가수(밭)
: ('12) 182천호 → ('13) 220 → ('14) 326
- 지급 면적(밭)
: ('12) 54천ha → ('13) 73 → ('14)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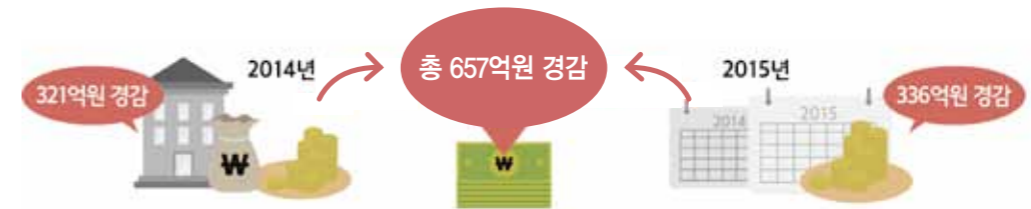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농촌관광객 증가

-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14년의 으뜸촌(전국 23개소)의 평균 방문객 및 매출액이 '12년 대비 각각 10%, 37% 증가
- 승마인프라 확충 등으로 승마체험인구가 꾸준히 증가 : ('12) 14천명 → ('14) 19

정책금리인하 등으로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 '14~'15.1 농업정책자금 약 6조4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약 657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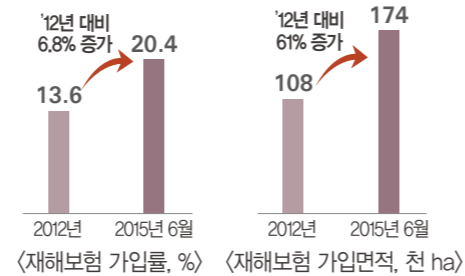


- '15.8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시 연간 572억원 절감 기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와 인프라 확충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농가단위 보장(가입)금액 증가

- ※ 가입률(가입면적) : ('12) 13.6%(108천ha) → ('14) 16.2(134) → ('15.6) 20.4(174)
- ※ 농가당 평균가입금액 : ('12) 34백만원 → ('14) 42



가축질병 백신접종 탄력적 위기대응, ICT 접목에 의한 신속대응 등으로 살처분 재정비용이 감소되었고, 농가의 경영 불편 경감 및 수급안정 효과 제고

- 탄력적 방역체계 구축에 따라 구제역·AI 대응 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 구제역 발생 시 선별적 살처분 효과 : ('10~'11) 3,748호, 348만두, 2조 7,000억원 소요 → ('14~'15) 188, 17, 600(p)
 - ※ AI 이동제한 구역내 출하실적 : ('10~'11) 0건 → ('14~'15.6) 391농가 501만수
- ICT 접목 등을 통한 상시에찰체계 구축으로 질병을 신속히 파악하여 초동 대응함으로써 확산 최소화
 - ※ KAHIS, GPS 활용 등을 통한 과학적 역학 추적 등으로 방역 초동 대응시간 20시간 → 4시간으로 단축
 - ※ '14. 3. 6 안성의 OO산란계 농가에서 AI 발생 시, GPS 차량기록 실시간 조회를 통해 농가신고에서 누락된 가축이동 사항을 식별하고 2시간만에 예방조치 완료

〈방역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

실사, 농가설문	KAHIS, GPS
초동대응시간 1~2일	2시간
신고누락 위험 상존	신고누락 발견



향후 과제

창업보육,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6차산업 확산 및 농촌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차별성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6차산업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모태펀드 활용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 품평회, 기획판매전 등을 개최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6차산업 전용 판매플랫폼 구축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
- 6차산업화 지구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적용 등을 통한 전후방산업 연계 지원
- 승마 등 말산업 활성화, 낙농체험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촌관광상품 개발 강화
- 관련기관 및 국내외 여행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농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확대

농가의 소득·경영위험 관리 고도화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발직불제 및 수입보장보험제도 확충 등으로 발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
- 직불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현장의견 수렴, 통계 정비 등을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개선
-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위해 방역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ICT 활용*을 더욱 성숙시키고,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효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ICT를 활용하여 질병확산 예측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등 추진
- 가축 사육농가의 인식개혁과 역량 강화, 축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질병발생의 원천 차단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영세고령농 등을 위한 배려농정을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5.1.13, 농림축산식품부 연두업무보고, 장관)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시장 적응력이 부족한 영세고령농은 소득이 부족하고 노후생활기반이 미흡하며, 취약한 정주환경은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

- ※ '14년말 현재 65세이상 농업경영주는 전체 농가의 56%
- ※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10) : 농어업종사자 8.1%, 도시근로자 1.4%
- ※ 독거노인가구 비중(*10) : 농촌 13.3%, 도시 4.5%
- ※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 (*05) 2,048개 → (*10) 3,091 / 면지역에 87.5% 분포



영세고령농의 취약한 사회안정망과 농촌의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체감형 복지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배려의 농정을 추진할 필요

- 농촌 삶의 질 향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보건·복지·문화·교육정책과 연계할 필요성도 더욱 커짐

또한, 농촌지역을 농업인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살기 좋은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및 마을개발을 정부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을 선결과제로 인식

- 새마을운동 정신인 자조·자립·협동을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21세기형 마을발전 모델의 확산
- 종전 농업과 마을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농촌중심지와 마을간의 연계를 통한 종합 개발, 인근 시·군간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 추진으로 확장
- 주민참여와 마을간 경쟁을 기반으로 함께 하는 농촌운동을 확산할 필요



귀농·귀촌 정책은 종전의 유입촉진 중심에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귀농창업자금·농지임대·현장실습지원 등을 통해 농촌 활력화를 위한 주체로 육성할 필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 고령농 사회안정망 강화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주거환경 개선 △ 귀농·귀촌 활성화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등을 추진

주요 정책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으로 노후 생활안정 기반 구축

-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13) 부부 모두 65세이상 → (*14)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도 가입대상에 포함
- ※ 농지연금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13) 및 소유농지 면적기준(기존 3ha 이하) 폐지(*15)
- ※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12) 공시지가 → (*13) 감정평가가로 변경, 담보농지 감정 평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70% → 80수준, *15)
- ※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상향조정 : (*12) 846천원 → (*14) 956 → (*15.6) 1,04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인 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 확대

- ※ 기준소득금액/월 지급액 : ('12) 79만원/최대 35,550원 → ('15) 91/40,950
- ※ 연금보험료 지원예산 : ('12) 924억원(230천명) → ('15) 1,637(311)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13)

- ※ 연금보험료 지원 여성농업인 : ('12) 86천명 → ('15) 177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공동생활편의시설 및 복지 서비스 지원

고령농 및 취약계층의 생활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 체감도 높은 복지 시설의 지원 확대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14.1)

- 오래되거나 버려진 마을회관 등 기존 농촌공동 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 ('14~'15 지원 실적)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 작은목욕탕 28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의료(방문진료), 문화(요가)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
 - ※ '14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최우수 브랜드 과제로 선정

65세이상 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4 : 10천가구 → '15 : 15)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사일과 집안일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해 드립니다."

- 영농도우미 사고나 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최대 12일)와 경로당(최대 24일) 지원
- 문의처 지역농협, 농식물부콜센터 (☎1577-1020)



▲ 복지서비스 정보 달력

고령농 등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정보 달력' 제작·배포('15년)

-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달력 제작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 강화

의료검진,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15 : 50회)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농업인 행복버스 출범식, '14.3.21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을 통한 의료검진

- ※ (농업인 행복버스) 농촌마을에 찾아가 의료검진, 법률자문, 문화공연, 가전제품 수리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14~'15.8, 총 99회 실시)

농촌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

- **교통** 오지·벽지마을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교통여건이 취약한 마을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 사업 신규 도입 및 확대('14 신규 : 13개소 → '15 : 21)하여 고령자 등이 읍·면 등 중심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 '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지자체 토론 등을 거쳐,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14년)
 - ※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5.1)
- **보육**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15 : 30개소)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주말돌봄방('15 : 15개소) 사업 추진
- **보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질환 예방교육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확대('12:0→'15:8개소)

“농업분야에도 혁신과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농촌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곳으로 바꿔가겠습니다.” (‘14.10.10. 세종창조마을 시범사업 출범식, 대통령)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이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 교육·복지 등 분과위·특위 신설 및 분야별 국책 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농촌마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읍·면 중심지를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읍·면 중심지를 농촌의 경제·문화·복지·공동체 활동의 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

- 읍·면 중심지는 전통시장 리모델링, 로컬푸드 매장 확충, 노인·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 도시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업(도시재생사업 등) 하여 시너지 창출
 - ※ 농촌중심지 육성(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 : ‘15년 15개소(개소당 80억원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역개발·건축·문화·복지분야 전문가 지원단(40명) 및 프로젝트 매니저(100명) 구성·운영(‘15)
- 배후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생활인프라 구축 지원
 - ※ ‘13~’14년 기간중 노후주택 17,213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8,386동, 빈집 8,521동 정비

농촌 생활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다수 시·군이 함께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확대

- 동일 생활권 내에 위치한 다수의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체감형 연계협력사업을 확대(‘13 : 300억원 → ‘14 : 650 → ‘15 : 650)하고, 취약지역개조사업(새들마을 사업, ‘15년 55개 지구)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담장정비 등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 ※ ‘15년 63개 생활권 넘비 해소, 일자리, 의료, 교육 및 안전 등 분야에 1,600억원 지원

귀농·귀촌 및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제고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농촌 인력문제 해소 및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마련(‘13.8)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이전(‘14, 수원 → 서울)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및 대학생 재능 캠프 등 개최
- 2030세대, 6차산업 창업 희망자, 제대군인, 새터민 등 귀농·귀촌 수요자의 다양한 직업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
- 특히, 2030세대의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 대학귀농교육(‘15 : 10개소), 2030 농지임대 알선, 선도농가 실습, 귀농인의 집 우선 입주 등 지원
 - ※ 귀농·귀촌 교육 : (‘13) 1,925명 → (‘14) 2,450 → (‘15 계획) 2,800
 -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실적(‘15.1~9월) : 상담(전화·방문) 12,859명, 홈페이지 이용 566,877명, 교육 1,952명, 언론 홍보 264건, 출장상담 639명, 집단상담 216명



A Farm show, ‘15.8.28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출장상담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중심의 맞춤형지원을 하겠습니다.”

(’15.8.28, 2015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대통령)

● 초기 귀농·귀촌 단계에서의 영농기술 부족, 자본부족 및 담보설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영농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 ※ 귀농예정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귀농인의 집',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등 확대
- ※ 자금지원 확대 : (’14) 2억원, 3% → (’15) 3, 2
- ※ 규제 완화 : 비닐하우스 지원(2,000㎡이상·농지임차기간 10년 → 660·5)
쌀 직불금 수급자격(영농 2년, 농지 1만㎡, 소득 900만원 → 1, 1천, 120)
- ※ 예비귀농인이 귀농 즉시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이용 허용



정보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 확대 개편
(1:1 귀농설계, 농지·빈집정보, 귀농 아카데미, 주문형 교육 등)



교육

수준별 교육 개편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15년)
(귀농 기초·중급·심화, 귀촌생활로 구분)



자금

창업자금 지원 확대 (한도 : ’14. 2억원 → ’15. 3, 용자규모 ’12. 6백억원 → ’15. 10) 금리인하(3% → 2)



주거 등

임시주거지 및 영농실습 기회 제공
(’13년~,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귀농·귀촌인의 농촌이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주택단지의 입지구제 완화

(주택개량 자금지원 확대 및 주택단지 입지구제 개선 내용)

기 존	구 분	개 선
호당 6천만원	주택건축 용자한도	실제 건축비용(감정가)의 70% 까지 지원
자가주택 한정	주택건축 용자대상	임대주택 신축도 지원
농림지역 비율 50%	주택단지 입지구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2ha 이하 자투리농지 활용 허용
20명 이상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5명 이상

귀농·귀촌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5.7.21)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 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에 나눔으로써 농촌 활력 제고

- ‘스마일재능뱅크’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재능기부자와 수요자(요청마을)간 자율적 연계
※ ’14년말 기준 : 재능나눔 신청 2,244마을(3,252건)
- 농촌재능나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일반단체 등 공모사업 실시, 언론홍보 캠페인, MOU체결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TV, 라디오 등 홍보캠페인 및 홍보공모전(UCC, 사진)을 통해 민간의 농촌재능나눔 인지도 제고와 자율적 참여 확대
※ 지자체, 일반단체 등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으로 활동형 농촌재능나눔 확산
※ 기업, 직능단체, 대학교 등과 MOU 체결(’12 : 25개소 → ’13 : 26 → ’14 : 34)로 재능나눔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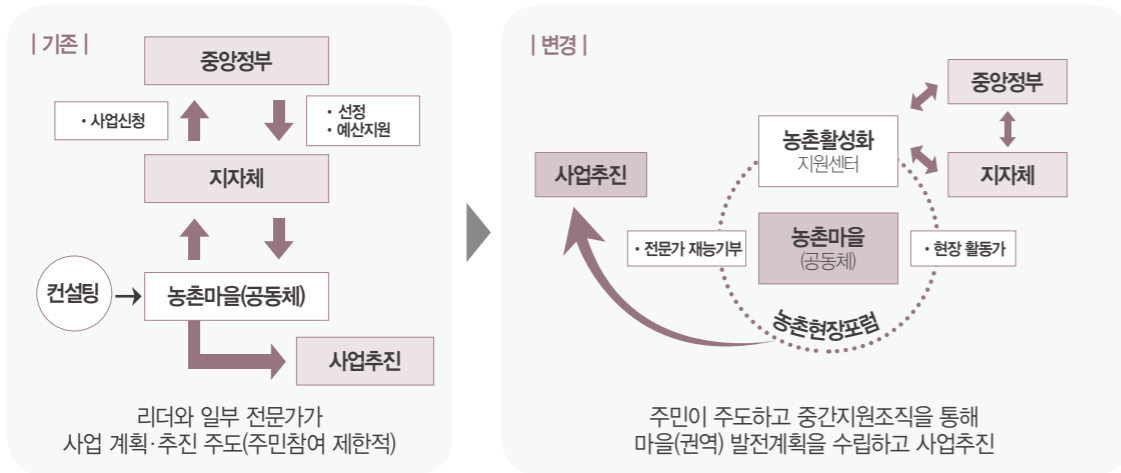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자조·자립 정신을 함양

농촌현장포럼 활성화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대(’12 : 37개 마을 → ’15 : 418)

- ※ (현장포럼)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 중간 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13.3~ , 9개소)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정보·경험 공유 및 시행착오 최소화



〈마을 만들기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 방식 개선 체계도〉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13~'15.8월까지 141개 시군, 18개 농업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등 클린 활동과 꽃나무 식재, 화단 조성 등 마을가꾸기 추진
 - ※ 5,390개 마을(계획 대비 140%), 137천명 참여 및 1,100여건 언론보도 등으로 농촌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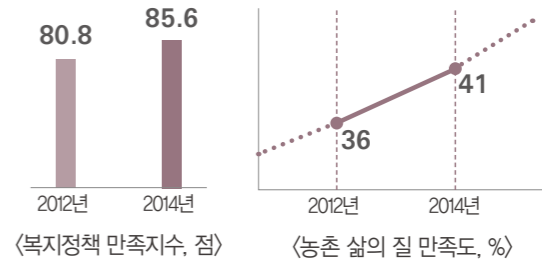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를 통한 자조·자립 정신의 주민역량 강화

- 마을단위에서의 소득, 경관, 문화·복지분야와 시·군단위에서의 마을만들기 및 마을가꾸기 경연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참가 마을수 : ('14, 제1회) 1,831개 → ('15, 제2회) 2,017 (7% 증)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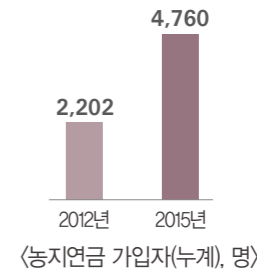
농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속 향상

- ※ 복지정책 만족지수(점) : ('12) 80.8 → ('14) 85.6
-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 ('12) 36 → ('14) 41



농지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되고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인원이 증가되어 고령농의 노후 생활 안정 기여

- ※ 농지연금 가입자(누계) : ('12) 2,202명 → ('15.6) 4,760
- ※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 : ('12) 265천명 → ('15.8) 342



농촌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개선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등 농촌 고령자의 생활여건 개선

〈공동시설 이용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변화〉

구분	거주전	거주후
식사횟수	2.4회/일	2.9
목욕횟수	13.4회/월	17.7
청소횟수	24.6회/월	28.8
세탁횟수	9.8회/월	11.4
공과금 등 거주비용	11.6만원/월	5.3
식비	14.1만원/월	9.7



공공생활홈

귀농·귀촌 가구수가 대폭 증가되고, 농촌재능 기부자 수 증가 등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

- ※ 귀농·귀촌가구수 : ('12) 27,008 → ('14) 44,586
- ※ 청장년층(40대 이하) 가구수 : ('12) 10,729 → ('14) 17,611



- ※ 재능기부자 수 : ('12) 30천명 → ('13) 50 → ('14)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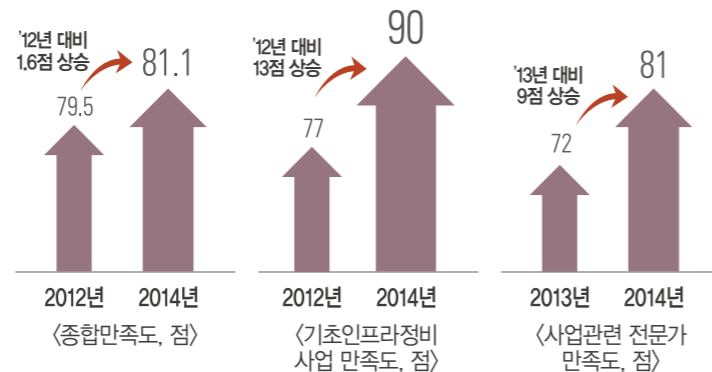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 자발적 참여 확대

- ※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 : ('12) 37개 마을 → ('15) 418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참여마을 : ('14신규) 807개 마을 → ('15) 5,390
-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 : ('14신규) 1,831개 마을 → ('15) 2,017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만족도 상승

- **종합만족도**
: ('12) 79.5점 → ('14) 81.1
 - **기초인프라정비 사업 만족도**
: ('12) 77점 → ('14) 90
 - **사업관련 전문가 만족도**
: ('13 신규) 72점 → ('14) 81
- ※ 만족도 기준 : 불만족(25점), 보통(50점), 만족(75~100점)



향후 과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등 H/W 중심의 지역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사업 확대 추진

- 현장포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문화, 복지 등 S/W 성격의 사업 비중 확대 및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 강화

도·농간 삶의 질 인프라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농촌지역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ICT 등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주민의 정책체감도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범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시너지 제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중심지-배후마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역개발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 읍·면 등 농촌중심지에서의 지역경제·문화·공동체 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농촌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농업 · 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농업·농촌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화 대토론회, 대통령)

추진 배경

개방화·고령화의 가속화,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의 경제·사회구조가 다양하게 변화

- 농업관련 일반통계의 평균적 데이터에 기초한 농정으로는 미래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와 혁신, 다양한 정책 수요 등을 충족하기 어려움
-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모델을 단순히 따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

전면적 개방화 체제에서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DB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여 농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전업농·중소농·고령농, 농업법인 등 농가유형 및 농업경영체 특성을 고려한 전략계획 수립
-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화작목, 주민의 실제 생활권, 사회·문화 자원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상향식 농정 추진체계 강화
- 보조금 누수 방지 등 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선도농가, 전문가 등의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ICT기술 및 SNS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식품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 6차산업화 등 농식품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빠른 기술발전 등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등 정부기관 주도의 현장애로 기술지원은 한계
-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현장 애로사항과 가축질병 방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현장에서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할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농업의 6차산업화를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장치 확충
- 산업간 융·복합, 창의적 경제활동, 투자유치 등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는 선제적으로 정비
-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개선할 필요

농업·농촌에서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업의 비전, 농정방향과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농촌 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농식품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학계, 기업 등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창구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농업·농촌 부문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간 소통과 결속을 다지고 보람을 갖는 공직문화 형성 필요

시장개방 확대, 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농정 △ 지역특성에 기초한 현장농정 △ ICT기반의 서비스 지원 △ 규제완화 △ 협업·소통·공감을 강화하는 등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추진

“창의와 혁신, 현장에 기초한 스마트농정으로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3.3.22, 농림축산식품부 연두업무보고, 장관)

주요 내용 및 성과

농업경영체 DB 등 기초통계의 정비와 이에 기초한 과학적·합리적 농정 추진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 재배작목, 경영형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기반 구축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1,602천 경영체 등록(’15.9)

-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분석하여 개별경영체와 지역의 특성 및 역량에 따른 맞춤형 농정 추진
- 자연재해, 동·식물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기에 신속한 대응 지원

| 사례 |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제대책 수립을 위해 기존에는 사과·배 등 재배현황 파악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및 방제비용 절감

-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성을 제고(4회 신청 → 1회 신청, 264억원 절감)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 신청체계 구축(’13.12)

-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 팜 맵’과 연계하여 현장밀착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 팜 맵 : (’14) 3개 시·도 → (’15) 6 → (’16) 전국 구축완료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시스템의 연계·통합 운영을 통해 농식품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농림축산 통합 관리망 구축 정보화 계획수립 및 통합망 구축(’13.12)

※ 연계·통합 계획(누적) : (’13) 5개사업 → (’14) 22 → (’15) 62 → (’16) 102



스마트 팜 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중복·편중, 부적격자 지원 방지
※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시에는 기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최대 3회 지원)

| 사례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재정집행을 관리함에 따라 ’14년 발직불금 40억원 부당지급 방지효과가 있었고, 직불금 부정집행 95억원, 면세유 부정수급 76억원 적발에 기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효과

- 보조금으로 지원한 주요시설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15)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7)

- 농식품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시행, 자금관리, 평가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업무평가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13.12)

- 농식품정책의 집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전문적 평가분석 및 정책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15.7~)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와 관계부처 전산망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 편의증진 및 정책서비스 만족도 제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법무부) 국내거주사실증명, (국토교통부) 농지조사정보(지번, 지목, 소유자)

| 사례 | 농업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연간 70만여 명(연금 34만, 건강 36만)의 농업인 편의 증진으로 43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 효과

“국민이 정책을 몰라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13.7.8,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획일적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실제 생활권에 기초한 지역개발과 현장농정 추진

지자체가 지역농정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을 수립 추진

- ※ 농촌지역이 있는 15개 시·도, 167개 시·군·구의 중장기 농정발전계획 수립·유도
- ※ '15. 7월 현재 10개 시·도, 150개 시·군·구 계획 수립 완료

시·군 경계를 넘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확대

-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누계) : (‘13신규) 33개소 → (‘16까지) 140
- 사업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생활권을 단위로 사업대상지역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추진
- HOPE : 행복(Happiness), 기회(Opportunity), 협업(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 해소(Every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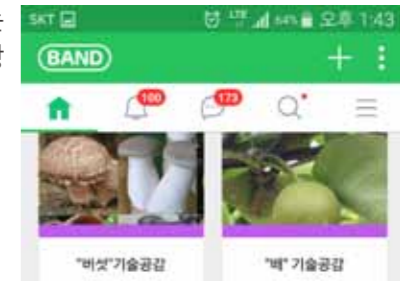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방식 도입

- ※ 예비단계(역량강화) → 진입단계(소규모사업) → 발전단계(종합개발) → 자립단계(활성화)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가축질병 방역 등을 적기에 정확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해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농업현장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농업인이 현장에서 영농 애로사항 발생 시 SNS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농촌진흥청, 지자체, 선도농,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공감’ 밴드(네이버, 20개 품목)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등록 및 해결방법 등을 실시간 댓글로 신속히 제공
 - ※ 20개 품목 밴드에 11,165명 가입, 4,320건 컨설팅 실시 (‘14.6.~’15.8.)
 - ※ 지원품목(20품목) : 사과, 참다래, 버섯, 고추, 딸기, 토마토, 한우, 돼지, 닭 등



기술공감 밴드

(농식품 기술 컨설팅 방식 개선 주요내용)

기존 방식(AS-IS)	SNS 활용 컨설팅(TO-BE)
농가 현장 애로사항 발생시 농업기술센터, 농협 방문 또는 전화로 민원 해결	SNS에 애로사항 글 게재시 선도농가 및 전문가의 실시간 동시 컨설팅으로 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결 가능
농업 현장 기술수요 발굴시 농업기술센터 문의 또는 관련 시스템(FRIS)에 직접 작성	현장기술수요 사안을 실시간으로 연구과제 발굴 채널로 활용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농가부담 경감

- ※ 축산농가, 가축이동, 차량출입정보, 가축거래기록, 질병발생상황, 백신접종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방역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KAHIS를 활용하여 질병확산 위험지역을 신속히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하여 가축질병 확산 최소화



KAHIS를 활용한 방역대책논의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규제를 개혁하여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15.7.21, 국무회의, 대통령)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더라도, 질병확산 위험이 없으면 가축사육 및 출하 등의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조치
- 방역 시 축산 차량만을 선별 소독함으로써 가축방역에 따른 교통통제 등 국민 불편 최소화
 - ※ 축산차량 GPS 부착 추이 : (’12 이전) 상시관리 차량 0 → (’14) 47천대
- 질병확산 위험지역 분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KT 등 민간 ICT 업체와 협업하여 기술개발 지속 추진
 - ※ KT, 농림축산식품부 MOU를 통한 기초시범모델 구축(’14.12) : 현재 적중도 82.7%
 - ※ ’15.9월 시 발생시 KT와 협조하여 13개 위험 시·군을 즉각 발표

〈KAHIS 분석 정보 정확도 개선 방향〉

현 재	방 식	개 선 후
정확도가 10m 내외 오차발생	GPS 성능개선	정확도가 1m 내외 오차발생
원(Circle)으로 구획 방문정보 수집 시 오차발생	축산시설 존(Zone) 설정방식	다각(Polygon)으로 구획 가능 추가 실제 시설 면적과 근접하게 구획가능

정밀토양정보시스템인 ‘휴토람’을 구축(농촌진흥청)하여 토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농경지 토양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

- ※ 1,000만점 이상의 토양비옥도 정보축적, GIS기반 토양주제도 50종, 비료사용처방 115작물, 작물재배적지 63종, 모바일 웹 서비스 등 제공
- ※ 휴토람 정보 이용현황 : (’12) 352천건 → (’13) 439 → (’14) 681(’12년 대비 93% 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토람에 구축되어 있는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친환경인증심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가뭄대책, 동계작물 파종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농경지 토양수분정보 제공
 - ※ (봄) 시군별 가뭄상태정보, (가을) 동계작물 논파종 가능면적 정보 제공

농촌현장에서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및 농업투자유치 등을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전통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 및 판매 규제를 대폭 개선(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협업)

- ※ 전통주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 과세표준 제외(’14) : (기존) 주세 부과 시 과세표준은 용기와 포장비용을 포함한 출고가액 → (개선)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15.5) :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쇼핑몰 추가
- ※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제조면허 신설(’16 상반기) : 시설기준 완화 및 제조면허를 신설하여 음식점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신청자격 완화, 식품 제조·가공시설 기준완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규칙 표준(안) 마련(’14.9)(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 ※ 시설기준 완화 조례·규칙 제정 지자체(누계) : (’13) 4개 → (’15.9) 98개 제정 완료(43개 시·군 행정예고 중)
- ※ 식품원료 대상에 공충 확대(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 (’13) 3종 → (’14) 5 → (’15) 7



▲ 2015 곤충요리 경연대회



▲ 곤충 요리

왕겨, 쌀겨, 볶짚 등 농산물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환경부 협업)

- ※ 축산농가에서 부산물 사료이용 시 사료비 10~25% 절감 가능
- ※ 연간 농식품 부산물 발생량 627만톤의 50%를 사료로 이용 시 전체 배합사료 판매량 1,894만톤(’13)의 9.1%인 171만톤을 대체하는 효과(7,490억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3.3.22, 농림축산식품부 연두업무보고, 장관)

농업법인 등의 경제활동과 농지이용 관련 규제정비로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투자확대 및 신규 조합원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해 책임 범위를 출자액 한도내로 개선
- 영농조합법인의 구조조정·규모화 촉진 등을 위해 법인간 합병·분할 및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5.7.7시행)

〈농업법인 등의 경영 효율화 및 투자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청산 후 재설립 •영업력 단절 •부채상환 등 금융부담	법인간 합병·분할	농업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출자자 무한책임 •투자 기피	조합원 채무 책임 범위	출자액 한도 이내 유한책임

- ▶ 법인 경영체의 구조 조정·규모화 촉진
- ▶ 외부 자본의 투자 위험 경감으로 투자 촉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5.1.6)

- 농업관련 기업연구소(바이오·벤처농업 등)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 취득 허용
-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규모제한 완화
 -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1ha → 1.5ha로 확대,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에서의 판매 범위를 농산물 → 임·축산물, 농림축산가공품으로 확대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기 존		개 선
농지취득 제한 •연구·실험 애로	바이오연구소 농지소유	농업 연구목적 농지취득 허용
농산물만 취급 가능 시설설치 허용면적 부족 •가공시설 : 1ha •사료 제조시설 : 1ha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임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도 허용 허용면적 확대 •가공시설 : 1.5ha •사료 제조시설 : 3ha

- ▶ 민간의 농업연구 투자확대로 기술 농업 촉진
-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농가소득 향상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15.1.6)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농촌 부문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협업)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도농 복합시에 대한 지특회계사업은 농촌특성을 고려하여 부처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

〈부처별 역할분담 개선 내용〉

기 존	개 선
인구 50만 이상인 도농복합시는 국토교통부, 그 미만은 농림축산식품부	도농복합시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읍·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동 지역은 국토교통부 * 다만, 도농복합시 중 읍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공동운영) 하기로 함

- 환경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토대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 확대 발전
- '13~'14년도에 추진한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원내용 중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환경부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4개 지구)
- '15년도에는 지역발전위원회·환경부와 협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전국 55개 지구 선정, '15~'17년까지 지원)
 - ※ 환경부는 동 사업지구내 2,684세대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농촌의 복지,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시너지 제고(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협업)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선한 쌀(나라미)을 반값에 연중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5.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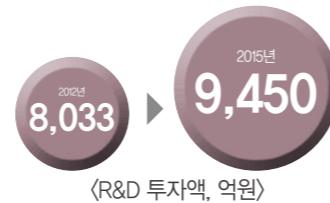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 주요내용〉

기 존	개 선
· 20kg 포장 단량 공급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발생) · 10kg 포장 나라미는 7~8월에만 한정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10kg 포장 나라미를 연중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포장재 제작·공급 - (보건복지부) 배송비 예산 추가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건강 100세 노인 등을 위한 10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 건강 100세 노인운동서비스(보건복지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등
-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도개선, (농어촌희망재단)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지 선정, 예산관리, (지자체) 조례제정, 세부계획,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 (마을주민회 등) 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하여 농식품분야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유지하여 농식품분야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농·어가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경감(조세특례제한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협업)
 - ※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전액 감면 3년 연장(~'17.12.31)
 -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및 상속세 비과세 3년 연장(~'17.12.31)
 - ※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저율과세(9%) 적용 3년 연장(~'17.12.31)
- 소득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및 세액공제 확대(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협업)
 - ※ 식량작물 재배업 이외의 채소, 화훼, 과실 등 고소득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과세('15.1.10 이후 소득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14.6.30~'24.6.30)함으로써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농어촌특별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협업)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관간 협업(창조농업 7대과제사업단 출범) 추진으로 기획단계부터 실용화·사업화를 고려한 R&D 추진(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협업)

- ※ R&D 투자액 : ('12) 8,033억원 → ('15) 9,450
- ※ 협업과제 : ① 가족분노 자원화, ② ICT 활용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③ 농업에너지 절감, ④ 곡물·조사료 자급률 제고, ⑤ 중국 수출 기술, ⑥ 농업의 6차산업화, ⑦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주요농정 현안 및 정책방향 등 논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이 참여하는 농정전략협의회 운영

- ※ '15.2~9월까지 총 5회 개최하여 도시농업, 한·중 FTA 대책, 6차산업, 농식품 수출, 농촌관광 등 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 현안과제 해소 및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박근혜정부 농정 구상 구체화 및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구성·운영('13.4.22~)

-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167명)
- 6개 분과위·12개 소위를 설치, 76회의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박근혜 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13.10)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생산자·소비자·품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하여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13.4~'15.9 회의실적 : 총 102회)

장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성과 점검, 농업인 애로사항 및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이동필의 1234' 등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 '13년부터 ICT·수출, 농산물 수급관리, 6차산업, 취약계층 복지 등 현장 339곳 방문
 - ※ '13년 34회(46개 시·군), '14년 72개 시·군 111곳, '15년 8월까지 47개 시·군 72곳 방문
 - ※ '14년에는 총 129건을 건의 받아 60건 수용, 기추진 및 검토 중 52건, 기타 17건



▲ 가축분뇨처리장 현장점검

'15년 농업인의 날에 '국민농업헌장'을 선포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업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 장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장관이 직접 농정을 설명하는 한편, 농업인 등이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쌍방향 소통 활성화
 - ※ 페이스북 주소 : (장관) facebook.com/leedphil (농림축산식품부) facebook.com/mafrakorea
- 농식품업 현장과 생활 속에서 농정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등을 활용한 블로그 운영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페이스북

- 정책홍보 및 설문조사를 위한 농정소통 시스템(PIMS) 운영
- 농정에 관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일반 국민과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답장기능을 신설하여 국민의 농정참여 활성화 유도
- 대국민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
 -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14.11) 등 5건 설문



▲ PIMS를 활용한 정책홍보 및 설문조사

농식품 행정업무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고취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격 영상회의 활성화, 위임전결 규정 재정비 등 추진

- 행정업무의 공간적 제약에 의한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원격 영상회의 확대
 - ※ 영상회의 실적 : ('14) 3,616건, ('15.1~7) 1,830건
-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장·차관 결재사항을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15.6)
 - ※ 장관결재사항 32% 감축, 차관결재사항 34% 감축



▲ 지자체와의 영상회의 모습

“정부 3.0은 성과가 나오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을 잘 고려해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15.1.21, ’15년 정부업무보고-국가혁신,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하는 내부 직원간 소통, 단결 및 결속을 강화하고, 격무에도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도록 ‘칭찬 릴레이’ 추진

-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칭찬
-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부망 지식포털에 별도의 ‘칭찬 릴레이’ 창을 개설하고, 장관실 앞 복도에 ‘칭찬트리’를 만들어 사진과 칭찬 내용 게시
 - ※ ’13.5월~’15.10월 기간중 총 102명이 칭찬 받았으며, 계속 이어가는 중

- △△△ 주무관** 빛도 나지 않고 생색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하게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주무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
- ◇◇◇ 사무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고, 자기 일도 힘든데도 옆 동료가 힘들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분
- 과장**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셨지만 본인에게 더욱 엄격하셨기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됨



▲ 농림축산식품부 칭찬트리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각종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

- 농업인·일반인 등 정책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이 (’14년) 45% → (’15년) 63.4%로 증가하였고, 부정적 평가는 15.3% → 5.5%로 감소
- 정부 3.0 등 국정 아젠다 추진에서 우수 부처로 평가
 - 정부 3.0 최고등급(’14) 및 정부 3.0 활동성과 발표대회 최우수상(’14.7)
 - 정책홍보 최우수기관(’13~’14) 및 정부업무평가(홍보) 전부처 1등(’14)
 - 부패방지시책 1등급(’13~’14) 및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13~’14) 등

향후 과제

농업경영체 DB와 스마트팜 맵,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휴토람 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빅데이터 형성 및 맞춤형 농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모델을 발전시키고, 각종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농업인 포함)의 자조·자립 의지와 역량 강화

정부-정책고객, 정책고객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ICT기반의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 개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새로이 창출되는 농식품산업의 현장접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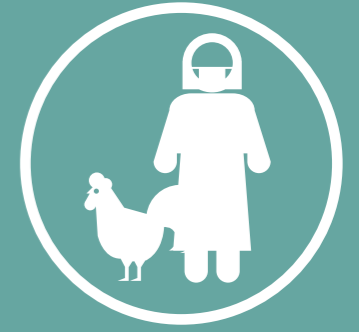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보완



III

부문별 주요 농정 추진사례 30선

-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사례
-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례
- 3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사례
-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사례
-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사례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식탁 위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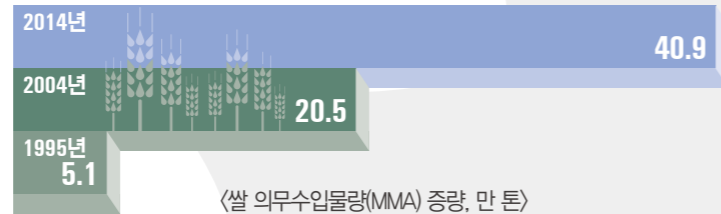
1-1 쌀 관세화로

의무수입쌀 추가 증량 중단

♣ 추진 배경

- '94년도 UR 협상과 '04년도 쌀 재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두 차례 유예한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매년 증가하는 등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만톤 → ('04) 20.5 → ('14)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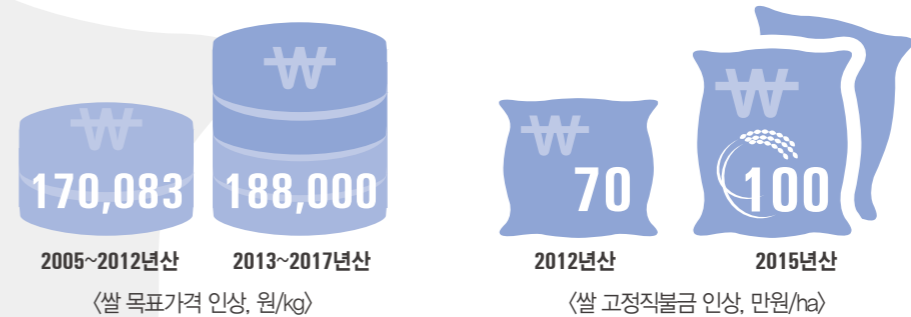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만 톤〉

- WTO와 약속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14년 종료됨에 따라 '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할지,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
- 일부 농업계 등에서 쌀 관세화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여 논의에 진전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더 이상의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국내 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최선이라는 결론
- '14년 쌀 관세화 협상을 앞두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쌀 농가 등을 이해·설득하여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와의 갈등 최소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13년부터 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개최(180회 이상) 및 생산자단체·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 운영(13회)

♣ 주요 내용

- 쌀 관세율을 513%로 하고, 밥쌀용 쌀 의무수입(30%)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허표를 수정하여 WTO에 통보('14.9.30)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추진

※ 목표가격 인상 : ('05~'12년산) 170,083원/80kg → ('13~'17년산) 188,000(10.5% 증)
 ※ 쌀 고정직불금 인상 : ('12) 70만원/ha → ('15) 100(42.9% 증)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인상(논) : ('12) 3만원/3.3㎡ → ('15) 3.5(16.7% 증)



-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유통금지 제도('15.7.7~) 도입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

♣ 성과

- 지난 20년간 농정 최대 숙제였던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쌀 산업 기반 유지
- 쌀 관세화로 쌀 의무수입량의 추가 증량이 중단되어 국내 쌀 산업보호

♣ 향후 과제

-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513%)입장이 반영되도록 이해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국내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영농기술개발 노력 등 적극 추진



우수사례 ① | 쌀 관세화 선언

20년 농정숙제 쌀 관세화 농업계와 소통과 이해로 풀어

우수사례 ② | 쌀산업 발전 대책

쌀 관세화 시대에 대응 소득안정, 경쟁력제고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쌀 의무 수입물량을 매년 약 2만톤씩 늘려 수입함에 따라 '14년의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9%인 409천톤에 이르게 되자, 우리의 쌀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 하기로 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농업계의 강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농업인-정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쌀 관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13년부터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생산자 단체와 관계 부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쌀산업 발전방안을 꾸준히 논의했다. 또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180회 이상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세율 513% 등을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WTO 검증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가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난 20년간의 쌀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14년에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쌀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100만원/ha)와 이모작 직불금 단가(50만원/ha)를 인상하였고,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득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국산쌀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RPC 유통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쌀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로 쌀 수요도 늘려갈 계획이다.

국산쌀에 수입쌀을 혼합하여 부정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쌀산업 관련 '15년 예산을 '14년 대비 1,961억원 증액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쌀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효과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 방지

높은 관세율 부과로 국내 쌀 시장 보호

우리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효과

쌀 농가 소득 안정장치 강화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기반 유지와 소비촉진을 통한 수급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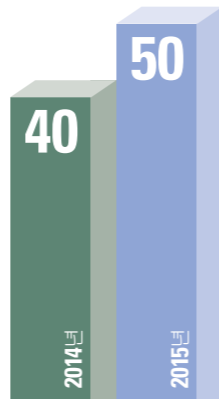
1-2 유희자원을 활용한 식량자급률 제고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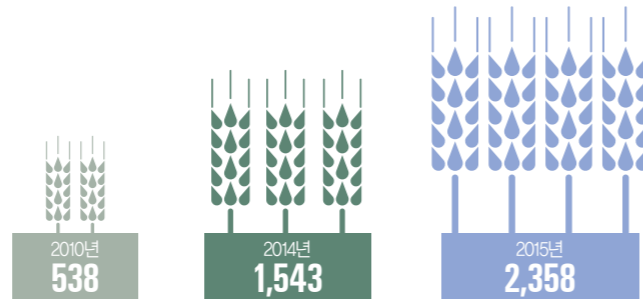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인데도 계속 감소 추세
 - ※ 주요 OECD국가의 식량자급률('13) : 미국 127%, 프랑스 120, 영국 60
 -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이 : ('05) 54.0% → ('10) 54.1 → ('12) 45.7 → ('14p) 49.8
- 자급률이 낮은 맥류와 사료작물은 유희농지에서 재배가 가능함에도 이모작 재배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미흡

♣ 주요 내용

- 겨울철 유희농지 및 간척지 등에서 맥류,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 겨울철 유희농지에서 이모작 재배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신규도입('14) 및 농지 단기 임대차 허용(농지법령 개정, '15)
 - ※ 이모작 직불금: ('14 신규) 40만원/ha → ('15) 50
- '14년 가을 예기치 못한 강우로 가을파종이 어려웠으나 '15년 봄에 보리·밀 등을 적극 파종하도록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 독려하고, 미준공 간척지 등에서의 사료작물 재배 확대
 - ※ '15년 봄파종 면적 : 보리 1,624ha, 밀 691, 조사료 3,543
 - ※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면적 : ('10) 538ha → ('14) 1,543 → ('15) 2,358
- 수확한 밀·보리의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체와 상생협약을 통한 계약재배 등 수요처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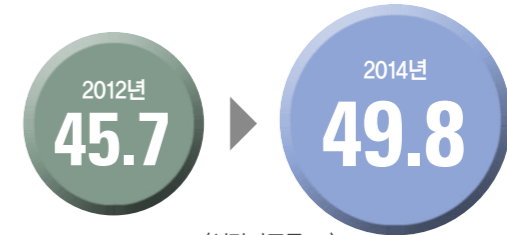
〈이모작 직불금('14 신규, 만원/ha)〉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면적,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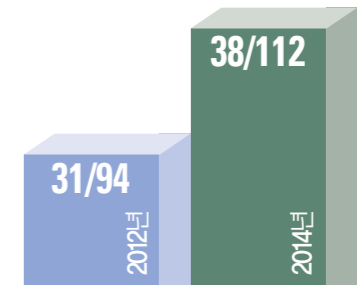
♣ 성과

- 계속 하락 추세였던 곡물자급률이 '14년에는 상승세로 전환
 - ※ 식량자급률 : ('12) 45.7% → ('14p) 49.8
 - ※ 곡물자급률 : ('12) 23.7% → ('14p) 24.0
- 맥류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 확대
 - ※ 맥류재배면적/생산량 : ('12) 31천ha/94천톤 → ('14) 38/112
 - ※ 특히, '15년 봄 파종 확대로 맥류·조사료 재배면적 5,858ha 추가 확보



〈식량자급률, %〉

- 새만금 간척지의 노출지에서 조사료를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비용 절감



〈맥류재배면적/생산량, 천ha/천톤〉

♣ 향후 과제

- 유희농지에서의 작물재배를 위한 기반정비, 신품종 개발 보급, 작부 체계별 영농 매뉴얼 보급 및 농업인 대상 교육 확대 등 필요



우수사례 ❶ | 맥류 봄 파종
**식량자급률을
 높히려는 노력**
**맥류 봄 파종에
 팔 걷어붙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유휴농지 이용률을 높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가을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맥류·조사료 등의 이모작 재배면적이 저조하였으며, 농업인들은 가을파종 중심으로 이모작을 하고 봄파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이모작 면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맥류를 봄에도 파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15년에는 5,858ha에 달하는 봄파종 추가면적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봄 파종 기술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춘파기술' 지도·보급(당초 파종량의 20~30%를 늘리고, 비료의 양을 효율적으로 조절)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봄 파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에 적극 나섰으며, 농협은 봄 파종 면적에서 생산한 맥류 전량을 수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14년에 이모작 직불금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15년에는 ha당 40만원이던 직불금 단가를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이모작 면적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과

- 맥류 재배면적 대폭 확대(5,858ha)
- 답리작 확대 기틀 마련
- 식량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제고



국내 밀 소비량은 '14년 기준 연간 210만톤에 달해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톤에 그쳐 자급률이 1.5% 수준 불과하며, 농가는 밀을 생산해도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상생협력추진본부)는 SPC그룹과 의령군 간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구축을 위한 행복한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15.4.8)하여 우리 밀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소비도 늘려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삼립식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제빵 전문 기업체로서 '15년에 250톤의 조경밀을 포함해 총 4,000톤의 우리밀을 수매하고, '17년까지 조경밀 530톤을 포함하여 총 5,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우리 밀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품질 조경밀 생산·공급을 위해 의령군은 조경밀 특화재배단지가 '15년 150ha에서 '16년에는 200ha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종자개발 및 재배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로 하였으며, 농가는 고품질 밀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국산 밀 수급안정과 생산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❷ | 맥류 판로개척, 기업 협업

**제빵용 조경밀
 특화재배
 SPC그룹 계약재배로
 판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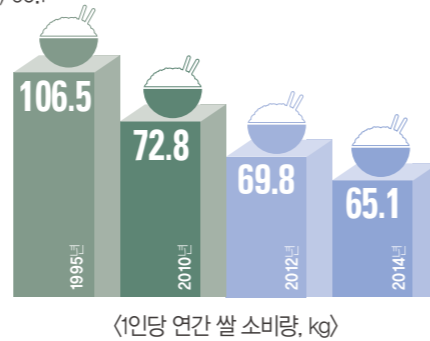
효과

- 신규 수요 창출로 농가 수익 증대
- 기업과 생산농가 간의 매칭 성공 사례
- 농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 가능성 확인

1-3 도시농업 활성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추진 배경

- 농산물 수입 확대, 패스트푸드 시장의 성장 등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kg) : ('95) 106.5 → ('10) 72.8 → ('12) 69.8 → ('14)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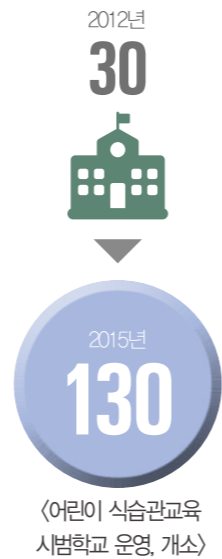


- 국민의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계속 하락 추세이며,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14년 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결과)
 ※ 수입농산물보다 비싼 우리 농산물 구입 의사(%) : ('09) 37.0 → ('12) 34.1 → ('14) 29.5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 (한국) 36.1%, (일본) 63.0%

-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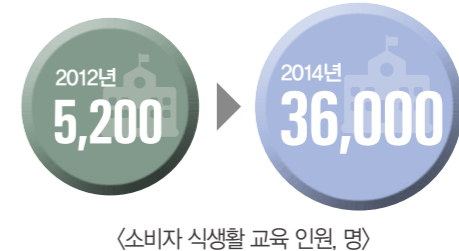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영유아·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실천과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에서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운영 : ('12) 30개소 → ('15) 130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12) 26개소 → ('15) 55
 ※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 접속 인원 : ('12) 168천명 → ('14) 378
-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농식품 안전·소비·식생활 정보 제공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전국적 붐 조성



성과

-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소비자 수 대폭 증가 및 농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 소비자 식생활 교육 인원 : ('12) 5,200명 → ('14) 36,000



- 도시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과 먹을거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농간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
 ※ 도시농업 참가자 수 : ('12) 76.9만명 → ('14) 108



향후 과제

- 소비자 참여형 식생활소비 정책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 개발 필요
- 도시농업의 범위를 생활원에·원예치료 등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소재도 양봉·곤충·소동물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우수사례 ① | 식생활 교육 확대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여든까지 이어지는
 식습관**

영·유아기에 형성된 입맛이 평생의 입맛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먹을거리가 가정에서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3동 어린이집에서는 원내 텃밭에서 아이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해 요리를 만들고 있다. 급식메뉴를 구성하는 식재료와 영양소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도봉구 창3동 어린이집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이 강화되면서 인근 지역에 어린이 식습관교육 시범학교가 늘어났고 우리 농식품 정보에 대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전한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가 준비하고 있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이는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해 관심과 실천을 높이게 된다.

효과

아침밥 먹기 실천율 증가(%): ('12) 33 → ('14) 90

어린이집 김치 급식량(kg/연간): 600(보통 어린이집 200~300)

영유아기 식생활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시에서 작물재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빌딩과 도로로 뒤덮인 도심에서 텃밭을 가꿀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의 아이들이 정겨운 농촌 풍경과 자연의 싱그러움에 익숙하게 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 빈터가 텃밭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을 친환경도심 텃밭으로 조성하는 ‘그린벨트 텃밭’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분양한 바 있다.

경기 과천시 문원동에는 ‘꿈틀어린이텃밭학교’를 열고 50여 명의 어린이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직접 기른 채소를 거둬들이는 ‘텃밭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부모, 친구와 함께 가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오이, 당근, 호박 등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수사례 ②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 빈터
 ‘꿈틀어린이텃밭’
 우리 농산물
 애정으로 가득**

효과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

농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1-4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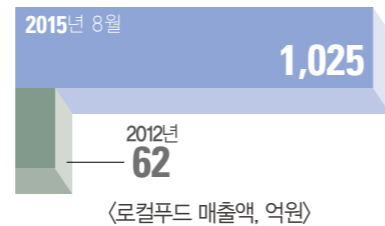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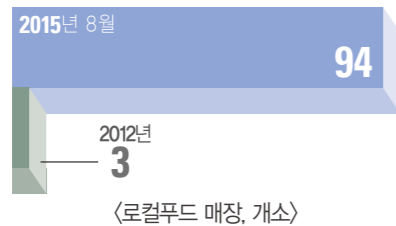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변화

♣ 추진 배경

- 농산물유통 경로의 복잡성, 도매시장 중심의 고착화된 유통구조 등으로 유통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
- 생산자는 적게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생산자 모두가 불만 제기
-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질적 난제로 존재
- 박근혜정부 출범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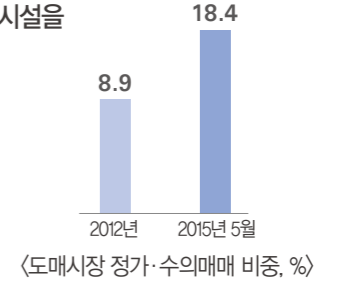
- 유통경로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직거래형 로컬푸드 판매망을 지속 확충하고, 직거래를 뒷받침할 법령 제정
 - ※ 로컬푸드 매장/매출액 : ('12) 3개/62억원 → ('13) 32/316 → ('15.8) 94/1,025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5.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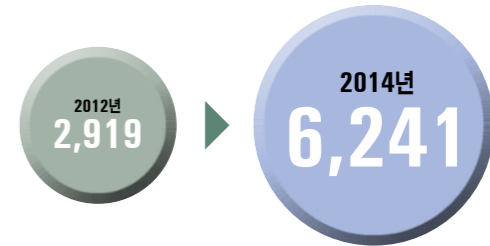
- 포스몰(POS-Mall) 등 ICT 기반의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개발하고,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 개국('15.7) 등 다양한 유통경로 도입
 -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 ('12) 11,146억원 → ('14) 22,131(수산·가공품 포함)

- 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경매 이외의 정가·수익매매 거래 활성화
 - ※ 농협 도매사업 실적 : ('12) 9,596억원 → ('14) 10,074 → ('15.8) 7,922(전년 동기 대비 12.2% 증)
 - ※ 정가·수익매매 비중 : ('12) 8.9% → ('14) 14.1 → ('15.5) 18.4



♣ 성과

- 새로운 유통 경로의 비중이 확대되고, 유통경로 단축 및 유통 경로간 경쟁 등으로 약 6,241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 ※ 新유통 비중 : ('12) 8.4% → ('13) 10.9 → ('14) 14.4
 - ※ 유통비용 절감액 : ('12) 2,919억원 → ('13) 4,291 → ('14) 6,241



♣ 향후 과제

-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지속 확대 및 ICT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직거래 모델 개발·보급 필요
- 지역 및 주산지 중심으로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산지 조직화·규모화·특화 유도
- 주산지 단위농협, APC 및 물류센터 활성화 등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① |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직거래 확대
농산물이 가는
새로운 통로
대기업 유통망으로
개척**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했다라도, 마케팅·디자인·브랜딩 등 유통 노하우가 부족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MOU를 체결하여 농식품 유통경로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마트는 '국산의 힘'이라는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발굴하여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개별농가가 하기 어려운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전국에 위치한 이마트 지점과 온라인 이마트몰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판매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경영 컨설팅과 해외 선진지 연수 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을 인정받은 농산물은 이마트의 농식품 전용 판매대에서 다채로운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판매를 확대하며, 온라인을 활용한 직거래 방식을 유통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은 농업인에게는 큰 소득이 될 수 있다. 농식품 유통분야에서의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은 농업인이 생산한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소비 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

- 농가 수입 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산물 유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농업경영 및 품질 개선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은 기존 5개 직매장 외에도 2010년부터 '건강한 밥상 꾸러미'라는 농식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각 가정에 월 2~4회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인데, 완주군 관내에서 약 400여 농가가 신선농산물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기 교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꾸러미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회원 수(현재 3,500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신선농산물을 편리 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며, 영세·고령 농업인들도 제 값 받고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직거래 모델이 더욱 확산되도록 직거래 사업장 인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

**밭에서
우리집 문 앞까지
직접 달려오는
농산물**

효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건강한 농식품 공급
- 농업인의 안정적 수익, 일자리 제공
- 영세농업인의 소득 증대



1-5 생산자·소비자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농산물 생산량은 기상영향을 많이 받으며, 저장성이 낮아 가격의 급등락이 심한 특성
※ '10년의 경우 배추 가격이 하루만에 전일 대비 54% 급등, 다음날은 34% 급락 사례 발생
- 그동안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주도로 단기효과 위주의 인위적 수급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농정신뢰도 저하
 - TRQ·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임시처방적 농산물 수입시 산지가격을 교란하고, 가격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비판 제기
-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

♣ 주요 내용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전문가 등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수급조정위원회('13.4)' 및 한·육우, 돼지, 닭 등 6개 축종별 '축산물 수급조정협의회('13.6)' 설치·운영
※ 운영실적 : ('13) 32회 → ('14) 47회 → ('15.9 현재) 23
- 농산물 : ('13) 8회 → ('14) 13회 → ('15.9 현재) 6
- 축산물 : ('13) 24회 → ('14) 34회 → ('15.9 현재) 17
- 2013년 32 → 2014년 47

〈운영실적, 회〉
- 가격 변동률이 큰 주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도매 가격을 기초로 가격안정대를 설정,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시장 가격에 따른 위기 단계별로 선제적 대응
 - 정부와 관련기관·단체의 역할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투명성·신뢰도 제고

- 할당관세 등을 통한 물가안정 목적의 임시처방적 수입관리 조치 자제

♣ 성과

-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 진폭이 크게 감소되어 물가안정에 기여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12) 14% → ('13) 12.9% → ('14) 9.8%
- 2012년 14.0
2014년 9.8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 '15년은 어려운 여건에도 무, 배추 등 21개 주요 농산물 중 12개 농산물이 평년 가격 대비 20% 범위 내에 있고, 극심한 가뭄으로 수급이 불안했던 배추는 조기에 평년 가격 수준으로 안정화('15.7)
 - 축산물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급불안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가격안정 및 재정비용 절감
※ (돼지) '13년 민간 자율 모든 감축(13만두)으로 가격 조기 정상화 : ('13.3) 24만원/두 → ('13.12) 33(경영비 28)
※ (닭) '14년 AI 발생시 업계 자율비축('14.5, 111만수)으로 '08년 AI 발생시 지원한 수급 대책(수매) 대비 약 556억원의 예산 절감
 - 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임시처방적 수입 조치는 최대한 자제하여 농산물 수급정책의 신뢰도 제고
※ 박근혜정부 출범('13.3.25) 이후 가격이 평년대비 56%·10% 올랐던('15.6.19기준) 양파·마늘 이외에는 수급안정을 위한 TRQ 증량 사례는 없음

♣ 향후 과제

- 사전 수급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출하안정제 도입 등으로 주산지 중심의 수급 조절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수급조절 역량 강화



우수사례 ①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쌓는
 농산물 수급
 신뢰 돌다리**

과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단기효과 위주의 수급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할당관세 등을 이용한 임시처방적 수입시에는 산지가격 교란 및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박근혜정부 농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품목별로 최근 5년간 도매가격을 기초로 월별 가격대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미리 준비된 대응방안을 적용해 수급불안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지원과 함께 수입보장보험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 결과, 올해 5월 월동저장·봄배추의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도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을 통해 배추가격을 신속히 안정시킬 수 있었다.

효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기반 유지

농산물 수급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수급정책 신뢰도 상승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 및 가격안정화 기간 단축

한우는 임신에서 출하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가축보다 상대적으로 긴 4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는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등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한우산업의 급격한 변동성은 한우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격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참여 하는 '한우수급조절협의회'를 출범하여 상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한우 생산 농가는 수요가 몰리는 명절을 대비하여 소비자 가격대를 낮추고자 자율적으로 출하 물량을 급격히 늘리고, 수도권외의 3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할인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우량 송아지 공급 체계 및 대형 패커 육성, 적정 사육 마릿수 재설정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례 ② | 한우수급조절위원회
**반복되는
 한우 가격등락
 농가와 소비자가
 붙잡아**

효과

한우농가 경영안정

적정 사육두수 유지, 장기적 수급안정

한우 가격 안정화에 기여

1-6 산지생태축산의 활성화

♣ 추진 배경

- 축산업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 불안이 내재
- ※ 축산비 중 사료비 비중('14) : (한우) 44%, (젖소) 55%, (돼지) 56.7%



〈축산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14), %〉

- 민가와 가까운 농장은 악취에 의한 민원이 빈발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증가
- 국토면적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산지를 활용하여 사료문제, 악취문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등을 동시에 해결 가능

♣ 주요 내용

-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고 방목 허용면적을 3ha → 5ha로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산림청 협업)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을 선정하여 운영 사례집 및 매뉴얼 발간
-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 ('14) 8개소 → ('15) 18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개소〉

※ 산지생태축산 우수사례집('13.12) 및 운영매뉴얼('14.12) 발간(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초지용 목초 신품종 이용 리플릿 발간('15.6,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산지생태축산 모델 및 사육기술개발
- ※ (산림청) 밤나무·대추숲, 고로쇠 조림지 등 활용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14~)
- ※ (농촌진흥청) 산지생태축산 사육기술 개발('14~)

♣ 성과

-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산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범농장 선정 및 기술개발 등으로 한국형 친환경 축산 모델로서의 산지생태축산 확산을 위한 기틀 형성

♣ 향후 과제

- 수종에 따른 산지축산 모델개발 확대 및 산지에서의 사료작물 재배기술 개발 필요
- 임간 방목지 내에서의 목초종자 파종행위를 일시사용 신고로 완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개선 필요

우수사례 ① | 금산 이담 산양농장

넓은 산지에서 뛰노는 산양 산양유 생산에 체험관광을 더해 소득 UP

효과

산지축산의 관광자원화

가공품 생산 · 판매로 경쟁력 강화

산지생태축산을 6차산업으로 발전

충남 금산의 이담목장은 20ha의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400여두의 유산양을 자연 방목하는 농장이다. 이 목장에서는 초지의 구획·구분 관리를 통해 일정한 방목 환경을 유지하고, 방목장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아름답게 가꾸 동물복지 실현하며, 유산양 퇴비를 활용해 수목을 재배함으로써 축산폐기물 제로(Zero)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담목장에서 생산된 산양원유는 옥천에 있는 (주)이담 공장에서 발효산양유와 산양요구르트로 가공·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0.6ha 규모의 관광농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영농체험시설 및 민박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담목장을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산림청과 협업하여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은 축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과 질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실현, 힐링관광 상품화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등의 가능성이 높다.



충북 충주 보늬숲 밤농장은 충주에서 3대째 30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해 온 전업농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ha 면적에서 30여 톤의 친환경 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밤나무의 노령화와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잦은 기상이변과 풍흉으로 농가소득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던 중, '1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복원한 토종닭을 밤나무 재배지에 풀어놓았더니, 닭이 해충이나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료비가 절감되고 닭고기 육질은 오히려 좋아졌다. 닭이 배출하는 분뇨는 밤나무의 거름이 되어 밤알이 굵어지고 수확량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해충이 사라진 밤나무 밑에 산채를 심어 새로운 소득원도 개발하였다.

가을철에만 수익을 내던 밤농가는 임업과 축산업의 융합을 통해 봄에는 산채, 여름에는 닭고기,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달걀 등 사계절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사육 기술을 개발하고, 산림청은 대추숲, 고로쇠 조림지 등에서의 산지양계 모델을 연구하는 한편,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충주 보늬 밤나무 숲 양계농장

밤나무 숲에서 키우는 토종닭 밤알은 튼실하게, 닭 육질은 쫄깃



효과

밤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다각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실현

친환경 순환농법 실현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례

농업경영체를 조직화하고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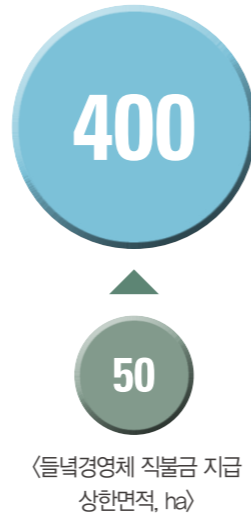
2-1 들녘경영체의 확대 및 활성화

♣ 추진 배경

- 논 농업은 개별농가 단위의 경영구조로써 고령화 극복, 경영구조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수급안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 들녘단위로 다수의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하여 공동경영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가능
- '09년부터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공동경작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 일정수준 성과가 있으나,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

♣ 주요 내용

-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영농법에 지급하는 직불금 상한면적을 대폭 확대(25인 이상이면 50ha → 400)
- 농지 집단화 요건과 RPC 연계 의무를 완화하고, 지원 장비 종류 확대
-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업경영의 개념, 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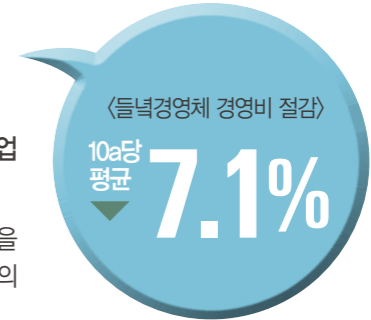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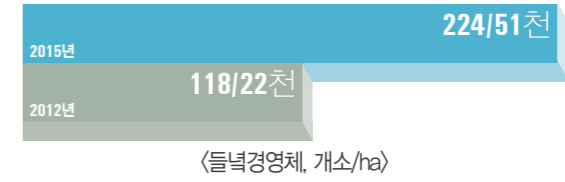
♣ 성과

- 들녘경영체 수가 크게 증가되고, 경영비 절감 등의 성과가 가시화

※ 들녘경영체 수
: ('12년) 118개소, 22천ha → ('15) 224, 51

※ 농지 이용의 규모화
: (개별농가 평균 농지면적) 1.2ha → (들녘경영체 평균) 228

※ 경영비 절감: 10a 당 평균 7.1%의 생산비 절감



- 공동경영 범위가 단순한 논 농업을 넘어 다양한 소득 사업으로 확대
- 자급률이 낮은 보리·밀 등 동계작물 이모작 추진, 쌀 생산을 줄이고 논콩·조사료 등 생산 확대, 1차 산물 생산 중심의 경영체가 농산물 가공·농촌체험 등 경영 형태 다각화

♣ 향후 과제

- 잉여 자원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추진
- 들녘경영체의 수익모델을 통해 젊은 인력의 농업·농촌으로 신규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경제에 자본 투입을 활성화
- 귀농·귀촌자, 외부로 유출되었던 후계 농업인들이 들녘경영체를 통해 농촌으로 유입되어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 및 지역활성화 촉진
- 논 농업 위주 → 과수·채소 등의 주산지에 대해서도 조직화·규모화 촉진 필요



우수사례 ② |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
**쌀 + 한우식판장 +
 수제맥주 + ...
 들녘경영체의
 끊임없는 진화**

영실영농조합법인은 지리산 아래의 산간 지역인 경남 산청군에서 벼농사를 짓던 131개의 소규모 농가들이 모여 조직되었다.

이 법인은 '09년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영농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들녘경영체사업'과 결합하여 '경축 순환형 복합영농'을 시도하였다. 182ha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겨울철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수확후 남은 볏짚과 조사료는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축분은 논외의 지역증진을 위한 퇴비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한우농가와 협업을 통해 한우식판장을 함께 운영하여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직접 재배한 맥주보리를 이용하여 수제맥주 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해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들녘경영체를 만들기 전에는 131농가가 논농사 위주로 19.4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금은 49.6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농가는 공동영농에 따라 절감되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딸기 등 다른 농사를 하면서 소득을 추가하고 있다.

들녘경영체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중소농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효과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유유 노동력 활용 6차산업화 추진

경쟁력 강화

우수사례 ① |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
**공동경작으로
 비용 '뚝', 소득 '쑥'
 들녘경영체의
 야심찬 도전**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은 우리나라 서남부의 전형적인 평야지역인 익산에서 30·40대 초반의 젊은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가업을 승계한 젊은 농업인들로 전직 토목엔지니어, 대기업 사원, 학원강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교육·컨설팅을 받은 후 '들녘경영체'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광역 방제기를 지원받는 등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남은 노동력으로 겨울엔 밀, 보리와 조사료를 재배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그루영농조합은 인근의 농업계와 연대하여 '맥류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생산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었으며, 시장교섭력이 강화됨에 따라 생산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들녘경영체는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 규모화 영농을 통해 비용을 절감, 농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등 개방화시대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 한계 극복

2-2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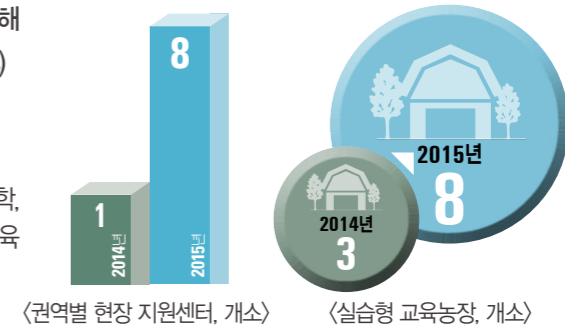
-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농촌인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토지,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ICT를 비닐하우스·축사 등에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 폰과 PC로 언제 어디서나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고급화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유리
- 스마트팜 모델이 검증되었거나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ICT융복합 기술을 확산하여 보급하고, 농식품 분야와 융복합하는 ICT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주요 내용

- 원예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을 확산 ('13 신규 : 345ha → '15 : 755)하고, 스마트 축사는 기존 양돈에서 양계·낙농·한우 등으로 축종 확대
- 우리나라 기후온실재배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참외·수박농가 대상 단동형 스마트온실 표준모델 개발('15.6) 및 연동형 스마트온실 모델개발 등 추진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 및 시설원에 환경가이드라인 자료집 배포('15.2)



- 농업인들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현장지원센터('14: 1개소 → '15: 8) 및 현장 실습형 교육농장 지속 확대 ('14: 3개소 → '15: 8)
- ICT활용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토마토대학, '15.7~11) 운영,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15.8~9) 및 방문연수('15.10)와 연계 추진



성과

-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전남 화순 한울 토마토농장 : 생산량 40% 증가, 노동력 50% 절감
- 담양 원스베리 딸기농가 : 생산량 30% 증가, 노동력 20% 절감



향후 과제

- 스마트 팜 관련 센서·제어기 등 핵심기기의 국산화·표준화를 통한 단가 인하 및 성능 향상으로 관련 ICT 기업의 경쟁력 강화
- 품목별 특성 및 조건에 최적화된 생육관리 S/W 개발·보급
- 스마트 팜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컨설턴트 및 지도공무원 등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



우수사례 ① | 성주 도흥정보화영농조합법인

스마트 팜을 만난 참외 생산량은 UP 노동력은 DOWN

효과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

편리한 농업으로 삶의 질 개선

성주군 도흥리 22개 농가가 공동으로 설립한 도흥정보화영농조합법인은 '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기획 공모에 선정되어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참외농가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여 참외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건강도 체크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외 시설하우스 내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되며, 생산농가 이력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생산된 참외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직거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리고 참외 농업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치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마을방송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주 참외 시설하우스 농업을 스마트 팜을 통해 정밀하게 관리하면 생산량은 5톤에서 6.5톤(1동, 200평 기준), 매출은 30%(10백만원 → 13) 증가하고,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시간 이상 감소되어 생산비는 평균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외 농사로 1천여 농가가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성주군에 스마트 팜이 확산되면,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편리한 농업을 영위하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ICT융복합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첨단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 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교육하기 위해 '15년에 '품목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4개 권역(경기·충청/강원/영남/호남)별 토마토 시설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토마토대학)하고 있다. 생산성 40%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현장실습, 컨설팅 및 해외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핵심기술을 전수하고 ICT 첨단시설 농장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가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과정에는 자부담(2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2.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농업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토마토대학'의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4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특화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품목특화 전문인력 양성

세계 최고 '토마토 스마트 농장' 전문가 토마토대학에서 양성

효과

토마토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토마토 재배 농업경영인 역량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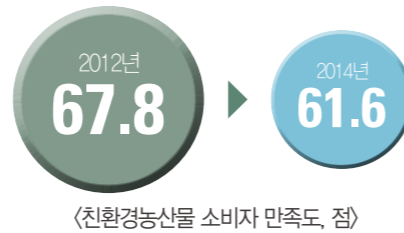
토마토 스마트팜 확산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

2-3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 추진 배경

- 소비패턴의 고급화, 환경·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소비자의 친환경 농식품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이 중요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친환경농업이 많은 성장을 해 왔으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으로 신뢰도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고, 농가의 판로확보 어려움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오히려 감소
 -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2) 67.8점 → ('14) 61.6
- 친환경농식품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부족한 부분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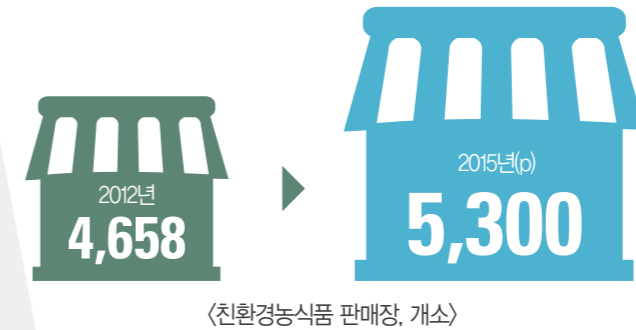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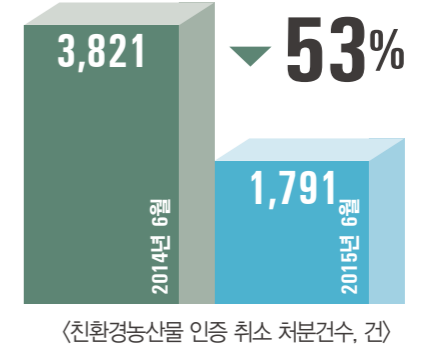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철저한 인증관리 추진
- 인증과정에서 민간인증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중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및 자재 품질검사 확대 등
-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년→8), 기술 개발·보급 등 추진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구축

♣ 성과

-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인증관리로 부실인증 사례 감소 추세
 - ※ 인증 취소 처분건수 : ('14.6) 3,821건 → ('15.6) 1,791(전년대비 53% 감)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확충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 ('12) 4,658개소 → ('14) 4,954 → ('15p) 5,300



♣ 향후 과제

- 그동안 추진했던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강구
 - ※ 부실인증시 재지정 신청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위반자의 인증기관 임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등 민간 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
- 친환경농식품 소비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사례 ① | 친환경농산물 인증 강화
**꼼꼼하고 깐깐한
 이중 점검 장치
 친환경농식품
 신뢰성 제고**



효과

친환경농식품 만족도 제고

전년대비 인증취소건수 53% 감소

친환경농식품 품질향상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지만 친환경 인증마크가 있는 농산물이 진짜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재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매번 구매를 망설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민간인증기관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2중 점검 시스템'으로 인증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결정하였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재배면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부실인증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부족한 부분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소비자들이 100%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B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소매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유통시설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 광주에 정부에서 건립을 지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센터 입주를 결정했다.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관행농산물과 혼입될 걱정 없이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고, 사무실, 전처리 시설, 국가공인 안전성분석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센터사용료를 인하하고, 냉동창고를 증설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여, '13년 대비 20%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충북 오창농협도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시설로 SK그룹과의 꾸러미 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인 전남(나주시)에도 총사업비 289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6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우수사례 ②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종합물류센터
 확충으로 뒷받침**

효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경기물류센터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매년 100억원 증가
 * ('13) 1,000억원 → ('14) 1,100 → ('15p) 1,200

2-4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추진 배경

-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 한-칠레 FTA이후 '12년까지 8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도 발효타결('13~'15)
- 한편, FTA확대 등에 따른 개방화는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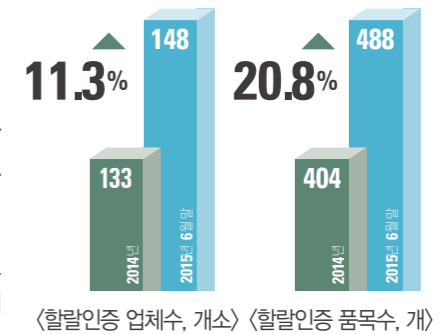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한-중 FTA협상과정에서 약 180여회의 전문가회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및 비농업인과의 이해와 소통 강화
- 중국·할랄시장 등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및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수출현장 애로 해소
- 마케팅·홍보 국내·외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홍보를 강화하여 중국 등 주력시장 진출 지원
 - ※ (온라인) 中 알리바바('14.10), 티몰('15.5)에 한국 식품관 개설 / (K-Food fair) 수출상담회 및 소비자 체험행사 개최('13년 4개국 5회, '14년 4개국 7회, '15.8월 2개국 2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13년 189회 '14년 199회, '15.8월 147회) 등
- 보험·통관 완전보장 환변동보험 도입('14.1), 수출보험 지원한도 상향(1천만원→3, '14.8), 환변동보험 지원율 상향(90%→95, '14.10), 中文 라벨제작 지원('14.9~), 정부주도 하에 수출업체의 '對日 수입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14년~)
- 할랄대책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15.3.5), 민·관 할랄식품 협의체('15.3~8, 7회)를 통해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 수립('15.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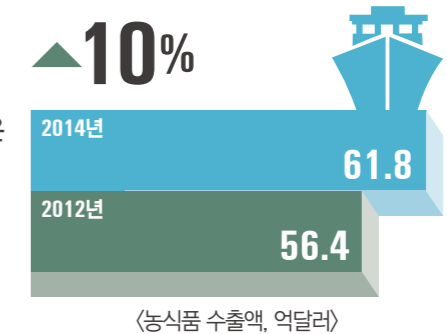
※ 할랄인증 업체수 : ('14) 133개소 → ('15.6) 148(11.3% 증)
 ※ 할랄인증 품목수 : ('14) 404개 → ('15.6) 488(20.8% 증)

- 농업계와 기업계가 갖고 있는 역량 및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
 - 상생협력추진본부(대한상공회의소, '14.9) 중심으로 농산물 구매·가공·수출·종자 등 상생협력사례 발굴('15.8, 29건) 및 성과 확산



♣ 성과

-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9~27%)
 - ※ 농식품 수출액 : ('12) 56.4억달러 → ('14) 61.8(9.5% 증)
 - ※ '12~'14기간 중 수출 연평균 증가율 : (국가 전체) 2.3%, (농식품분야) 4.8%



♣ 향후 과제

- 엔화(일본)·루블화(러시아) 가치 지속 하락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관련 현장 애로사항 파악·해소 추진 필요
- 주요 수출국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 증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범부처 협업 대응 필요



우수사례 ❶ | 생들깨 기름 최초 수출기업 (주)코메가
수출로 변신한
들깨 기름
체험관광으로도
효자 역할 톡톡

들기름은 대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내지만, 전통방식의 들기름은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짜서 기름을 내는 것이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주)코메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방식으로 생들깨기름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생들깨 착유 공정, 들깨차 제조 등 관련 특허도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FDA의 ISO 인증도 획득하여 현재 생산량의 95% 이상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주)코메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일본·중국·대만 등)을 받아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최근 들깨의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보다 훨씬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본·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 금년에는 지난해의 13만달러보다 크게 높은 200만달러를 수출목표로 설정했다.

들깨 원료를 인근 농가들과 계약재배하여 조달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들깨 '생산·가공·체험·관광'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자 인증을 받았다. (주)코메가 대표 정OO씨는 '15년에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까다로운 가금육 위생관리 기준(미국), 해외 유제품 등록제 시행 및 한국산 과실 수입 제한(중국) 등으로 난관을 겪어왔던 삼계탕과 우유, 포도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출통관이 까다로운 비관세장벽 품목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수출업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상대국과 협상해왔다.

또한, K-Food Fa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계탕(미국), 우유·포도(중국), 유제품(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신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15년 8월말 기준, 삼계탕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유제품은 20%가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수사례 ❷ | 수출 위생·검역 애로 해결
까다로운
위생·검역장벽
민관 협업으로
돌파



- 효과
- 삼계탕·막걸리·유제품 등 수출 확대
 - 위생·검역 등 농식품 수출 현장 애로 해결
 -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확산

효과

- 전통 들기름 수출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 들깨를 이용한 6차산업화 실현
- 들깨 생산 기술발전

2-5 식품 및 외식 산업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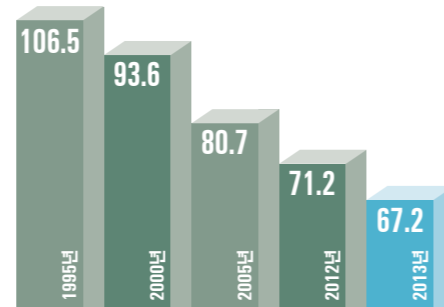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은 농업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 요소

※ '13년 식품 및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약 156조원이며, 연평균 6% 성장

- 그러나, 식품원료 중 국산원료 이용 비율이 31.2%('13)에 불과하고, 쌀을 포함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 1인당 쌀 소비량 : ('95) 106.5kg → ('00) 93.6 → ('05) 80.7
→ ('12) 71.2 → ('13) 67.2



-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산 농축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정책 수립) 범정부 차원의 식품산업·안전·국민건강을 포괄하는 '신식품정책'('14.3) 및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쌀 가공산업 5개년 계획'('14.10) 수립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 7대 분야 35개 과제 추진

- 또한, '한식정책 발전방안'('14.1),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14.2),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15.4) 등을 통해 한식·외식산업의 정책적인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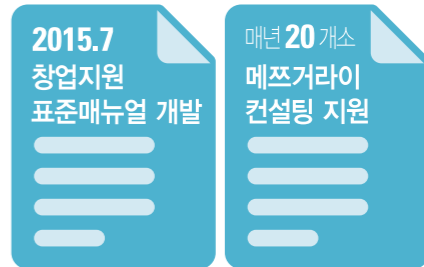
- (기반 구축) 원료농산물 정보DB 구축('15.6), 용도별 쌀 품종 개발*(계속), 인삼제품 CODEX 세계규격화** 승인('15.7),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신설('13.10) 등 추진

※ '15년 기준, 국가품종목록등재 241개 벼 품종 중 가공기능성 등 특수용도 품종 68개

※※ 김치('01)에 이어 우리나라 2번째 승인 품목(향후, 고추장·된장 규격화 추진 예정)

- (육성 지원)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 쌀 가공품 판로확보 등 쌀가공업체 육성,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창업 지원** 등 추진

※ 식품외식종합자금 금리 인하(3~4% → 1.8~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일몰 연장('15.말 → '16.말)
※※ 창업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15.7), 메뜨거라이 컨설팅(매년 20개소) 지원 등 추진



♣ 성과

- 식품·외식산업의 매출 규모 확대 및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

※ 식품·외식산업 매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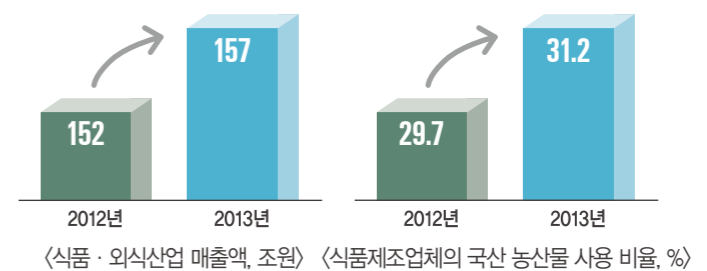
: ('12) 152조원 → ('13) 157

※ 외식기업 해외진출 점포수

: ('12) 1,484개 → ('15.6) 3,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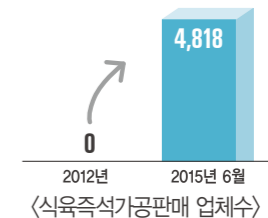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 ('12) 29.7% → ('13) 31.2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규제개선 등으로 창업 및 일자리 확대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업체수 : ('13) 0개소 → ('14.10) 4,818



♣ 향후 과제

-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 확대

우수사례 ① | 평택 미듬영농조합법인의 쌀 가공업

스타벅스와 항공기에도 오르는 친환경 쌀로 만든 쌀 과자

효과

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쌀 가공품 판로 확보

평택의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쌀을 껄, 견과류 등과 섞어 달콤한 쌀 스낵으로 제조하여 현재 주문자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 스타벅스, 아시아나항공 등에 납품하고 있다.

미듬영농조합법인이 스타벅스를 통해 판매한 쌀 가공품 매출액은 지난해에만 무려 415억원에 달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쌀 가공품을 판매하여 얻은 부가가치는 일반 쌀로 판매할 때보다 1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국내 농산물로 만들어진 가공품이 팔릴 때마다 100원씩을 적립하여 농업인 지원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넣은 친환경 비료를 농가에 제공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듬영농조합법인은 벼를 재배할 때,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 가공용 쌀을 생산하여 쌀 과자를 만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13.10)으로 정육점에서도 수제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적었던 국내산 저지방육을 사용하여 수제햄, 수제소시지 등 풍미가 뛰어난 고품질 육가공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일식 정육점인 메쯔거라이(Metzgerei)를 레스토랑과 접목해 한국 스타일에 맞게 변형한 '어반나이프(Urban Knife)', 식육즉석가공을 통해 제품군을 다양화한 '김동성 미트 델리샵(Delishop)', '화양수퍼' 등이 등장하고 있다.

'어반나이프'의 경우 '13년 1개 매장에서 시작하여 현재 8개 매장으로 확대되었고, 화양수퍼 등도 식육가공판매업으로 전환 후 월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식육즉석가공판매업의 등장은 작은 규제 개선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수사례 ②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어반나이프'

정육점 가시 규제 없애니 고급 햄, 소시지 가공품 창업 급증

효과

식육판매점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외식산업의 새로운 유형 창조

저지방육 수요 확대, 축산물 균형 소비



2-6 농자재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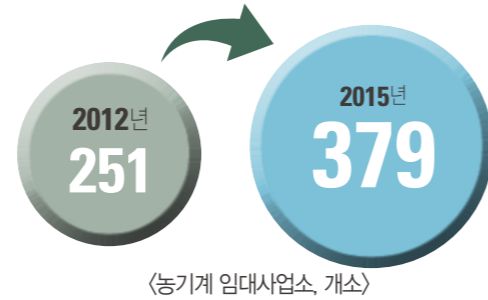
육성 및 이용 효율화

♣ 추진 배경

- 농가의 경영비에서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담으로 작용되어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자재 비용 절감이 중요
- 아울러, 농업인의 고품질 종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종자 수입(양파 '13년 85%)에 의한 로열티 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 종자 개발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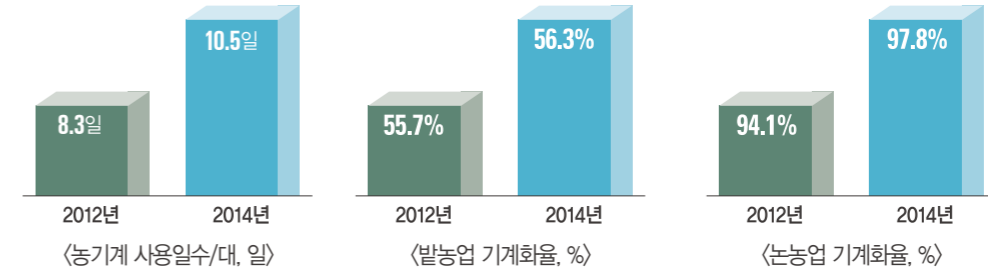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소 확대를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소 : ('12) 251개소 → ('13) 294 → ('14) 336 → ('15) 379
- (친환경 비료지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확대
 - ※ 유기질비료 지원(예산) : ('12) 1,350억원 → ('13) 1,450 → ('14) 1,600 → ('15) 1,600
 - ※ 토양개량제 지원(예산) : ('12) 756억원 → ('13) 756 → ('14) 640 → ('15) 642
- (종자 개발) 수입대체 품종개발 및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골든시드 프로젝트 및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을 통한 수입대체 품종 개발
 - ※ 주요품목 : 양배추,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버섯, 딸기, 백합, 장미, 국화, 난, 참다래
 - 종자기업의 품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 위치(전북 김제시), 규모(54.2ha, 20개 기업 입주), '16년 완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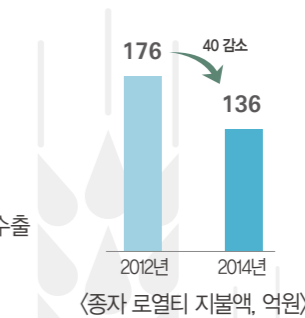


♣ 성과

-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로 농기계 이용효율화 및 발농업기계화 촉진
 - ※ 농기계 사용일수/대 : ('12) 8.3일 → ('13) 9.5 → ('14) 10.5
 - ※ 발농업 기계화율 : ('12) 55.7% → ('14) 56.3
 - ※ 논농업 기계화율 : ('12) 94.1% → ('14) 97.8



- 유기질비료 등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 ※ 화학비료 사용량 : ('12) 267kg/ha → ('13) 262 → ('14) 258
- 국산 신품종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및 농업인 로열티 절감
 - ※ 파프리카 양파 등 105개 품종을 개발, 56억원 수입대체, 8백만달러 수출
 - ※ 농업인 로열티 지불액 : ('12) 176억원 → ('14) 136(40 감)



♣ 향후 과제

-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구입단가 인하 및 물류비 절감 추진(농협이 3개소 추진 중, '17년 완공 목표)
- 지속적인 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종자로열티 부담 경감 및 종자 수출 확대



우수사례 ① | 합천군 농기계임대사업

다양한 농기계 750대 공동이용 일손 부족, 영농비 부담 덜어



효과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사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경상남도 합천군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가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부 보조지원 받아 총 92개 기종 750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12년 2,961건이던 농기계 대여실적이 '13년 4,077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같이 농기계 임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보관과 수리비용도 아낄 수 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농기계 임대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는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사례 ② | 골든시드 프로젝트

종자 국산화 박차 로열티는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양파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나, 종자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양파 종자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종묘에서는 '13년에 'e-조은플러스' 양파 종자를 개발하였다. 이 종자는 추대에 강하고 저장성이 좋아 국내에서 수입 양파 종자를 대체하는 동시에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민·연·관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한 국산 종자가 개발되어 '12년 176억원이었던 종자 로열티 지불액이 '14년에는 13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13년에 국내 토종 종자기업인 (주)농우바이오를 인수한 바 있다. 농우바이오의 기술력과 농협의 역량이 연계되면 종자산업의 경쟁력이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

양파·토마토·양배추 등 국내종자의 수입대체 효과

농업인 로열티 부담 경감

종자 국산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 생산환경 조성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
직불금 지원 확대,
가축질병 대응체계 선진화 등으로
농가소득 · 경영안정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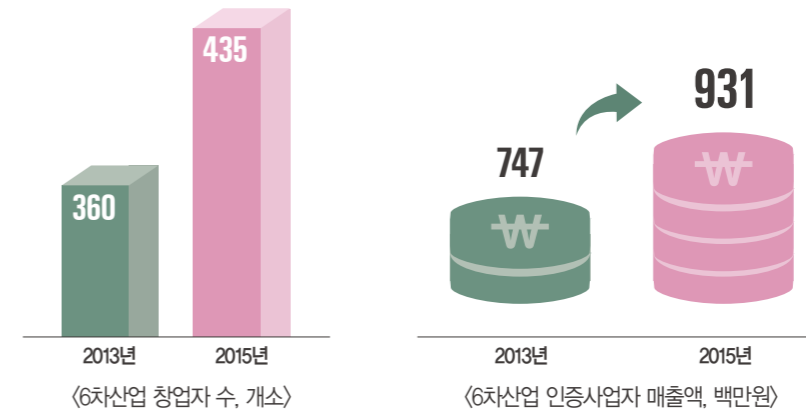
-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개방화 등에 따라 영농규모가 적은 중소농은 농업생산 활동만으로는 도시수준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경영비용 절감 및 농산물 가격 상승, 직불제 등에 의한 소득증대는 한계
- 이에 우리 농산물과 지역자원, 체험외식관광 등을 융·복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

♣ 주요 내용

- 경영체의 사업유형,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창업코칭, 자금지원, 컨설팅 및 판로개척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주산지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9개소)하고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특화품목 중심의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9개소)에서 기술·경영·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가 풀(센터별 40~70명)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에서 기술개발·이전·표준화 등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제품 제작 및 관련 시설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혁신센터의 주요 테마와 연계한 협업과제를 발굴(7개)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 성과

- 6차산업 창업자 수 및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
- 6차산업 창업자 수 : ('13) 360개소 → ('14) 392 → ('15) 435
- 인증사업자 매출액 : ('13) 747백만원 → ('14) 831 → ('15) 931



-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15.4월), 식품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규칙 제정(98개 시군),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등 현장 규제 개선

♣ 향후 과제

- 창업지원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6차산업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고 전용 판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지원하여 6차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우수사례 ① | 예산 은성농원 사과와인

사과농장+와이너리 +체험관광 6차산업 매출 '쑥쑥' 일자리 '쭉쭉'

사과 생산으로 유명한 예산에는 사과밭과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사과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은성농원이 있다.

은성농원은 30년 이상 사과를 재배한 장인과 와인제조 기술을 공부한 사위가 만나 최고 품질의 명품 사과와인을 생산하여 사과의 6차산업화를 실현하면서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ha 부지에 줄지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5,000여 그루의 사과나무에서는 연간 40~50톤의 사과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사과는 '추사 사과와인'으로 가공·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3만명 이상의 인원이 와이너리 투어와 사과파이, 사과잼 등을 체험·관광하러 이 농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 사과생산 활동을 6차산업화 하면서 매출도 3~4배 늘었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은성농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4년에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어 체험프로그램 개선, 홍보 등을 지원받는 한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효과

연매출 6.3억원, 일자리 창출 90여명

가족구성원간 역할 분담으로 6차산업화 성공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수상

충남 당진의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칠순·팔순을 넘긴 할머니들이 나서 매실 6차산업으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56가구의 부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연령 75세, 최고령 회원은 87세의 할머니이다. 이 법인은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남편을 따라 귀농한 김금순(65) 씨가 마을 부녀회에 소득사업을 제안하면서 탄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활용한 한과를 주력으로 하여 매실장아찌, 쌀 조청, 매실액기스, 매실약과 등을 가공·판매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로 값싸게 유통하는 '가족마케팅'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맛이 알려지면서 '12.8월' 오픈한 첫해에 1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억5천만원, 금년에는 5억원을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품 컨설팅과 판로 개척, 매실 가공공장 설립 등을 지원받아 사업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래가 부쩍 증가하면서 조합에 상주하는 회원이 15명에 달하는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민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고 있다.



우수사례 ② |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75세 할머니도 참여하는 6차산업 침체된 마을에 생기 불어넣어

효과

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농촌 고령자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6차산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유지



3-2 직접지불제도의 확충과 소득안정

♣ 추진 배경

- FTA 등에 따른 개방 확대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농촌 경제의 활력 창출 기반을 다지고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한 촘촘한 소득안정망 마련 필요

- 특히,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정장치가 부족하므로 밭작물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필요

※ 직불성 예산 중 쌀(고정직불, 변동직불)의 비중이 68% 수준('12)

♣ 주요 내용

- 쌀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및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 당초 계획('17년 100만원 인상) 조기 달성('15)

※ ('12) 70만원/ha →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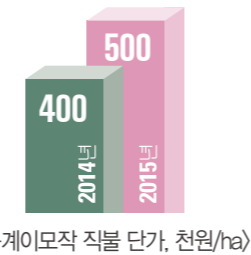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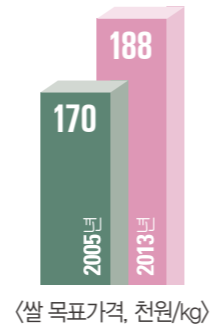
- 쌀 목표가격 인상으로 경영안정 강화 ('05 : 170,083원/80kg → '13 : 188,000)

- 밭직불 대상 확대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도입

※ 밭직불 대상 품목 : ('12) 19개 품목 → ('13) 26 → ('15) 전품목

※ 동계 이모작 직불 신규도입('14) 및 단가 인상 : ('14)40만원/ha → ('15)50

※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 경감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실시('15) : 양파, 콩, 포도



♣ 성과

- 논·밭 직불금 확충 및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시범도입으로 농가의 소득안정망이 강화되었고, 특히, 밭작물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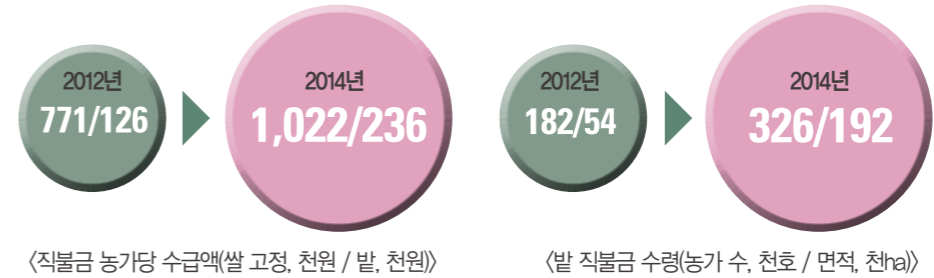
〈농가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대상농지	기 존 ('12년)		개 선 ('15년)	
	논	밭	논	밭
경영안정 (위험관리)	쌀 변동직불		쌀 변동직불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 (공약형)	쌀 고정직불 (70만원/ha)	밭고정직불 (19개 품목)	쌀 고정직불 (100만원/ha)	밭고정직불 (전품목 25만원/ha 기준 26개품목 15만원 추가)

- 농가의 직불금 수급 확대 및 직불금 수혜농가수 증가

※ 농가당 수급액(쌀 고정/밭) : ('12) 771천원/126천원 → ('14) 1,022/236

※ 밭 직불금 수령(농가수/면적) : ('12) 182천호/54천ha → ('14) 326/192



♣ 향후 과제

- 이원화되어 있는 밭 직불금 지원구조를 일원화하고, 지원단가도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현행 밭 직불금 지원 구조 : (전품목) 25만원/ha, (26품목) 40만원/ha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품목* 확대

※ 품목 : ('15) 콩·양파·포도 → ('16) 마늘 → ('17) 2품목 추가



우수사례 ① | 쌀·밭 직불제도 확충
쌀 직불금 단가
43% 인상
이모작
직불금도 도입

효과

농가 소득기반 확충

농업 생산기반 유지 및 공익적 가치 보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06년~'12년까지 ha당 70만원이었으나, '13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인상하여 '15년에는 '12년보다 43% 증액된 1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당초 '17년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또한 '14년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지급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25%) 인상하였다. 밭 직불제를 지급받기 위한 대상 품목의 제한도 폐지하는 등 밭 직불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직불금의 인상으로 농가소득증대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안에서 1.5ha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최OO씨의 경우 '12년에는 94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으나, '14년에는 200만원('12년 대비 112.4% 증)으로 증가하였다.

전남 장흥에서 6ha의 농지를 경작하는 김OO씨는 '12년에 380만원 수준이던 직불금이 '14년에는 746만원 ('12년 대비 96.4% 증가)으로 대폭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13년에 전격 인상하였다. '05년~'12년까지 8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은 80kg 1가마당 170,083원을 유지하였으나, '13년도에는 그간의 물가상승, 쌀 생산단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188,000원으로 17,917원(10.5%)을 인상하여 변동직불금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쌀 목표가격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14년산 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농가에게 ha당 266,238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 철원군에서 10ha 면적의 벼 농사를 하는 이OO씨의 경우 '12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0원이었으나, '13년 쌀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해 '14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으로 267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산 쌀에 대해 729천ha의 쌀 생산면적에 총 1,941억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669천호의 쌀 생산농가가 혜택을 보았다.

우수사례 ② | 쌀 변동직불금 지원 확대

쌀 목표가격
10.5% 인상
변동직불금
지급 확대

효과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



3-3 농산촌관광 활성화

♣ 추진 배경

- 주5일제 정착,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농촌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촌체험, 교육, 치유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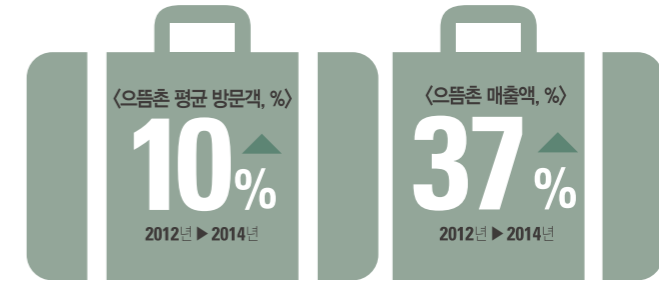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민간과 연계한 '으뜸촌 기차여행'(15종) 운영, 자연휴양림 조성, 산악승마 시설구축 등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 으뜸촌(23개소) :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시 전체 분야(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서 1등급을 받은 우수 체험마을
-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및 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확대('15년 100%) 등 농촌관광 품질 제고
- 체험마을, 휴양림, 명품고택 등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웰촌 포털, SNS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시기별·테마별 우수 관광정보를 적기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 등은 협업을 통해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 중('15.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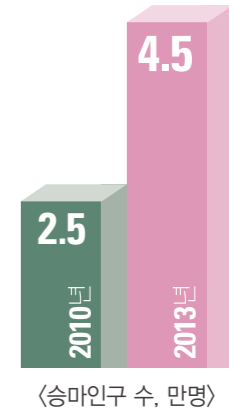


♣ 성과

-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14년의 으뜸촌 평균 방문객 및 매출액은 '12년 대비 각각 10%, 37% 증가



-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농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농촌민박 전국 23천여개)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국한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관광(체험마을, 교육, 관광농원)까지 확대
 - 그린벨트 내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을 일정규모로 설치 가능
 - 보존산지 안의 입업용 산지에서 산악승마 시설 조성 가능토록 개선
- 승마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승마인구가 꾸준히 증가 ('10년 2.5만명 → '13년 4.5)



♣ 향후 과제

-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도시민 수요자 기준에 맞도록 안전·위생·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 재방문을 제고
- 민간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방문객 유치 추진

우수사례 ① | 담양 삼지내 체험마을(옴뜰촌)

전통한옥과 음식·공예의 매력 기차여행과 연계하니 관광 매출 급증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삼지내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지냈던 고경명 장군의 후손이 모여 사는 창평 고씨 집성촌이다. 마을로 3개의 천(川)이 흘러들어 '삼지내'란 이름이 붙었다. '07년에는 신안 증도, 완도 청산 등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했다.

이 마을은 전통음식과 다도, 짚풀 공예 등 옛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다. 문화재로 등록된 20여 개의 전통한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천히 돌담길을 거닐며 마을을 둘러보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고, 떡 만들기, 바느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이 마을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관광등급 평가에서 경관·서비스, 숙박, 체험, 음식 등 전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옴뜰촌'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코레일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옴뜰촌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레일과 협업하여 철도망을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안하게 우리 농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옴뜰촌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관광상품을 지속 확대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효과

- 매출액 증가 `(13) 1.7억원 → (14) 4.7(187% 증가)
- 민간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과
- 체험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수준 제고 등 소비자 눈높이 충족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림에서 힐링을 하면서 인근의 농산촌마을에 들러 즐거운 체험도 하고 지역특산품도 구매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85천여명이 방문하는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 희리산 자연휴양림은 인근의 동백꽃마을, 황새마을 등 농·산촌 체험마을과 MOU를 맺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인근 체험마을 소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희리산 자연휴양림관리소는 '15.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 숲속 영화관 등의 문화공연과 함께 휴양림의 목공예 체험, 농촌체험마을인 동백꽃 마을과 황새마을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휴양림 방문객과 주변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송 숲 장터마당' 마을축제에서 직거래마당, 체험마당, 관람마당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자연휴양림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고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례적인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의 힐링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농촌체험관광의 연계는 지역소득증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사례 ② | 휴양림과 체험마을 간 협업

서천 희리산 자연휴양림 '해송 숲 장터마당'축제 지원

효과

-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인근 농·산촌체험마을에 방문하도록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4 정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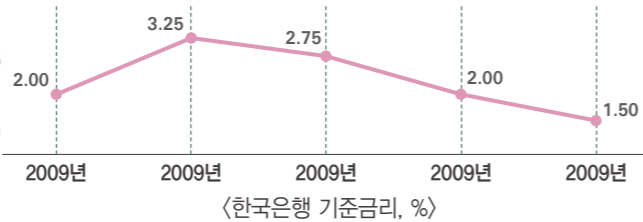
금리인하로 금융부담 완화

♣ 추진 배경

-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별성 확보 등을 위한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필요성 증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9) 2.00% → ('11) 3.25% → ('12) 2.75% → ('14.10) 2.00% → ('15.7) 1.50%

※ 3% 자금 기준 금리차(시중금리-정책자금 3%, %p) : ('09) 2.73 → ('11) 2.47 → ('12) 3.22 → ('14) 2.87 → ('15.7) 0.17



- 농업자본 투자 수익률 저조 및 신규 투자 감소로 농업성장 잠재력이 약화됨에 따라금리인하를 통해 투자 촉진 유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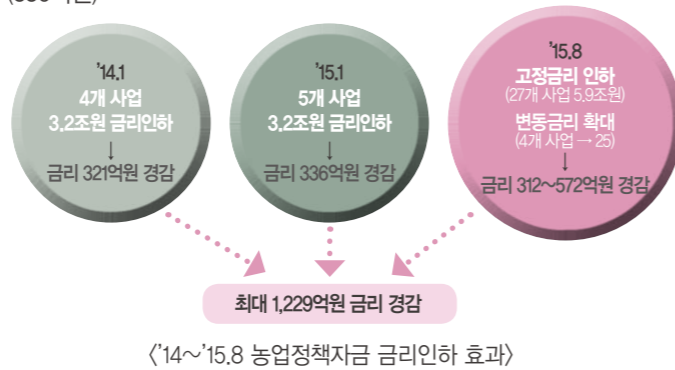
※ 농업자본수익률(KREI) : ('03) 3.6% → ('08) 1.6 → ('11) 1.0 → ('13) 0.5 → ('14) 0.6

♣ 주요 내용 및 성과

- '14년~'15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금융비용 최대 1,229억원 경감

- ('14.1) 4개 사업 약 3.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도입 (321억원)
- ('15.1) 5개 사업 약 3.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 (336억원)
- ('15.8) 3~4% 대상자금(27개 사업, 5.9조원)의 고정금리를 2.5~3%로 인하하고, 변동금리 적용 대상 사업 확대 (4개→25)

※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농가 택일
 - 고정금리 인하적용시 금리 약 312억원 절감
 - 변동금리 적용시 금리 약 572억원 절감



- 농신보 보증분야 및 우대보증 확대로 농업분야로의 원활한 금융지원 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14)·귀농인 포함 예비농업인('15) 보증지원 추가, 농식품 우수기술사업자 보증한도 증액('13: 1억원 → '14: 2), 선도농업인 우대보증 도입('14)
- RPC 보증제도 개선(보증한도 확대 30억원 → 50, 보증요율 인하)('15.10)



♣ 향후 과제

- 시중금리 동향 등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농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운용
-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자금 공급지원을 위하여 보증한도 확대 등의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영세 소규모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자금 공급지원을 위해 전액보증한도 확대(20백만원 → 30), 위탁 보증한도 확대(30백만원 → 50),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 자금지원을 위한 법인보증한도 확대 (15억원 → 30) 등 추진





우수사례 ① | 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자금 변동금리 방식 도입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부담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15.8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정책금리가 시중금리 변동 추세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적용 대상사업을 기존의 4개에서 25개로 크게 확대하였다.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하락 시기에 단기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다만,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성 예측이 곤란하므로 불리할 수도 있다.

세종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윤OO씨는 올해 농업종합자금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변동금리 1.72%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고정금리(3%)에 의한 대출보다 연간 약 6천 4백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본 셈이다.

충남 아산시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는 이OO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4년 말 1.79%의 변동금리로 12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고정금리(3%)에 비해 연간 약 1천 5백만 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보없는 농업인들을 보증함으로써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한도가 제한적이어서 시설현대화 또는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신보의 보증한도와 보증대상자를 대폭 확대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전북 OO화훼영농조합법인은 파프리카 첨단온실신축을 위해 정책자금 3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기존 농신보 보증한도가 15억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담보가 부족함에 따라 사업 중단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14년 농신보 제도개선으로 첨단온실 신축 사업 시행 법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가 당초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5,400평 규모의 첨단온실을 신축할 수 있었다.

이 법인은 온실 신축 후, 생산 효율성이 크게 개선(3.3㎡ 당 15~20kg 증가)되어 일본의 바이어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정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시설현대화, 창업 및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농신보 신용보증 확대 농신보 도움 받아 첨단온실 신축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 확대

효과

농가 담보 부담 완화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

농가 경영 안정

효과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농업부문의 자금 유입 촉진

농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3-5 농업재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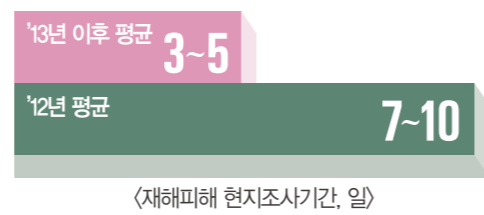
확대 및 재해지원 내실화

♣ 추진 배경

- 이상기후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형 사후복구 지원은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함
 - ※ 과거에 비해 재해의 규모·강도가 확대
 - 시간당 강수량 최대값 : ('90년대) 94.6 mm/h → ('00년대) 97.4
 - 일강수량 최대값 : ('90년대) 355.8mm → ('00년대) 415.2
 - 태풍 중심기압 : ('90년대) 951hpa → ('00년대) 944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제도 확충 및 농업인 참여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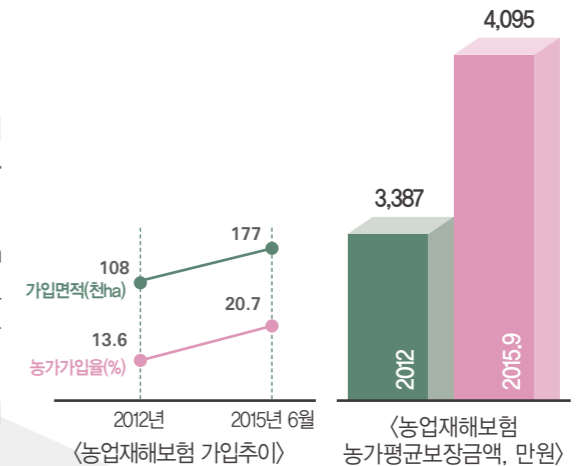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재해보험) 재해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품목과 재해 대상 확대
 - 품목 확대·보장비율 확대·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개선 강화
 - ※ 품목('12 : 51개 → '15 : 62), 보장비율 확대(70~80% → 60~85~90), 과수 적과 전 종합위험보장 도입, 보장가입 기간 연장, 병해충보상 추가 등
 - 정책보험 전담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운영으로 공적기능 강화('15)
 - ICT 활용 평가기법('14)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15),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현지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성·신뢰성 제고
 - ※ ('12년 평균) 7~10일 → ('13년 이후 평균) 3~5일
- (재해복구) 복구지원 단가 인상*, 재해지원 대상 확대 및 피해농가 의무 완화 등 사후복구 지원 강화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실거래가의 55%에서 58% 수준으로 기준 상향



♣ 성과

- 농업재해보험 가입면적 및 가입률이 확대되고 보장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농가경영 위험관리능력이 제고됨
- 가입면적은 108천ha('12)에서 177천ha('15.9)로 연평균 17.1% 증가, 보험 가입률도 '12년 대비 7.1%p 상승('12) 13.6% → ('15.7) 20.7
- 보장금액은 농가평균 3,387만원('12)에서 4,095만원('15.9)으로 20.9% 증가



♣ 향후 과제

- 보험적용 품목 확대('15 : 62개 품목 → '17 : 69), 재해 미발생시 보험료 일부 환급 상품 도입
-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현장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지속 추진

우수사례 ① | 농업재해보험 확대
우박 · 태풍피해
위험
농업재해보험으로
경영안정



효과

재어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보완

농업 경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가뭄,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발생빈도가 빈번하고 강도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을 통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를 재배(4,248㎡)하는 조OO씨는 '14.5월 비바람을 동반한 직경 1~1.5cm 크기의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조씨는 절망하지 않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조OO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23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보험금은 보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약 5,567만원을 보상 받았다.

농업재해보험은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도가 미흡하여 가입하지 농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의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농업재해보험 범위와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해보험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가고 있다.

우수사례 ② | 재해복구 지원 확대
저리 융자금
1억원 추가 지원
재해복구비용
부담 완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비닐 하우스 등 고가의 농업 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농업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뭄, 태풍, 우박 등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복구비용의 55% 수준인 재해지원 단가를 58% 수준으로 인상 하였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14.6월 강풍을 동반한 용오름(토네이도)으로 하우스가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경기도 고양시의 시설장미 재배 농가 김OO 등 5농가는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기존에는 농가당 5천만원 밖에 재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지만, 제도 개선으로 농가당 1억원의 추가 융자금을 포함 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총 8억 6천여원의 장기 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 상환)자금을 지원 받아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효과

피해 농가 복구비용 부담 완화

재해 지원제도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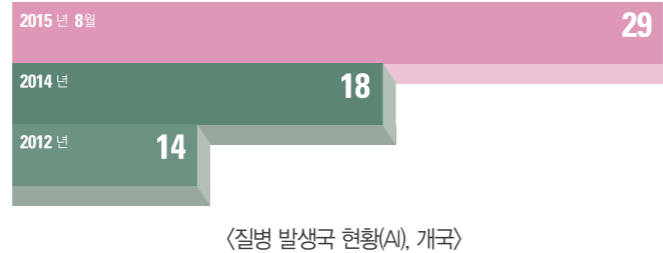
3-6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선진화

♣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질병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질병 발생국 현황(AI)
: ('12) 14개국 → ('14) 18 → ('15.8) 29



- 우리나라도 '10~'11년 구제역 발생시 과도한 살처분에 따른 산업적·사회적·재정적 피해 발생 등 큰 흉역

※ 피해규모와 재정비용 : (구제역) 3,748호 348만 두, 2조 7천억원

- AI·구제역 등 방역대책의 시행착오 경험을 토대로 가축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화된 방역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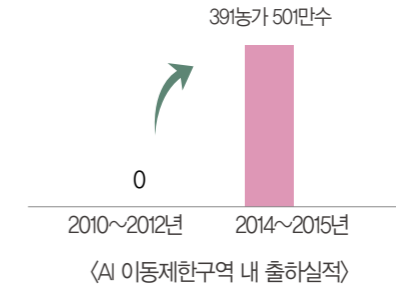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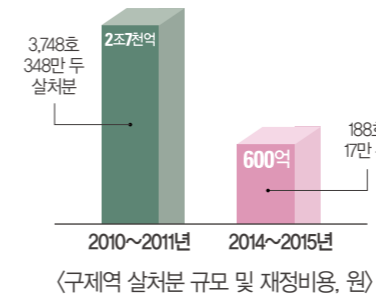
- (위기대응) '14~'15년 구제역·AI 대응 긴급방역 시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10~'11년 대비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 감축 도모
 - 현장상황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긴급행동지침(SOP) 규정 탄력화
 - 돼지에 대해 백신을 교체(3가→단가, O3039) 투입하고, AI는 이동제한 농가라도 정밀검사 후 출하 허용해 농가피해 감소
- (체계개선) 생산자, 전문가, OECD 등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 추세와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역 개선대책 마련(AI '14.8, 구제역 '15.7)
 - (예찰 강화) 입식~사육~출하 단계별 질병 검사를 강화하고, 축산차량 GPS 부착과 KAHIS 농장정보를 활용해 ICT 기반 상시방역 체계 구축
 - (백신관리) 접종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시 백신관리·효능검사 체계 구축

♣ 성과

- (위기대응) 백신접종과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살처분 규모 및 재정비용이 감소하고, 농가 경영 불편도 완화

※ 구제역 살처분 규모, 재정비용 : ('10~'11) 3,748호, 348만 두, 2조 7천억원 → ('14~'15) 188, 17, 600억(p)

※ AI 이동제한 구역 내 출하실적 : ('10~'11) 0건 → ('14~'15.6) 391농가 501만수



- (체계 개선) 상시예찰, ICT 접목 등을 통해 질병 신속파악 및 초동대응
 - ※ GPS 부착('12년 0대 → '14년 47천대) 등으로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KAHIS, GPS활용 등을 통한 초도 역학 추적으로 초동대응시간 20시간 → 4시간으로 단축

♣ 향후 과제

- 기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대책의 원활한 후속조치로 상시 사전 예방적 방역 정착



우수사례 ① | 가축질병 방역체계 선진화
KAHIS와 GPS 활용
선제적 방역
AI 확산 차단 및
피해 경감

'15.3.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가로부터 AI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 정보를 이용한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 베이스 정보와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축산농장의 정보와 축산차량 GPS를 활용하여 해당 산란계 농가를 출입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신속히 역학 관계를 파악해 냈다.

특히, 안성시 산란계 농가로부터 병아리를 공급 받은 농가를 분석한 결과, 익산, 경주, 군산 지역의 양계농가가 병아리를 분양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2시간 만에 분석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예찰과 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역학 관련성이 파악된 경주와 군산과 익산의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함으로써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AHIS 등 ICT기반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1년에는 3,748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348만 두를 살처분 하였으나, '14.12~'15.4월 기간중에는 '10~'11년보다 훨씬 적은 185건의 구제역 발생에 17만 두를 살처분 하는데 그쳤다.

이는 '14.12~'15.4월 기간중에는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여 방역관리한 결과 구제역 확산이 최소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제역 백신접종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해 백신의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종류의 백신을 긴급하게 수입하여 현장 시험적용 등을 통해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효능검증 결과 신형백신의 구제역 예방효과가 기존백신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15.2.15일에는 신형백신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16일부터 본격 공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백신 효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한층 더 신속하게 최적합 백신을 선정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구제역 백신 교체
구제역 신형백신
신속한 교체
질병 확산
최소화

효과

- 타 지역으로의 AI 확산 저지
- 역학사항 파악 시간 단축
- 예방적 방역에 추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 신형백신 본격 도입에 따라 구제역 발생 감소
- 신속한 현장중심대처로 확산 방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사례

농촌의 어르신들이
행복하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1 농촌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 추진 배경

- 농촌지역은 초고령사회로('14년 농가 기준 65세 이상 39.1%) 진입하였으나, 영세 고령농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이용률도 저조
 ※ 복지사업 인지도 및 이용경험('13, 농촌진흥청) : 인지도 30~40%, 이용경험 7~15%
-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농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관련부처 정책과의 연계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 사회안전망 고령농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도 꾸준히 확대
- 맞춤형 복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를 확대 실시 중이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농업인 행복버스 제도'를 운영
- 복지달력 어른신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모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달력' 제작·배포('14.11~'15.1)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추천으로 15개의 복지사업 리스트를 선정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



〈복지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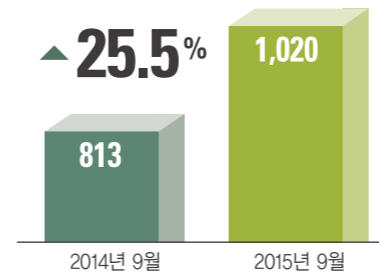
♣ 성과

- 농업인 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만족지수 추이 : ('12) 80.8점 → ('13) 83.2 → ('14) 85.6 ('12대비 4.8점 증)



〈만족지수 추이, 점〉

- 농지연금 가입자 전년동기 대비 25.5% 가입 증가('14. 9 : 813건 → '15. 9 : 1,020)하였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자 증가('15.7.31현재 1,380만명 가입/누적)



〈농지연금 가입자, 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 만명〉

- 복지달력을 제작·배포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 초판 1만부 발행 후, 경로당 등 농촌취약계층 수요가 많아 27천부 추가 제작(총 37천부 배포)

♣ 향후 과제

- 고령농 체감형 복지 사업 확대 및 지속 발굴





우수사례 ① | 농지연금제도

자식 뒷바라지에 함께 한 농토 농지연금 되어 노후생활 뒷바라지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이OO씨(66세)는 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언론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고, 기존에는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 되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농지를 소유한 자신만 65세 이상 되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년 3월에 주저없이 종신행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이 씨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면서도 매월 150만원의 농지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고, 노후에도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지가격의 2%인 농지연금 가입비와 3ha인 소유농지 면적 상한기준을 폐지하였고,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신규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지원액이 6%정도 늘어 고령농의 호응이 크며, 신규가입 인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효과

고령농 소득 증대 및 노후생활 안정

농지연금 가입자 증가로 사회비용 감소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우리 농촌의 고령화율은 UN이 분류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보다 훨씬 높은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북 장수군 OO마을도 고령화가 급진전 하고 있으며, 홀몸노인도 늘어나고 있다. 평생 농사지으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여 도시로 보내고 나서 농촌에 홀로 남은 홀몸노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홀로 식사하며 외롭게 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홀몸노인들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들이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지원, 말벗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행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가사도우미 김OO씨는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저희는 나누는 기쁨을, 어르신들께서는 받는 기쁨을 누리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밑반찬 해가서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마음도 흐뭇하거든요.”라며 도우미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다.

우수사례 ② | 농촌 가사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들의 정성 행복이 담긴 따뜻한 밥상 대접

효과

농촌 홀몸노인의 노후생활안정

농촌 공동체 유지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

4-2 농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 편의시설 지원

♣ 추진 배경

-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자·저소득 가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
 -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09, 국토연구원) : 농촌 22.1%, 도시 7.7%
-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거 및 복지 환경에 대한 지원이 시급
 - ※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 : ('00) 28만 가구(9.2%) → ('10) 44(13.3)
- 농촌 고령자의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생활 속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공동 생활체 유형의 더불어 사는 거주환경 도입이 필요

♣ 주요 내용

- 오래되거나 버려진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지역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이용시설 지원
- 기존 농촌의 공동시설을 고령자 맞춤형 시설(공동생활홀,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로 활용
 - ※ ('14~'15 지원 실적) 공동생활홀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 작은 목욕탕 28

공동생활홀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 목욕탕 2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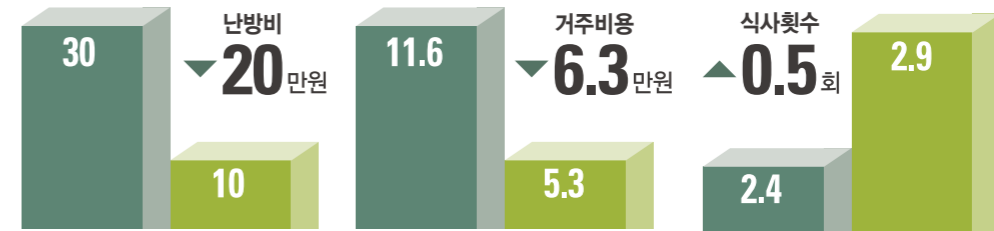
〈'14~'15년 고령자 맞춤형 공동이용시설 지원실적〉

♣ 성과

-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공동시설 이용 종합 만족도 78.8%)
- 거주자간 난방비·임대료 공동부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규칙적인 식사·목욕 등에 따른 기본적인 일상생활 여건 개선
 -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만족도 조사('15.6)
 - : 난방비 20만원 절감(30만원/월 → 10),
 - 거주비용 6.3만원 절감(11.6만원/월 → 5.3),
 - 식사횟수 0.5회 증가(2.4회/일 → 2.9) 등



〈고령자의 공동시설 이용 종합 만족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의료(방문진료), 문화(요가) 등 종합 서비스를 연계·제공
 - ※ '14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최우수 브랜드 과제로 선정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향후 과제

-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확산 유도
 - ※ 시설 운영조례 제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타부처와의 우수 협업사례 등

우수사례 ① | 남해군 공동생활홈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공동생활홈 어르신들의 영양·위생도 크게 개선

농촌에서 고령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오래되고 낡아서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출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다. 또한 농촌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고독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OO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나왔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와 남해군이 농촌에 '맞춤형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여러 차례 마을회의를 거쳐 '15.6월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였다.

지금 이 경로당에는 마을 어르신 6명(여자)이 독립된 침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 문턱과 계단을 최소화하여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계획하였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인근 경로당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사도움, 방문 진료, 노인 응급안전 돌보미(효심 119) 서비스도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효과

- 홀몸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주거
- 고령농의 영양·위생 등 삶의 질 향상
-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5~'96년에 [목욕탕집 남자들]이란 TV 주말 인기드라마가 있었다. 30여년간 대중목욕탕을 업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대가족의 이야기를 훈훈하게 엮어내고 있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아들과 사위, 손주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가는 것이었다. 발가벗은 채 마주앉은 3대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읍내에서 목욕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월야면에 다목적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목욕탕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달맞이 문화센터의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됨으로써 피로회복실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웃간의 정을 두텁게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문화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사례 ② | 함평군 작은목욕탕

어르신 피로회복실 작은목욕탕 이웃간의 정(情)도 쌓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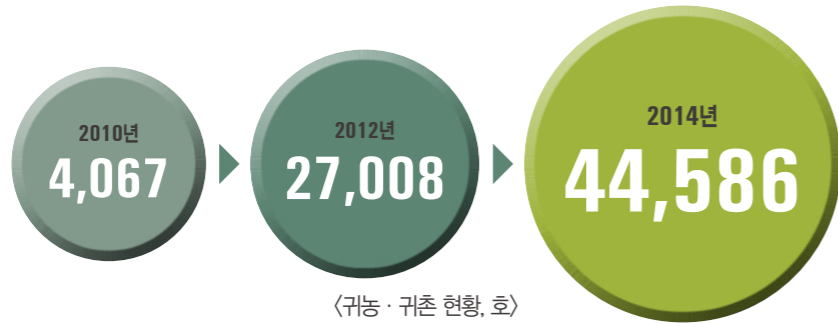
- 농촌 고령자의 문화복지여건 개선
- 노인들의 위생여건 개선
- 농촌 공동체 유지·발전



4-3 귀농·귀촌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및 농촌 활력 제고

♣ 추진 배경

- 최근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으로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귀농·귀촌 현황 : ('10) 4,067호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 도시민의 은퇴 직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층이 농업·농촌에서 블루오션을 발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정책 필요
- 종전 인구유입 촉진 위주 정책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강화

♣ 주요 내용

- 귀농귀촌종합센터의 One-Stop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및 2030세대·제대군인·새터민 등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귀농 교육 확대
- 귀농예정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특히 2030세대의 귀농정착을 위해 대학귀농교육('15. 10개소), 2030농지임대알선 지원, 선도농가 실습, 귀농인의 집 우선 입주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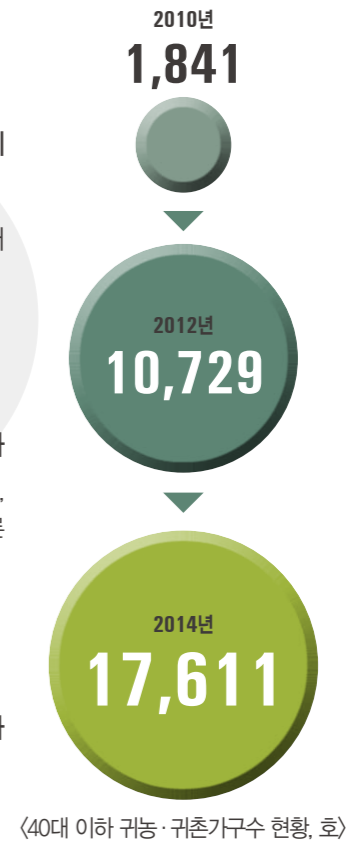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 자금규모 ('13) 600억원 → ('15) 1,000, 융자한도 2.4억원 → 3.5, 금리인하 3% → 2(주택금리 2.7%)
※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기준 완화(2,000㎡ → 660), 쌀직불금 수급대상 확대,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 개선 등

♣ 성과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으로 귀농·귀촌 가구수 꾸준히 증가
● 귀농·귀촌이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베이비부머 세대 뿐 아니라 40대 이하 젊은 층까지 확산
※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수 현황 : ('10) 1,841호 → ('12) 10,729 → ('14) 17,611
- 귀농·귀촌 희망자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이용 증가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실적('15.1~9월) : 상담(전화·방문) 12,859명, 홈페이지 이용 566,877명, 교육(기본·주문·소그룹·지역) 1,952명, 언론 홍보 264건, 출장(박람회 등)상담 639명, 집단상담 216명

♣ 향후 과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15.7.21)에 따라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 추진





우수사례 ① | 신안군 증도 귀농 도시민

도시 은행원 생활 접고 귀촌 농업 바탕의 펜션 운영 꿈 이뤄

전남 신안군 조OO씨는 도시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고향 신안군 증도에 대한 그리움과 농업을 바탕으로 펜션을 운영해 보고 싶은 평소의 꿈을 실현하고자 귀농하게 되었다.

준비없이 귀농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농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귀농정책, 귀농교육·실습, 상담, 지역정보 등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종합센터('12.4~'14.6)의 도움으로 전담 7천평을 임대받아, 벼농사와 밭농사(마늘, 양파, 고추 등)로 정착 기반을 다졌으며, '12년도에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창업자금은 농지·농기계 구입, 펜션 신축 등 초기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5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통해 농업기술과 농업기계를 직접 다뤄보는 교육을 받아 전문 농사꾼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금은 농사로 연 4~5천만원, 펜션 운영으로 연 5~6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마을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마을일에도 솔선수범하자 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마을이장을 맡아 마을공동체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과

작물재배에서 숙박까지 영역 확대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펜션 운영

2030세대, 그리운 고향에서 희망 분야 경영

충남 논산의 최OO씨는 30여년 넘게 대전에서 살다가 KAIST에서 퇴직한 남편과 함께 논산으로 귀농하여 지금은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궁골식품'의 대표가 되었다.

최 대표에게는 귀농후 처음 3년간은 농촌에 적응하기 힘든 나날이었다. 도시생활을 잊지 못해 차를 몰고 번질나게 드나들었고, 개구리 울음, 새소리에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시골에 살면 시골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주민들이 농사지은 콩, 고추, 들깨, 상추 등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도시에 나가 팔아주었다. 판로 찾기에 애먹던 주민들이 무척 좋아했다. 도시에 있는 지인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으니 반겼다. 그렇게 무려 3년간이나 팔아주었다.

어느 날 콩 한말을 팔면 1만 8천원을 받는데 메주로 띄워 팔면 6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들과 메주를 만들어 팔았다. 그러던 중 된장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자 된장을 상품화하기로 결심하고 이웃 주민들을 설득하여 '09년 '궁골식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항아리 10개로 시작한 장류사업은 현재 500개가 넘는 항아리에서 각종 장류가 익고 있다. 또한, 단순한 가공사업에서 벗어나 장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마을 소득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직원이 10명이나 되며 동네 어른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 대표는 '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의 6차산업인(人)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사례 ② | 논산 귀농인의 궁골식품 창업

은퇴 남편과 함께 귀농한 아내 마을 주민과 장류사업하며 소득



효과

귀농인의 도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득증대

귀농인을 농촌 인적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4 농촌지역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 추진 배경

-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농촌마을 주민(특히 영세고령층)들은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애로

※ 전국 행정리(36천개) 중 3,4천개(9%)에 달하는 지역이 시내버스 미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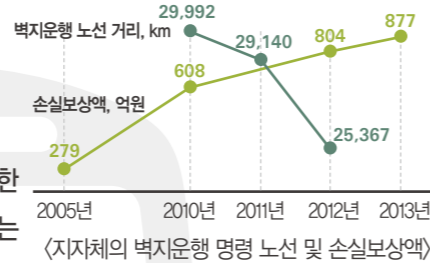
- 운수사업자는 인구감소, 고령화, 자동차 보급 증가 등에 의한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감차하거나 노선 폐지함으로써 농촌의 대중교통 여건은 갈수록 불리해 지는 실정

-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벽지운행을 명령하는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 감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액이 증가되어 '벽지운행 명령노선' 마저 감소

※ 지자체의 벽지운행 명령 노선 : ('10) 29,992km → ('11) 29,140 → ('12) 25,367

※ 지자체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액

: ('05) 279억원 → ('10) 608 → ('12) 804 → ('13) 877



- 한편, 일부 시·군, 지역공동체에서는 소형승합차·택시를 활용한 대체대중교통사업을 통해 배후마을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례가 나타남

-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인구구조, 통행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13년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및 지자체 토론회 등을 거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 수립('13년말) 및 시행('14년~)

♣ 주요 내용

- 농촌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등)의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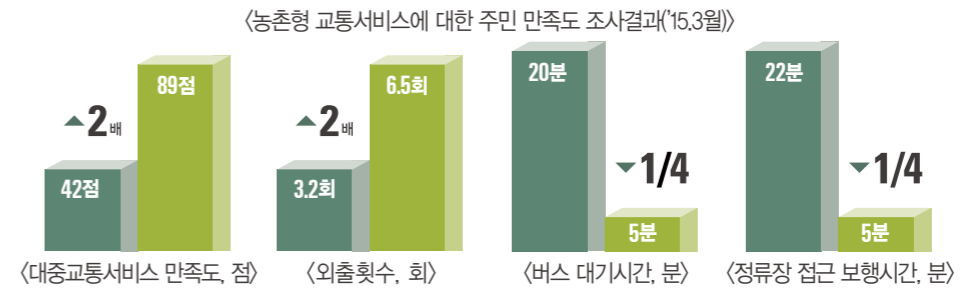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 차량구입비 지원, 2년간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 지원
- 지자체 :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농촌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
- 국토교통부 :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15.1)
- 지자체 : 관련 조례 제·개정
- 정책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 및 사업 가이드북 배포('15.4)

♣ 성과

- 농촌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

※ '14~'15년 기간중 21개소('14년 13, '15년 8)를 지원하여 416개마을 56,424명 수혜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군이 증가됨에 따라 농촌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지자체 자체 추진 시·군 수 : ('14) 9개 → ('15.7) 48

♣ 향후 과제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정산체계 구축
- 농촌형 교통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



우수사례 ① | 춘천 북산면 마을버스
배타고 산길 걷던
육지 속 섬마을
시골버스가
다리 되어 연결

'73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인근 마을이 수몰되고 시내와의 도로가 끊겨 '육지 속 섬' 같은 오지가 된 마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가 들어오자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떴다.

조교리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속한다. 조교리와 북산면사무소간 거리는 직선거리 9km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이 불일을 보러 면사무소에 가려면 소양강댐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거나, 차량으로 행정구역이 다른 홍천군과 양구군을 돌고 돌아 65km를 1시간 30분정도 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 생필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은 차로 20분정도 걸리는 홍천군 두촌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교리와 두촌면을 잇는 시내버스 운영을 시도했지만, 노선이 춘천시(조교리)와 홍천군(두촌면)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재정지원에 걸림돌 되는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마을주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서 농촌형 교통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승합차 1대를 지원받아 홍천군 두촌면 소재지까지 매일 3회 운행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는 운전자 인건비와 기름 값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읍내에 나갈려면 며칠 전부터 이웃 주민을 수소문해야 얻어 타고 나갈 수 있었지. 급할 땐 기름 값 조금 보태주고 사정해가며 나가자고 할 수 밖에 없었어.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방법이 없었지. 택시를 어떻게 불러. 두촌면까지만 나가도 4만원 돈인데." 마을주민 권OO(78세), 나OO(74세)씨 부부에게 조교리 마을버스는 남 눈치 안 봐도 되는 기적 같은 일이다.

효과

읍내와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

수혜가구수 : 63가구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정류장까지 가야한다. 뜨거운 한여름과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는 걸어가기 어려운 거리이다. 몸이 불편한 주민은 어려움이 더욱 크다.

안성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는 마을이 10개 읍면동 4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신청하여 '행복택시' 사업을 지원받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성시내에서 12km 떨어진 보개면 치재마을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1만 7천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이용객 1인당 1,100원만 내면 된다.

안성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체감도를 높이면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안성시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90개 노선, 98대의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예산을 30억 6천만원 이상을 소요하였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아 버스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도로도 좁아 큰 버스가 운행하기에는 불편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게 되어 주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크면서도 기존의 마을버스 운행에 비해 82%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대당 6천만원이 넘는 버스 구입비 외에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연간 1억원 가량의 적자보전금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엔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학생 통학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성시에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택시기사 이OO씨(58세)는 택시 타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보람 있다고 한다.

우수사례 ② | 안성시 행복택시
대중교통 없는
40여개 마을
주민의 발이 되는
행복택시

효과

주민의 교통복지 체감도 향상

안성시의 재정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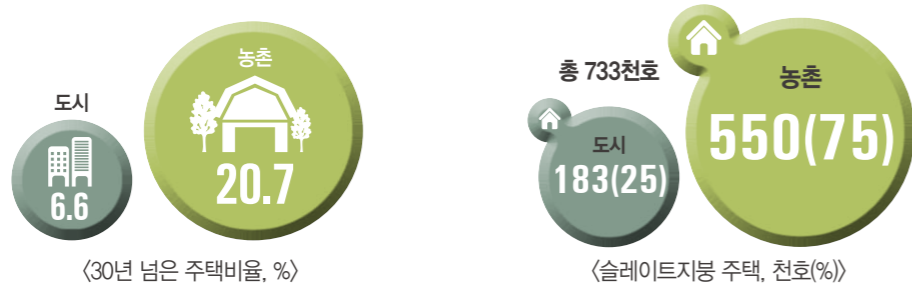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수혜가구수 : 2,203가구

4-5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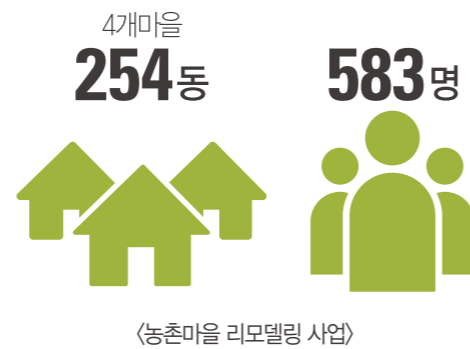
- 농촌주택의 20.7%가 지어진지 30년이 넘었고, 슬레이트지붕 주택의 75%가 농촌에 있는 등 주택의 안전 및 위생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미비된 마을이 다수 존재
 - ※ 농어촌주택(308만호) 중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64만호)이 20.7%이며, 이는 도시의 동지역 6.6%보다 훨씬 높음
 - ※ 우리나라의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733천호이며, 이중 농촌주택이 550천호(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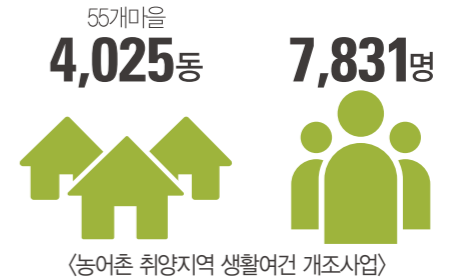
-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촌마을은 주택, 생활기초인프라, 공동이용시설,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13~'14)
-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협업으로 추진), 빈집정비, 집수리,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정비, 마을쉼터 조성 등 지원
 - ※ 충남 서천군 장항면 송림지구 등 4개 마을 254동 주택을 개보수하여 583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15년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
 - ※ 인천시 강화군 서문안 마을 등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4,025동 주택정비를 통해 7,831명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중('15~'17)



- 농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13.6.4)

♣ 성과

- 사람에게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빈집철거 등으로 위생여건 개선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
-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지·발전

♣ 향후 과제

-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화장실 등 유해·비위생적이며, 재해에 노출되어 기초적인 생활여건이 어려운 취약한 마을 중심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확대 추진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체감형·주도형 사업추진 활성화
- 생활여건개선에서 벗어나 소득향상·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우수사례 ① | 진도 안농마을 리모델링

55년 넘은 피난민촌 쾌적한 행복마을로 재탄생



효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한국전쟁을 피해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초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자리잡은 전남 진도군 안농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마을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안농마을은 지어진지 55년이 넘는 노후 주택으로 흙벽과 나무로 만든 좁은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 이쪽과 저쪽에 마을 공동화장실을 두 개 만들어 사용해 왔다.

이 마을이 '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마을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모두 철제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고쳐졌다. 집집마다 상수도가 들어왔고 화장실이 만들어졌다. 에너지효율화사업도 추진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마을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실랑민들의 애환을 작게나마 덜어주었다.



우수사례 ② | 순창군 방축마을 주거환경정비

50년 넘은 슬레이트지붕 안전한 신소재 지붕으로 교체

효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사업성과 제고 및 공동체 형성

전라북도 순창군 방축마을은 총 145가구 95가구는 '70년대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이었다.

이에 순창군과 마을주민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지원받아 '13년부터 '14년까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95가구의 슬레이트지붕이 신소재 지붕으로 교체되어 주거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서도 해방되었다.

빈집 14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8동을 신축하였으며, 마을구관장 리모델링, 산책로 및 담장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농촌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사를 업으로 삼아 살아오면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취약한 환경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다.



4-6 주민 참여에 의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추진 배경

- 국민들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환경·경관 보전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생활·영농폐기물 방치 등으로 농촌환경 오염은 심화되는 실정
 - ※ '13년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평가결과 농촌의 환경보전은 식량안보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응답
 - ※ '13년 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33만톤)의 57.3%에 불과한 18만 9천톤
- '13년부터 지역과 주민주도로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를 보임
 - ※ 범농업인단체 추진위원회 중심의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13)농업 관련 기관 주도의 '농촌 마을 만들기('14) 추진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지역 농림기관 등이 힘을 모아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추진



♣ 주요 내용

- 시·군별로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농촌 환경정화 활동 추진
 - ※ 이장과 농민단체 지도자 등 농촌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기관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은 재정 및 인력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경정화 활동 추진
-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이전(3~5월)에 환경개선활동 집중 추진
 - ※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등의 클린 활동과 꽃나무 식재, 화단 조성 등의 마을가꾸기 활동을 병행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의 봄 조성을 위해 발대식 개최('15.3.27, 성주)

♣ 성과

- 정부 주도로 시작하였으나, 행정기관 및 농업 유관기관과 마을 주민간 유대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성과 달성
 - 141개 시군, 18개 농업 관련기관이 참여
 - 5,390개 마을(계획대비 140%), 137천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농촌을 가꾸기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
- 농촌주민의 농촌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쓰레기·폐기물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선순환 구조 형성
- 농촌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함으로써 소득증대에도 기여



♣ 향후 과제

- 주민 주도의 자발적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역량 강화
- 마을가꾸기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 확대





우수사례 ❶ | 서귀포시 무릉마을

청년·부녀회에 노인회까지 나서 무릉도원으로 가꾸어가는 마을

제주공항에서 제주도 해안가를 따라 1132분 지방도로 45분 거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무릉마을은 청년회와 부녀회, 노인회가 하나로 뭉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수익도 창출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 마을은 제주 올레길 11코스와 12코스가 연계되어 있어 부녀회에서는 올레길 주변 꽃길조성, 쓰레기 청소 등의 마을정화사업과 함께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열린화장실 5개를 열어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노인회에서는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으로 마을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영농폐기물을 수거·판매함으로써 연간 1,900여만원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무릉외갓집 영농법인'을 통해 청년회 중심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꾸러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4년간 약 8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효과

주민주도의 마을 환경 개선활동 정착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통한 수익 증대

우수사례 ❷ | 성주군 클린성주만들기 운동

민관이 함께 'CLEAN 마을만들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경상북도 성주군은 '12.9월 발생한 태풍 '산바'로 농경지 242ha가 매몰되는 등 32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는 농경지에 방치된 부직포와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이 농수로를 막아 침수피해를 유발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성주군과 주민들은 농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2.10월부터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브랜드 슬로건도 '클린성주'로 변경하였다.

성주군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대폭 높이고 폐영농자재는 순회 수거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제고 하였으며, 참외덩굴과 불량과는 자원화하여 퇴비와 액비로 공급하였다. 아울러 '13년에는 전국 최초로 들녘환경심사제를 도입하여 폐비닐과 폐부직포를 방치하는 농가는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농업인들로 하여금 보조사업 선정 시 환경 관리를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성주군은 '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마을만들기' 대상을 수상하였고, '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발대식을 성주에서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효과

민관합동의 농촌 환경 개선활동 추진

깨끗한 농촌 환경 구축과 수익 증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현장에서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만들어 가는
신뢰받는 농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 경영체DB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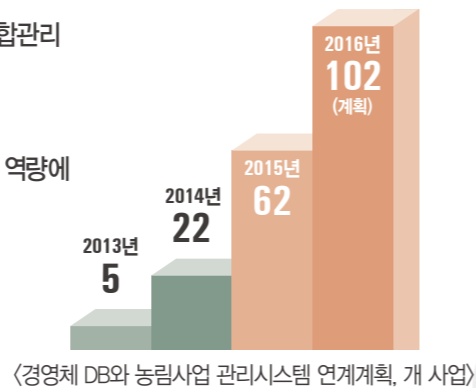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농정

추진 배경

- 개방화·고령화의 진전,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촌의 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
- 평균적 데이터에 기초한 농정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지역이나 전업농·중소농, 고령농 등 농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정전략 마련 필요
- 또한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DB 등 기초 통계를 정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맞춤형 농정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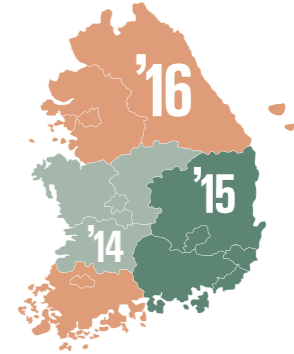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경영체 DB 정보 구축을 확대*하고, 주요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과 통합하여 사업신청 편의 향상(4회 신청 → 1회 신청, 264억원 절감)
 - ※ 경영체 등록현황 : ('12) 148만호 → ('13) 151 → ('14) 156 → ('15.9) 160
- 경영체 DB와 농림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이력 통합관리
 - ※ 연계 계획(누적) : ('13) 5개 사업 → ('14) 22 → ('15) 62 → ('16) 102
- 경영체 DB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경영체와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농정 추진



-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 맵' 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정책지원

※ 구축 계획(누적) : ('14) 3개 시도 → ('15) 6 → ('16) 전국 구축 완료



성과

- 농업경영체 관련 기초자료가 정비됨에 따라 주산지 설정, 과수 화상병 긴급예찰 및 방제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정책대상에 맞는 농가를 추출하여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가의 정책 만족도 제고
 -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공), 면세유 배정기준, 주요 농정성과 등
- 재정 투융자 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재정 투융자 신뢰도 향상 및 성과 제고
 - ※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면세유 배정, 외국인 고용쿼터 배정, 유기질비료지원 등
- 농업경영체 DB에 정보가 등록되면 건강·연금보험, 법인세 감면, 맞벌이 부부 증명, 농기자재 영세율 구매, 농협조합원 가입 등을 위해 필요한 농업인 자격증명을 농업경영체 DB 정보로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편의 향상

향후 과제

- 경영체 등록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 성과 평가 및 맞춤형 정책 개발
- 경영체 등록 항목, 절차 등 간소화로 농업인 편의 향상

우수사례 ① | 농업경영체 DB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농정 지원 화상병 방제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

효과

-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 보조금의 정상화
- 지역단위 맞춤형 농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5월 안성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즉시 농업경영체 DB에 구축되어 있는 전국의 사과·배 재배농지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에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긴급 예찰 및 방제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나무의 잎, 줄기, 열매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죽는 증상을 보이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약도 없는 외래 전염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체 DB 정보를 기초로 전국 153개 시·군에서 사과·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87,730농가의 62천ha와 주변 임야 등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중 양성으로 판정된 안성, 천안, 제천지역 과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제를 실시하여 화상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화상병 양성으로 판정받은 면적은 안성, 천안, 제천지역 41ha인데, 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반경 5km 범위 내에는 910ha의 과수원이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경영체 DB의 정확한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이 과수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5.9월까지 160만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 재배작목, 경영형태 등의 기초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업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및 면세유 지급시 농가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우선 지급한 후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검토하고 단속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신청 농가수가 매우 많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현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농업경영체 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한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행정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및 위험평가를 통해 집중관리 함으로써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례로 '14년도에는 발농업직불금 등 직불금 부당수령액 95억원, 면세유 부정공급액 76억원을 적발하는 등 보조금의 누수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우수사례 ② | 농업보조금 집행 정상화

보조금 사후단속 중심의 비효율성 경영체 DB로 사전 차단하여 개선

효과

- 보조금의 정상화
-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5-2 지역특성에 기초한 현장농정

♣ 추진 배경

-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제시한 모델을 단순히 따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실제 생활과 차이가 많고 사업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이 자율성·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농정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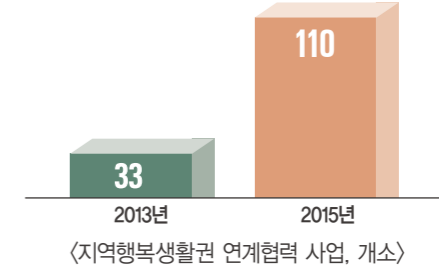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사업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노력으로서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사업지역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
 - ※ HOPE : 행복(Happiness), 기회(Opportunity), 협업(Partnership), 정책사각지대 해소(Everywhere)
- 시·군 단위에서 농촌정책을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 수립을 추진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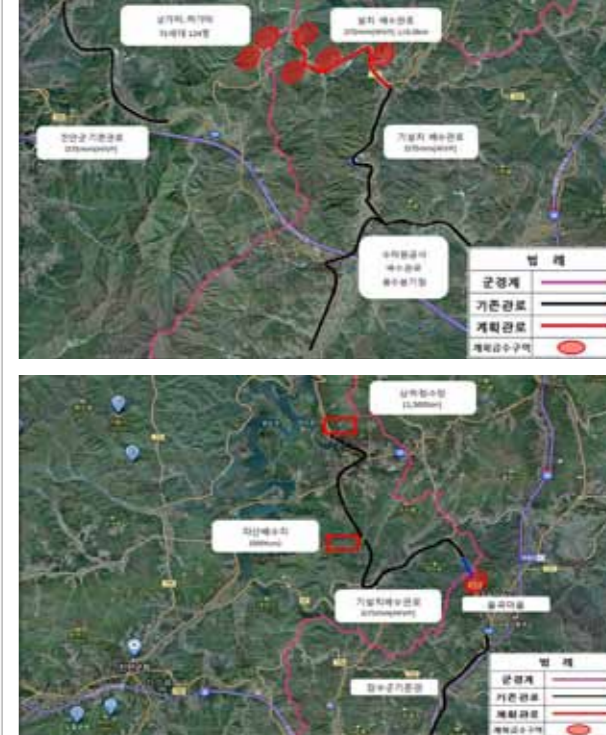
- 시·군 경계를 넘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고 지역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누계) : ('13) 33개소 → ('14) 68 → ('15) 110
- 지역개발사업 내실화를 위해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방식 도입
 - ※ 예비단계(역량강화)→진입단계(소규모사업)→발전단계(종합개발)→자립단계(활성화)



- 농촌지역이 있는 전국 15개 시도 및 167개 시·군·구 중장기(5개년) 농정발전 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통합적 지역 농정 추진 기틀을 마련

♣ 향후 과제

-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상향식 지역 개발을 뒷받침하는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



우수사례 ① | 지역개발 창의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역공동체 역량도 키워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권장하고 그 결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4년부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고 있다. 이 콘테스트는 농촌마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데, '14년에는 1,891개 마을이 참여하였고, '15년에는 2,017개 마을로 증가하는 등 지자체와 마을공동체의 참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의 입지여건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경관·환경, 소득·체험,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다.

농촌개발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이 농촌개발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마다 서로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동시에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개발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고 주민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효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정착

주민의 마을개발 역량 향상

전라북도 동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과 장수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 61.3%로 전국 평균 9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군 경계지역은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산간지역이라 상수도 배수관로와 가압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상수도 시설 설치에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진안군과 장수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진안군 진안읍은 상수관로가 가장 가까운 장수군 천천면에서 끌어오고, 장수군 계북면은 진안군 동향면의 상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면 각 군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4개면 211세대 385명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15년도에 착공하여 '16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진안군과 장수군의 협업으로 배수관로의 길이가 크게 단축됨에 따라 각 군이 따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에게 큰 행복을 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수사례 ② |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

진안·장수 상수도 공동이용 주민 행복 물꼬 터져

효과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상수도 설치 예산 절감

5-3 ICT 기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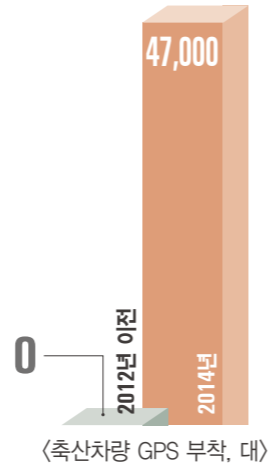
농업현장 의사결정 서비스 지원

♣ 추진 배경

- 영농규모가 영세한 우리나라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화의 물결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과학영농이 중요
- 특히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고,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국민 불편과 막대한 농가피해를 주고 있는 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정립이 절실

♣ 주요 내용

- (SNS 컨설팅)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해소를 위해 대학, 선도농,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애로사항을 등록, 해결방법 등을 댓글로 신속히 제공하는 '기술공감' 밴드(네이버) 운영
 - ※ 지원품목(20품목) : 고추,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참다래, 파프리카, 참외, 무, 사과, 단감, 감귤, 한우, 돼지, 닭 등
- (KAHIS) 축산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KAHIS 농장정보와 연동하여 상시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축산차량 GPS 부착 추이 : ('12 이전) 상시관리 차량 0천대 → ('14) 47
- KAHIS 이용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질병 확산예측 분석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KT, 농림축산식품부 MOU를 통한 기초시범모델 구축('14.12)
 - : 현재 적중도 82.7%
- (토양정보서비스) 정밀토양조사 등을 통해 토양지도인 '흙토람'을 만들어 토양비옥도 정보,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정책적 활용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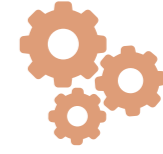
♣ 성과

- (SNS 컨설팅) 밴드가입 : 11,165명, 기술 컨설팅 : 4,320건('15.8월말)
- (KAHIS) 농가정보, 질병발생정보 등 방역기초정보를 실시간 관리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가축질병 확산 조기차단
 - ※ KAHIS, GPS 등 활용을 통해 초도 역학 추적 등 초동대응시간 20시간 → 4시간으로 단축
- (토양정보서비스) 비료사용처방 DB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개방하여 농업인은 처방서 발급제출 노력절감, 인증심사업무 효율성 제고



밴드가입
11,165

〈SNS 기술공감 밴드가입 및 컨설팅 실적〉



기술컨설팅
4,320



〈가축질병 방역 초동대응시간〉

♣ 향후 과제

- (SNS 컨설팅) 품목 수 확대 및 기술 중심에서 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성화
- (KAHIS) 상시방역 관리 체계를 안정화하고, 현재 80% 수준인 Big Data 분석모델 성숙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 실현
- (토양정보서비스)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추진

우수사례 ① | SNS 활용한 기술컨설팅 영농기술 SNS 컨설팅 시스템 농업인 현장어로 손쉽게 해결

효과

상시 접속 가능한 효과적인 컨설팅 매체 확보

영농 현장애로를 SNS로 실시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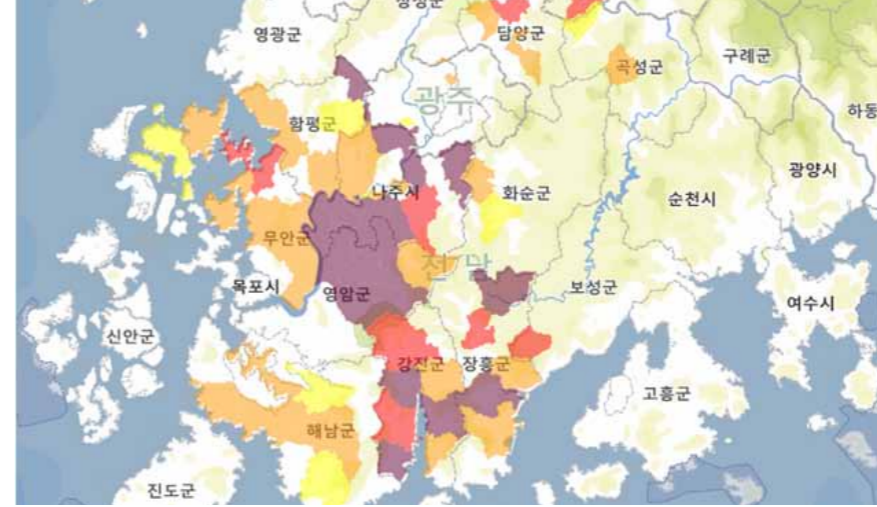
우수사례 공유·전파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 제공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이상 증세를 보여 '한우 기술공감' 네이버 밴드에 글과 함께 송아지 사진을 올렸다. "수시로 설사를 하고, 가슴팍과 엉덩이 여기저기에 상처도 있어요. 사료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암소의 젖을 찾아다닙니다."

이 글을 본 한 수의사는 "상처가 양쪽 같은 부위에 난 것으로 보아 바닥 매트에 부딪힌 흔적으로 보입니다. 상처로 인해 사료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 어미젖만 찾은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올렸다. 또 어느 축산인은 "외부로부터의 송아지 구매를 금지하시고, 어미 소에 예방백신을 분만 6주 전 1회, 3주 전 4회에 걸쳐 접종하세요"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송아지가 이상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 걱정되던 A씨는 농식품 기술 SNS 지원사업으로 운영·지원되는 '기술공감' 밴드를 통해 수의사와 축산 전문가, 선배 축산인의 조언을 받아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SNS를 통해 현장어로 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선도농,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공감'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20여개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15.9월 AI예찰 과정에서 전남 강진과 나주에서 AI감염 의심 오리가 발생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4.12월 미래창조과학부, KT와 협업하여 구축한 'KAHIS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AI 질병 확산 위험도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AI 발생 위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위험 분석결과 AI발생 가능성이 높은 13개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관내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활동을 집중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현재까지 농가 신고가 아닌 AI 발생은 출하 전 검사와 도축 전 검사, 일제검사 등의 사전예찰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이 확산되기 전 신속히 차단 방역이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상시적인 예찰과 함께 KAHIS 등 ICT기술을 접목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과 위험지역 지자체간 원활한 협조하에 선제적으로 방역조치 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질병 확산 위험지역 분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KT 등 민간 ICT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ICT기반의 축산방역체계 빅데이터에 의한 질병확산 예측 선제적 대응으로 차단방역

효과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가발생 가능성 최소화

발생원인 공유로 유관기관 등에서
발생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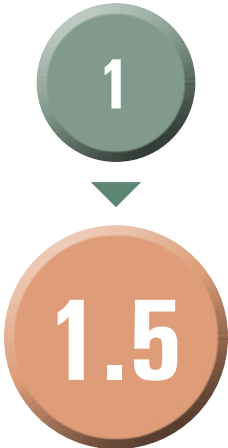
5-4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 제고

♣ 추진 배경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가공·식품·관광 등 산업간 융·복합, 창의적 경제활동, 투자유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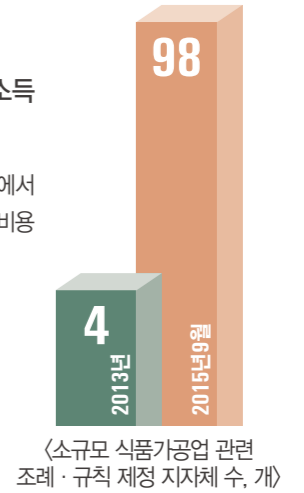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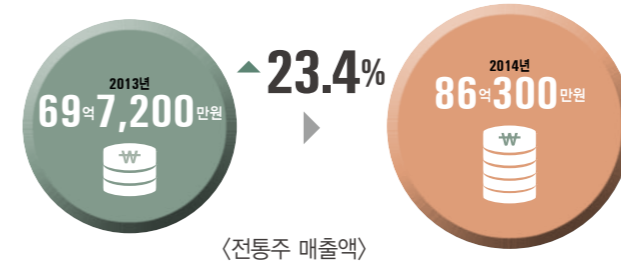
- (식품)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전통주 용기 대금, 포장비용 과세표준 제외 및 통신판매 범위 확대 등 전통주 규제완화
 -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소핑몰 추가
- (곤충) 곤충의 식품원료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
 - ※ (기존) 3종('13) → (개선) 추가 4종(고소애, 꽃벙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귀뚜라미)
- (농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확대(1ha → 1.5),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에서의 판매 범위 확대(농산물 → 임·축산물, 농림축산가공품)



1
↓
1.5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ha〉
-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 마을정비사업의 주택 단지조성 참여제한 완화**
 - ※ (기존) 맞벌이 부부자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나, 농업인 부부는 맞벌이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 가능하도록 개선
 - ※※ (기존)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20명 이상 → (개선) 5명 이상이면 가능

♣ 성과

- 소규모 식품가공업*, 전통주** 등 소규모 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곤충 산업 新시장 창출***
 - ※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조례·규칙을 제정한 지자체(누계)는 ('13) 4개에서 ('15.9) 98개로 늘었고,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시 약 2천만원 수준의 창업 시설비용 절감 기대
 - ※※ 전통주 매출액 : ('13) 6,972백만원 → ('14) 8,630(23.4% 증)
 - ※※※ 창업사례 : 곤충식품카페(이더블버그, '14.9), 곤충요리전문점(빠빠용키친,'15.2)



♣ 향후 과제

- 농업·농촌 부문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농업투자유치 등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우수사례 ① | 곤충 식품원료 규제개선
작은 곤충
 규제개혁하니
곤충식품벤처
창업, 일자리 ↑

'14.9월 국내 최초로 곤충과자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이더블 버그(ediblebug)'라는 회사가 탄생하였고, '15.2월에는 이를 판매하는 곤충카페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문을 열었다.

이더블버그는 1년여에 걸쳐 에너지바 3가지, 쿠키 5가지, 양갱 1가지 등의 곤충과자와 메뚜기와 대추 등으로 만든 한방메뚜기차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 식용곤충이 많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간식을 선호하는 30~40대 주부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0배정도 늘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농가소득 증대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곤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14년에는 곤충의 식품원료등록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업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의 식품 소재화를 위한 과학적 검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의 승인을 담당했다. 그 결과 '14년에는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 꽃벙이(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2종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 받았으며, '15년에는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까지 추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곤충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5.7월에는 곤충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곤충카페, 곤충요리전문점 등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호텔과 대학, 특성화고 요리학과 등에서 곤충요리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효과

- 식용 곤충을 활용한 창업사례
- 식용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 미래 인류 단백질 공급원



우수사례 ② | 파주 인삼농협의 맥주산업
하우스맥주 판매
 규제 개선하니
파주 인삼쌀맥주 매출
2배이상 '쑤~욱'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은 취임 직후 김포파주인삼농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우 제조장 밖에서는 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하우스맥주의 제조장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하우스 맥주의 외부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14.4월 외부 판매가 허용되면서 김포파주인삼농협은 인삼쌀맥주를 외부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우스맥주 외부 판매가 허용되면서 김포파주인삼농협의 인삼쌀맥주 판매량은 '15.8월말에 이미 '14년보다 세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울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도 달리는 상황이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은 올 연말까지 추가 생산시설을 갖춰 하루 생산규모를 5천ℓ에서 2만2천ℓ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다고 할 수 있는 하우스맥주 규제를 개선하였더니 우리 인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인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가공제품의 매출액이 늘어나 6차산업이 활성화되며, 이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효과

- 인삼의 새로운 수요 창출
- 인삼 가공 등 6차산업화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5-5 협업을 통한

농정 시너지효과 창출

♣ 추진 배경

-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될 필요가 있으나, 농업·농촌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모든 분야를 감당하기에는 한계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필요

♣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중 10kg 포장 나لامي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15.4~)
 - ※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 격월 20kg 단량 공급 → (개선) 매월 10kg 단량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10kg 단량 나لامي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15.2월)
- (보건복지부)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 지원('15년 예산 반영)



-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농정전략협의회 개최('15.2월~, 총 5회)
 - ※ 장관(주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양청 기획조정관 등 참석
- 도시농업, 한·중 FTA 대책, 6차 산업, 농식품 수출, 농촌관광 등 논의



〈농정전략협의회 개최('15.2월~)〉

♣ 성과

- 10kg 포장 나لامي가 연중 공급된 이후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고, 항상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혜자 만족도 제고
- 양청과의 협업을 통한 농정방향의 정합성 유지 및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 농업·농촌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효율적 협의·조정

♣ 향후 과제

- 복지용 쌀 '나لامي' 구매 대상자 확대(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최저 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에서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 주요 농정 현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강화



우수사례 ① |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보건복지부 협업)

저소득 1인 가구 공급 '나라미' 소포장 맞춤형 공급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OO 할머니는 나홀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OO 할머니는 요즘 집으로 배달되는 복지용 쌀 '나라미'를 볼 때마다 흐뭇하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소포장인 10kg 단위 포대로 배달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판매하는 복지용 쌀은 20kg 단위였다. 1인 가구인 이OO 할머니가 20kg 한 포대 소비하는데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린다. 덩고 습할 때에는 바깥에 오래 보관하면 벌레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싶어도 양이 많아 보관의 어려움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오랜 보관으로 밥맛도 떨어졌다. 특히, 택배기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배달하여 집 앞에 두고 가면 쌀 포대가 무거워 운반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kg으로 포장된 '나라미'가 연중 공급됨에 따라 불편이 많이 덜어졌다. 옮기기도 편하고 오래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벌레가 생기는 것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밥맛이 좋아져서 고맙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나라미' 공급 체계를 개선함에 따른 성과이다. 그동안에는 '나라미' 공급 관련 모든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10kg 포장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작은 일이지만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이다.

'15.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통주를 상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연간 1,700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는 1,000가지가 넘는다. 좋은 품질의 전통주들이 많지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전통주 갤러리'는 전통주를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찾고 싶은 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술'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마련되었다.

갤러리에는 식품 명인이 빚은 명주, 품평회 수상작,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곳에서 제조된 술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주 시음테마는 매달 바뀌는데, 지역별·주종별·특성별로 전통주 소믈리에가 선정하여 해설과 함께 시음행사를 하고 있다.

갤러리를 찾는 방문자는 20~30대, 성별로는 여성, 외국인은 일본인 비율이 높다. '15.2월 개장 이후 9월까지 외국인 방문객은 1,600여명에 달하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통주 시음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주의 맛과 다양성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후지TV, 도쿄TV 등 유력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통해 '전통주 갤러리'를 가볼만한 한국명소로 추천 하는 등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를 부가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의 대표 발효식품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홍보와 함께 호텔·레스토랑 등 외식산업 운영자, 소믈리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주 비즈니스 컨설팅도 병행함으로써 전통주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우수사례 ② | '전통주 갤러리' 홍보(문화체육관광부 협업)

내외국인 1,700만명이 다녀가는 인사동 전통주 맛과 멋을 알리는 공간 마련



효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효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쌀 소비 활성화

농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5-6 소통과 공감을 통한 농정 참여 확대

♣ 추진 배경

- 농업·농촌의 개방화·고령화 등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농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업계 내·외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지를 확보하며, 역량을 결집해 나갈 필요

♣ 주요 내용

- 생산자단체, 식품·소비자단체·국민·학계, 공무원 등 167명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13.4.21)·운영(회의실적 : 총 159회)
- '농산물 수급조정위원회' 및 '축산물 수급조정협의회'를 발족, 생산자·소비자·품목전문가 등의 협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운영 및 선제적 수급관리(회의실적 : 총 102회)
- 장관이 직접 농정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이동필의 1234' 추진
※ ICT·수출, 농산물수급관리, 6차산업, 취약계층복지 현장 등에 걸쳐 총 339회



♣ 성과

-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박근혜정부 농정로드맵인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마련 및 쌀 관세화 등 농정현안 해결
- 수매·할당관세 수입 등 일방적 수급대책이 아닌, 협의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비용 절감
- 수급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가격 변동률 완화
※ 5대 채소류 가격변동률 : ('12) 14.0% → ('13) 12.9 → ('14) 9.8
※ '13년 민간자율 모돈 감축(13만두)으로 가격 조기 정상화 : ('13.3) 24만원/두 → ('13.12) 33
※ '14년 AI 발생시 업계 자율비축('14.5, 111만수)으로 '08년 AI 발생시 지원한 수급 대책(수매) 대비 약 5,563원 예산 절감



〈5대 채소류 가격변동률, %〉

♣ 향후 과제

-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추진
- 생산자-소비자가 공감하는 효과적인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강화



우수사례 ①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참여와 소통에 의한 공감농정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초석

농림축산식품부는 '13.4월부터 생산자·소비자단체, 식품산업계, 언론,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중에는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이장, 현장 농업인 등 16명의 일반국민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①행복 농촌 ②희망 농업 ③식품·소비자 ④국민사랑 축산 ⑤스마트 농정 ⑥농산물유통포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12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13년에는 박근혜정부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을 수립하기 위해 무려 76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친바 있다. '14년 이후에는 8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쌀 관세화, FTA협상,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예산편성 방향, 농식품 수출, 가축방역대책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국민농업현장 제정 등 다양한 농정이슈를 논의한 바 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농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삶의 질을 향상하는 농정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효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13~'17)의 실효성 확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농정의 신뢰성 제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3.3월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농정 현안과 정책의 변화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 창구로 개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한 건 이상의 농정소식 등을 소개하고, 국민의 댓글에 대해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다.

'15.3월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등교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지면서 자녀의 아침 식단이 고민"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댓글을 접한 이 장관은 실무자에게 어머니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침밥 간편요리법을 묶어 퍼낸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행복한 아침밥상' 등의 책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요리하기 편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메뉴를 추천하는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3년 친구 1명으로 시작한 이동필장관 페이스북은 '15년 10월 현재, 4,200여 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주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농촌·농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산업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업계를 포함하여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배려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넘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사례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SNS소통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에 가까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효과

농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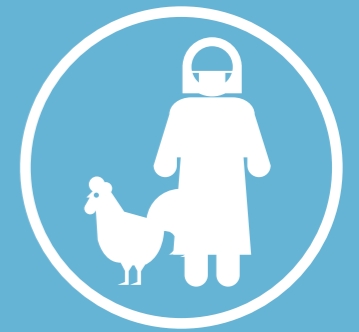
국민의 참여·소통을 통한 농정 신뢰도 제고

IV

박근혜정부의 주요 농정 추진내역

2013.2 ~ 2015.8

- 1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 2 주요 정책 도입 및 대책 수립
- 3 주요 회의 및 행사



1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월 일	주요 내용
2013.03.23	「식품산업진흥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새정부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법령 개정 실시
2013.03.23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 • 1차관·1차관보·2실·4국·8관·43과 및 5소속기관
2013.03.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적 이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간척지의 이용에 어업 추가(제2조)
2013.0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연령 확대(45세 미만 → 50세 미만)
2013.05.03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개편안 확정·발표 • 대상품목·보장 확대, 전담기관 설립 및 자연재해 지원 현실화
2013.05.31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개정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마련, 품종보호권을 제한하는 자가 채종 범위 구체화 등
2013.06.0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3.06.1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 인증기관 부실인증 방지 위해 동일 위반행위 3회 적발 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2013.06.12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도입 및 자금 지원 등 근거 마련
2013.07.01	돼지고기 등급기준 간소화 실시(축산법 및 축산물등급판정기준 개정) • 7월 1일부터 국내산 돼지·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 ※ 등급 표시 : (현행) 1+A, 1A, 1B, 2A, 2B, 2C, 등의 ⇒ (개선) 1+, 1, 2, 등의 등급
2013.07.10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신설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의 품종 보호(5명 증원)
2013.08.02	수익사 처방제도 시행(「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문제 등을 해결,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
2013.08.05	자연재해 피해 농산물 산지 폐기비 지원기준 신설 •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고시
2013.08.13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기반 마련(「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의 개념 정의, 동물학대 영상물 유통 금지, 동물운송규정 의무화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3.09.01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 시행 •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 제시,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
2013.09.12	농촌산업과 및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신설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1명 증원) 및 자유무역협정 대응(2명 증원)
2013.09.17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 공공비축 대상 품목을 미국에서 밀, 콩까지 확대(제2조)
2013.10.01	농지연금 제도개선 •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가입비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2013.10.0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맷쌀의 등급표시기준을 간소화(5개등급 → 3)하고, 단백질 함량표시는 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
2013.10.04	산지축산 T/F팀 구성·운영(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협, 협회 및 대학 등) • 산지를 활용한 가축방목지 확대, 산림훼손 방지 등 제도개선 협의
2013.10.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업무 시·도지사 이양, 교육훈련·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및 술 품질인증·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등
2013.10.10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수급조절매뉴얼 보완 및 추가 시행 • 배추·양파 매뉴얼 보완, 무·건고추·마늘 수급조절매뉴얼 추가 시행
2013.10.18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과 방법, 품종보호 출원 절차 및 품종보호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을 정함
2013.11.11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방안 마련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
2013.11.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임대기간 연장(8년 → 10)
2013.12.09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국내 가축유전자원 보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14.1.2 시행)
2013.12.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1종 저수지 규모 하향 조정(총저수량 50만㎥ → 30)을 통해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 강화

월 일	주요 내용
2013.12.30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2013.12.30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 불요불급한 농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폐지 등
2014.01.0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시행 •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 통합 제정(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
2014.01.0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자체검사업체 검사 기준 제출 의무화, 흉상·흑상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2014.01.15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예비 농업인 및 귀농인 창업지원 강화, 우수기술사업, 피 보증업체 금융지원, 법인보증확대 및 보증 효율 인하, 가공·유통분야, 출연제도 개선, 보증취급 기관 확대 등
2014.02.23	「축산법 시행령」 개정(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 • 축산업 허가제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농 이상 농가까지 확대(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준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
2014.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등
2014.03.1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종자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2014.03.24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유기농업자재 관리·감독 및 인증관리체계 개선 • 부실인증 행정처분 강화, 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품질검사 및 유통조사 강화
2014.03.24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으로 2차 피해 발생 시 지원 기준 신설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 재해로 인정하여 복구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14.03.24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 인삼류의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기구만을 이용
2014.03.28	전국단위 원유 수급조절제도 시행 • 쿼터이력관리 시행, 임대 납유권 운영방안 마련, 집유주체별 자율감축 필요량 설정 등
2014.04.16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 시설 추가

월 일	주요 내용
2014.05.13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개선 • 선정대상 기준 연령완화 및 선정방법 변경
2014.05.20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014.06.0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4.06.04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신기술을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상용화 촉진
201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 전문손해평가 인력의 양성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2014.08.06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2014.08.27	말 산업 특구 지정 요건 완화(「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 시설기준과 생산규모 등 완화, 제주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도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2014.09.01	「농약 안전사고 예방 농약 표시기준」 개정(농촌진흥청) • 주요내용 : 위험 정보 글자 확대, 식음료 오인 그림 표기 금지 등 ※ 글자크기 : 앞면: 5포인트→8포인트, 뒷면: 5포인트→10포인트
2014.09.0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2014.09.12	「인삼산업법」 개정(인삼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경작신고 기관 확대 등)
2014.09.12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 인삼산업 종합계획 세부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2014.09.2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림청) • 산지축산 확대(3ha→5) 등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확대 등
2014.09.2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림청) • 산업단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예외규정 확대, 비탈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기준 완화, 산지전용타당성조사기간 90일로 규정
2014.09.30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개정(농촌진흥청)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폐지 ※ 신청당시 연령 : 만50세이상 → 폐지
2014.11.01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비교를 통해 구매토록 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

월 일	주요 내용
2014.11.1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인삼경작신고 관련 사항,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등
2014.11.17	「수출 사료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시행 • 정부기관에서 수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료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료 수출 활성화에 기여
2014.12.08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2014.12.15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사육방식 확산과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기대
2014.12.28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돼지의 사육에서 판매까지 전단계 기록·관리, 국내 한돈 산업 발전과 소비촉진 기여
2014.12.2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2014.12.3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농협 사업구조개편 개편 과정상 쟁점 해소, '15.2월 판매·유통사업 경제지구 이관 등
2015.01.0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2015.01.06	「양곡관리법」 개정 • 국산-수입산 혼합 유통·판매 금지와 생산연도 혼합 유통·판매 금지(제20조의4 신설)
2015.01.0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어업인·농작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2015.01.06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해산사유 보완과 행정조치 근거 마련
2015.01.06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민박에서 조식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2015.01.06	창조농업 육성 및 효율적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창조농식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수출진흥과를 정식기구로 개편하고 친환경축산팀과 농기자재 정책팀을 한시조직으로 신설
2015.01.15	농경지 토양수분 정보 실시간 공개(http://weather.rda.go.kr)(농촌진흥청) • 전국 100개 지점의 토양 시료 채취 분석 결과
2015.01.20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 •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2015.01.20	한국마사회의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 역할 강화(「한국마사회법」 개정) • 국내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의 말 산업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토록 조치

월 일	주요 내용
2015.01.2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하여 정비(사업범위를 산림분야로 확대) 등
2015.01.20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전문 인력 양성, 품질표시, 차 문화 보급 등
2015.01.20	「농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 • 농지 소유 이용규제 합리화,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합리화 등
2015.01.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산림청) •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법적근거 마련, 휴양림 등 시설 타당성평가 명시 등
2015.01.30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 2중 점검 시스템’ 도입 • 부실인증 사전 예방을 위해 인증승인 건에 대한 승인 적합성 재확인(현장점검 등)
2015.02.03	「인삼산업법」 개정 •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5.02.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2015.02.26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 신설 • 가축질병의 효율적 대응 및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관리 체계 구축(9명 증원)
2015.03.12	한국식품연구원 내 ‘할랄식품사업단’ 구성 • KMF 할랄인증 관련 기술지원 및 수출업체 상대 정보제공
2015.03.27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식품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식품명인전수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2015.04.07	할랄식품T/F팀 발족(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 포럼 개최 등 할랄식품산업 관련 정책 총괄
201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 도매시장 과밀부담금 감면, 과징금 부과방식 변경, 경매사 제재 처분 근거 등
2015.05.14	인삼의무자조금 도입 • 생산·제조·유통 등 인삼업계 전반이 참여, 농산물 최초로 의무자조금 도입
2015.05.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신설 • 경영체 DB 구축 및 과학농정 추진 기반 마련(4명 증원)
2015.06.0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차산업과 2차·3차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시행
2015.06.17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설치(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 분산 운영되어 온 농업 창업지원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통합·체계화 등

2 주요 정책 도입 및 대책 수립

월 일	주요 내용
2015.06.22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2015.06.22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구제역·시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의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2015.06.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직거래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인증제 실시 등
2015.06.22	「인삼산업법」 개정 •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된 의약품용 인삼류에 대한 예외 적용 신설
2015.06.30	농식품 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07.06	인삼제품 CODEX 세계규격화 승인(제38회 CODEX 총회) • 김치(01)에 이은 우리나라 2번째 승인품목으로, 인삼제품 수출확대 기반마련
2015.07.07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조정,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015.07.0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서비스·안전 기준 및 서비스·안전 교육 내용과 실시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조식제공 시 시설기준 등 규정
2015.07.07	인삼특작T/F팀 신설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인삼·특작류 산업화 확대·촉진 및 국내산 자급을 향상 등 전략 수립을 위한 T/F 운영
2015.07.20	「식물신물질 보호법」 개정 • ‘품종보호 원부’ 내용 변경 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15.07.21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변경하여 품목도입의 신속성을 높임
2015.07.2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공포(‘15.1.20) 및 하위법령 시행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등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2015.07.29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 및 지원 제외기준 점수 고시
2015.08.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곤충 위해성 평가결과 손실보상 근거 마련,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 신설 등
2015.08.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 저수지 상류 500m이내의 지역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규제완화(제30조)

월 일	주요 내용
2013.03.26	‘외래유입 돌발병해충 예방·방제 강화계획’ 수립 시행(농촌진흥청) • 대상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매미충 / 농가자체 방제(1차), 산림청·환경부 공동방제(2차) ※ 산림청(야산), 환경부(공원) 방제계획과 연계 적기 발생밀도 조사
2013.03.29	네이버 TV캐스트 ‘농업기술동영상’ 채널 서비스 실시(농촌진흥청) • 미니정원 꾸미기, 귀농우수사례, 재배기술 동영상 등 30편
2013.04.15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발표 •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2013.05.01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특정부위에 대한 소비편중 개선(‘17년까지 식육가공판매소 1천개소 육성)
2013.05.02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수립 •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2013.05.03	‘조사료 증산 보완 대책’ 마련 • 동계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 및 사업지원 체계 강화 등
2013.05.13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료가격 상승 감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1.3조원, 1.5%)
2013.05.27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수립 • 유통경로간 경쟁체계 구축 및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와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 수급관리
2013.05.29	‘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시행 • 배추·양파 가격안정대 설정 및 위기단계별 대응 대책 마련
2013.05.29	‘12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보고서 국회 제출 • 대책사업 정량적 평가,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성과분석
2013.05.31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제시(2020년까지 도시농업 실천공간 3,000ha 조성)
2013.06.08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 •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등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2013.06.25	제1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 농업분야의 현장실습교육 교수요원으로 활동

연월일	주요 내용
2013.06.28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 •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6차산업화 성장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지역 네트워킹 강화 등
2013.07.01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55%에서 58%수준(신설품목 40%)으로 기준 상향 • 과수 대파대 등 38항목 42.6% 인상
2013.07.01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개시 • '21년 종자 수출 2억달러 달성, 수입대체로 종자 자급률 향상
2013.07.08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중장기(~2020) 계획’ 수립 • '22년까지 농식품 예산대비 R&D 예산비중 10%로 확대
2013.07.17	‘농식품 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현장과 밀착된 데이터 중심의 과학 농정체계 구축 추진
2013.07.17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2013~2022) 기본계획’ 수립(농촌진흥청) • 차세대BG21, 우장중프로그램, 타 부처 유전체사업 등 대내외 환경 반영 ※ 2022년까지 세계 4위권 진입, 석·박사급 인력양성(7,500명)
2013.07.29	‘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방안’ 발표 • 1) 수급균형 추진, 2)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및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수급조절 및 관측기능 강화, 3)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확대 중점 추진
2013.07.30	농가당 피해복구비 지원한도(5천만원) 초과분 추가지원 방안 마련 •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장기저리 융자금(연리1.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추가 지원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2013.07.31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및 6차산업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산지생태 축산 시범사업 추진('14~)
2013.08.02	‘농촌인력문제 해소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수립 • 귀농·귀촌희망자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교육·상담·홍보·정보제공 등
2013.08.05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대책’ 수립 • '14년부터 원예·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2013.08.13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열화사업의 성과분석 및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주체간 협력을 통한 축종별 산업발전 등 건전한 계열화사업 육성 대책
2013.09.02	‘막걸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설개선, R&D, 유통경로 확충,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해외진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 제고
2013.09.03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수립 • 직거래 활성화 및 대량수요처 발굴, 산지거점조직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등

연월일	주요 내용
2013.09.30	‘14년 FTA 농업인지원 투·융자 계획 국회 제출 •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FTA 국내대책 재정지원 계획을 조정·보완
2013.10.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국회 제출 및 홍보 • 국회 상임위 제출(10.7.) 후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책자 배포(약 1,000부)
2013.10.23	‘중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육종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유통, 민간역량강화·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수립
2013.11.01	‘농지은행사업 효율화’ 추진 • 전국 농지실거래 가격 정보 대국민 제공서비스 개시
2013.11.19	‘승마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협업으로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 건전한 레저 문화 도모
2013.12.05	‘농림축산 통합관리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통합망 구축 •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102개 농식품사업 연계, 맞춤형 농정 기반 마련 등
2013.12.05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 신청 체계 구축 • 주요 직불금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도 함께 처리
2014~2016	밤나무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개발 연구(산림청) • ('14년 주요성과) 기반기술 개발, 산지양계 효과분석 등
2014.01.01	농지규모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 • 전업농 및 젊은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2%→1)
2014.01.01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 ('13) 790천원 → ('14) 850천원(7.6% 인상)
2014.01.0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14년 신규 시범사업 실시(42억원)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등
2014.01.02	ICT 융복합 축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보급(2014년 예산 : 59억원)
2014.01.09	동물복지 도축장 최초 지정(2개소 : 부경, 김해 축산물공판장) •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 충족 및 축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
2014.01.16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수립 • 그간 환경·사회적 문제점 극복, 축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014.01.17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원에 대해 금리인하 실시 • 농지규모화사업(2%→1),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자금(3%→2), 우수후계농 추가 지원사업(3%→1), 농촌주택개량자금(3%→2.7, 65세이상 2.0)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4.02.10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결정 • '13년산~'17년산 쌀 80kg당 목표가격 188,000원
2014.02.10	'다문화가족지원 개선방안' 수립 • 수요자 중심의 교육편의 서비스 지원, 현장실습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
2014.02.17	"14년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설원예, 과수, 양돈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 팜' 확산사업 추진
2014.02.27	'농협 상호금융사업 발전 계획(안)' 승인 • 농협법 부칙 26조 규정에 의한 '농협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안)' 승인
2014.04.10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요내용 : 가구현황, 경제·사회활동 참여실태, 교육·복지실태, 정책수요 등
2014.04.10	국립농어업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명칭 변경
2014.04.24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추진계획' 수립·발표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7대분야 35개 과제 추진
2014.04.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마을 주민의 역량 수준에 따라 예비-진입-발전-자립 단계로 사업추진체계 개편
2014.05.06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수립 •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 마련
2014.05.09	'6차산업화 사업자(예비) 인증제 추진 계획' 수립 • 자금·판로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육성
2014.05.29	'1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보고서 국회 제출 • 대책 사업 정량적 평가,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성과분석
2014.05.3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선방안' 수립 • 품목군별 지급단가 차등화, 유기지속직불 도입 등
2014.07.18	쌀 관세화 결정·발표 • 쌀 의무수입량 증량 방지를 위해 '15.1.1부터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
2014.08.14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사전예방 강화, 발생 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
2014.09.11	'14년도 신지식농업인 선정 • 13명 선정(과수5, 채소1, 화훼1, 특작1, 축산2, 식품가공3)
2014.09.18	'한·영연방(호주, 캐나다)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 피해 영향 분석(15년간 21,329원)을 통해 국내 보완대책 수립(10년간 21,468억원)

월 일	주요 내용
2014.09.18	쌀 관세율(513%) 결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 • 쌀 농가 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쌀 소비촉진 및 부정유통 방지 등
2014.09.23	'15년 FTA 농업인지원 투자·융자 계획 국회 제출 • 환경변화,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내대책 재정지원 계획 조정·보완
2014.09.24	포스몰(Pos-Mall) 시스템 구축 및 거래 개시 • 중·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Pos 단말기에 온라인 몰 구축
2014.10.06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14~'18)' 수립 • 자원확보 강화, 산업화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 및 10대 세부 시행계획
2014.10.08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 상환 연체시 연체이자 부과, 농촌 단순거주(비농업인)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차등화, 신용유이자 등록기간 변경 등 포함
2014.10.10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14~'18) 기본 계획' 수립 •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2014.10.23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수립 • 수요조사,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인센티브 등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014.11.28	'육묘산업 발전대책' 수립 • 체계적인 육묘관리시스템 구축,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 우량묘 유통·소비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 수립
2014.12.11~31	아세안+3 쌀 비축사업(APTERR)용 미국 매입 • 쌀 비축 약정수량 787천톤 중 한국은 150천톤('14년 3만톤 매입)
2014.12.26	'농어촌용수이용 목표연도('24년) 합리화 계획' 수립 • '24년도의 논·밭 면적에 대한 농어촌용수의 개발계획 및 합리적 공급·배분계획 수립
2014.12.26	'발농업기계화 촉진대책' 수립 • 발농업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주산지 규모화기반 확대 등
2014.12.29	'농지연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감정평가 비용 인상, 소유농지 면적 제한 완화, 가입시 부대비용 납부 편의 도모 등
2014.12.30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수립·발표 •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교육·일자리 등 7개 분야, 46.5조원 투융자
2014.12.31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선진국 수준의 전문농업인 양성체계 확립을 위해 농고·농대 시범학교 선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운영, 품목대학 운영 등 추진
2014.12.3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추진절차·준수사항 등)' 제작, 배부(지자체)
2014.12.30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 계획' 수립 • 개방 확대에 따른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및 농산물 수입대비 방어전략으로 GAP 확대

월 일	주요 내용
2014.12.31	‘2014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백서 제작·발간
2015.01.01	쌀 관세화 시행 • TRQ 물량(40.9만톤, 관세율 5%) 이외 513% 관세율 적용
2015.01.01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에 대해 금리인하 실시 • 농기계구입자금(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자금(3%→1)
2015.01.01	‘15년도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3만원/3.3㎡ → 3.5)
2015.01.04	농림축산 통합관리망 구축(2차) • 농업경영체 대상 37개사업 통합·연계
2015.01.15	‘한식정책 발전방안’ 수립·발표 • 외부 지적사항을 개선, 사업 구조조정 및 추진체계 강화 등 한식 정책 기반 마련
2015.01.30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2015.02.05	‘농식품 ICT 융복합 과제 추진 계획’ 수립 • 농업·농촌·농식품 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2015.02.27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 수립 •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5.03.02	‘유기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 생태계 조성, 창의적 산업 활성화 지원, 소비시장 확대 등
2015.03.05	‘목재펠릿 비축량 구축 사업 계획’ 수립(산림청) • 전국적 판매망 구축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증진 및 구매 불편 해소
2015.03.10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대상 선정(17개 시군) • (영주)치유농업, (순창)동네목수, (청양)어르신 시집, (함평)초등보건·요리교육 등
2015.03.1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추진방안’ 수립·발표 •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델 발굴·확산, 추진시스템 체계화,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
2015.03.30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4년까지 도시민의 10%수준 도시농업 참여 추진(‘14: 108만명 → ‘24: 480)
2015.04.07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운영 중 수렴된 과제를 중심으로 외식업계의 해외진출 확대에 대응, 애로 해소 및 지원 강화
2015.04.2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 중기계획(2015~2017년)’ 수립 • 정보보안 조직 강화, 정보보호 활동 개선,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5.04.24	“15~‘19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 수립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농업의 신수요 창출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추진분야 및 3대 추진기반 강화 전략마련
2015.04.27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업환경보전역할 강화 및 친환경농업 내실화 등 친환경농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안
2015.04.30	‘담리작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담리작 재배면적 확대(전년 대비 22% 증)를 통한 식량지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
2015.05.26	‘산악승마 활성화 계획’ 수립(산림청) • 산악승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저변확대,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2015.05.28	‘14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보고서 국회 제출 • 대책 사업 정량적 평가,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등을 통해 성과분석
2015.06.02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 • ‘기술·자본·시장’ 삼박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 ‘20년까지 농식품 벤처 비중 10%까지 확대
2015.06.04	‘한·뉴질랜드, 베트남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 ‘한·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 수립 : 9년간 3,523억원(피해 영향 분석 : 15년간 3,558억원) • ‘한·베트남 국내 보완대책’ 수립 : 10년간 664억원(피해 영향 분석 : 15년간 705억원)
2015.06.04	정부 합동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국내산업 보완대책도 함께 제출)
2015.06.17	‘14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보고서 국회 제출 • 대책 사업 정량적 평가, 수혜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등을 통해 성과분석
2015.06.25	메르스 피해극복을 위한 ‘외식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일몰기한 연장(‘15말 → ‘16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추진) • 외식업체 육성자금 배정한도 확대(27억원 → 300), 금리인하(4% → 3), 사업의무량 경감 등
2015.06.29	“15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수립 •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과제별 ‘15년 시행계획 수립
2015.06.30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 • 인프라 구축, 수출지원 등 8대 분야 19개 세부과제 추진, ‘17년까지 수출 15억불 달성 목표
2015.07.01	농업 난방용 면세유종 변경 시행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종에서 경유제외
2015.07.01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인상 • 벼 등 대다수 작물 피해복구비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작물 농약대 등 32개 항목 단가 인상
2015.07.01	SNS 기술 컨설팅 확대 실시 • 품목별 기술,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20개 품목 확대 운영

3 주요 회의 및 행사

월 일	주요 내용
2015.07.21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 방안’ 마련 •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질병단계별 방역효율화, 백신관리체계 개선 및 방역주체간 책임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대책 마련
2015.07.21	‘15년도 6차산업화 지구 선정(‘15년 선정 : 서천, 영광, 문경, 서귀포, 횡성, 의성 6개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신규지구 선정
2015.07.23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여성 농업인 역할 증가 추세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통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추진경 ※ 임대사업소 확대 : (‘13) 294개소 → (‘14) 336 → (‘15) 379
2015.07.24	농촌관광센터 개소(농촌관광 상설체형 홍보관) •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키자니아, 도시어린이들에게 농촌관광 체험기회 및 정보제공
2015.07.28	‘15년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추진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집중·발굴 지원을 통해 창업 붐 조성 ※ 모집(7~8월) → 지역예선(9월초) → 전국본선(10월) → 왕중왕전(11월)
2015.07.28	ICT기반의 ‘창조마을’ 확산을 위한 시범조성 추진 • 세종(‘14.10월) 및 청학동(‘15.7월) 외 추가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6개소)
2015.07.29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방안’ 수립·발표 • 지역 특산음식자원과 식재료, 농촌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대표 음식관광코스 개발 등
2015.07.31	‘15년도 품목특화 전문교육(토마토대학) 실시 • 첨단시설 재배환경 진단 등 ICT자동화시설 이용농장의 핵심요소 해결 중심 ※ 60명/4기수, 4개 권역(경기·충청, 강원, 영남, 호남)
2015.08.0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실시(3~4% → 2.5~3%, 변동금리 대상 확대) •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 등은 3% 적용,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 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 산정(전산시스템 개발(약 3개월) 후에 차등 운영 예정)
2015.08.05	‘15년도 신지식농업인 선정 • 10명 선정(과수2, 채소2, 화훼1, 잡곡1, 식품가공4)
2015.08.20	‘미래성장산업을 이끄는 우수 농업인들’ 사례집 발간 • 분야별로 역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사례를 전파

월 일	주요 내용
2013.03.04	‘13년 귀농·귀촌교육 공모기관 선정(3.4) 및 교육생 모집(3월~, 2,500명) ※ MBC아카데미 등 38개 기관 50개 과정 심사·선정(15억원)
2013.03.11	제61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취임식
2013.03.13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 및 유통전문가 간담회(VIP 주재) •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 채널 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지시
2013.04.18	‘13년도 신지식농업인 선정 • 21명 : 과수 3, 채소 3, 화훼 2, 특작 2, 축산 2, 임업 2, 식품가공 등 7
2013.04.22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6개분과위, 167명)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내용 : 분위원 및 분과위원 전원 참석 후 분과위별 운영계획 수립
2013.04.30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발족 •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정부 인사로 구성(20명)
2013.04.30	‘13년도 제1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aT센터 회의실) •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안) 심의
2013.05.01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2013.05.0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례 발표, 내년도 사업개선방향 등 논의
2013.05.06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개정(20건) 심의
2013.05.10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13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회의 • 농협중앙회 농·축경 담당부장 및 팀장 등 참석
2013.05.10	‘13년 제1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최 • ‘12년도 추진실적 및 ‘13년도 시행계획
2013.05.14	‘13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 • 산지·소비자의 경쟁력 있는 농식품 브랜드 선발 시상·홍보(대통령상 1점 등 총 21점)
2013.05.14~17	‘13년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고양 킨텍스) • 농식품기업에 비즈니스 기회 제공, 업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정보교류 확대
2013.05.15	제3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 • 주제 : 2020 글로벌 식품시장전망
2013.06.03	농촌재능나눔운동 선포식 실시(양평 보릿고개마을) ※ 농촌 재능나눔 운동본부 공동대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앙일보대표이사(송필호), 예술감독(금년새)

월 일	주요 내용
2013.06.11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택·종택 등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와 종가음식 등 전통 음식을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 발굴·육성 및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국내외에 홍보
2013.06.14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유통인,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 민간의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적인 역량 제고
2013.06.17~21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차 FAO 총회 참석, 한-네덜란드 농업협력 MOU 체결, 프랑스 6차 산업화 사례 점검 등
2013.06.18	외식산업발전포럼 1차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방안 토론
2013.06.20	제1회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선정(22개 기업·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활성화에 공헌이 큰 기업·단체를 인증하여 금리우대·세금감면 등 지원
2013.06.26~29	중화권 K-FOOD FAIR 개최(중국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서남부 내륙시장 공략, 유망품목 입점확대, 프리미엄 시장진입
2013.06.26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본부 발대식(경기 이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스스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붐 조성을 위한 추진본부 발대식 참석
2013.07.04	도농교류의 날 제정기념 선포식 및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의 날 참석자(500여명), 참가마을 및 단체(305개마을 340개부스, 관람객 93천명)
2013.07.11	제2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분과위별 논의 진행상황 점검·평가, 중점과제 보고·논의
2013.07.1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대책 추진현황(기획재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등
2013.07.19	'13년도 제2차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15명)
2013.07.22	'13년도 제1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08.12	제2차 외식산업발전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식품정책 검토과제에 대한 포럼위원 발표/토론
2013.08.13	제3차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8.13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전문가 창립 포럼(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촉장 수여, 6차산업화 추진계획 설명 및 포럼 활동계획 협의 / 포럼위원 : 16명

월 일	주요 내용
2013.08.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 검토 외부전문가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5명, 학계·연구계 5명), 외부전문가
2013.08.26	'13년도 제2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08.29	'13년도 제3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08.29	'13년 농업·농촌 6차산업 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개 광역시·도, 74개 지자체, 163개 농어촌기업 참여, 86천여명 관람
2013.08.30	'13년도 제4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09.05	산지축산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를 축산과 연계 새로운 산림농업 체계 정립과 중장기적 연구방향 설정
2013.09.05~07	'13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70여개 브랜드 경영체 참여)
2013.09.11	제3차 외식산업발전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식품정책 '외식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2013.09.16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CJ-동반위-소비자단체협의회-농식품법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확대, 농식품 수출 및 한식세계화 선도 협력
2013.0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2013.09.25~28	'1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축산관련 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생산기술 등을 전시·시연하여 농가와 관련기업체간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
2013.09.26~29	아세안 K-FOOD FAIR 개최(베트남 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신흥거점 개척, 중상류층 시장 공략, K-FOOD 프리미엄화
2013.09.26	제16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등 발굴·포상
2013.09.27	제4차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월 일	주요 내용
2013.10.04	산지생태축산 MOU 체결(산림청 주관, 산림과학원·축산과학원) • 산지축산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조인
2013.10.07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 소형승합차, 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교통서비스 발굴사업 계획 초안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
2013.10.16	제4차 외식산업발전포럼 개최 • 과제별 책임연구자의 발표 후 상호 의견 개선 및 토론 진행
2013.10.19	제7회 전국농업인 두레종물 경연대회 개최 • 남산 한옥마을에서 농업인으로 구성된 8팀 참여
2013.10.19~24	미주권 K-FOOD FAIR 개최(미국 뉴욕, LA) • 전략 : 히스패닉, 아시안 마켓 공략, 메인마켓 확대, 유기농 시장 진입
2013.10.24~26	제3회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 바른 식생활 정책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관람객 24천명)
2013.10.25~27	“13년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10.25~27, SETEC) •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정보, 상담 및 체험 기회 제공(100여개 기관·단체 참여)
2013.10.28	‘18년 국제낙농연맹(IDF) 총회 한국 유치 확정 • 국내 낙농산업 도약 계기 마련(IDF : 1903년 발족, 54개국 참여)
2013.10.31	‘막걸리의 날’ 선포식(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지정) •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출시, 국내·외 막걸리 소비촉진 및 시장 활성화 유도
2013.10.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자체 및 소속기관 설명회 개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작성 안내
2013.10.31~11.02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개최 •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유형별 부스를 운영, 직거래 체험의 장 마련
2013.11.03~11.10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전략 분석 마련을 위한 조사 • 농어업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조성 및 운용방안(뉴욕, 보스턴)
2013.11.04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전통식품 명인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정여부 심의
2013.11.19	‘13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개최 • 김장채소 소비촉진 홍보 및 사회취약계층 김치 전달
2013.11.21~23	홍콩 K-FOOD FAIR 개최 • 전략 : 신선식품 제2의 수출시장화, 광동성 등 남부시장 공략
2013.11.22~24	‘13년 대한민국 화훼대전 개최 • 화훼축제를 체계화하고, 공동행사를 통한 화훼단체 결속력 강화

월 일	주요 내용
2013.11.26	FTA 등 농업통상관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한·중/영연방 FTA, TPP 등 농업통상 현안 및 향후 계획 등
2013.11.29~30	‘13년 과일산업대전 개최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확대 유도
2013.11.27~12.11	제5차 외식산업발전포럼 개최 • 제4차 회의 6개 과제에 따라 토론 진행
2013.11.29	‘13년 농촌재능나눔 수기 수상作品集 발간 • 수기 공모전 수상(개인 및 단체 각10편)作品集 제작(500부/e-book) 및 배부
2013.12.05	제5차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2.06	‘13년도 제5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12.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여성창업현장 방문 • 농촌여성의 창·취업관련 의견수렴, 농업의 6차 산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2013.12.13	농약 가격 표지제도 개선방안 대토론회(농촌진흥청) • 농업인단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학계,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토론 및 의견 수렴
2013.12.15~12.20	일본·중국의 농업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및 NH무역 경제사업 점검 • 일본(도쿄), 중국(북경, 남경, 상해)
2013.12.17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시상식 개최 • 농촌마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마을지도자, 재능기부자, 지자체, 전문가 등을 발굴하여 포상 (99점 : 대통령 12점, 국무총리 11점, 장관 76점)
2013.12.18	‘13년도 제6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최근 DDA/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2013.12.27	제1차 민간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농식품 수출동향, 수출개척협의회 운용계획 등 논의
2014.01.14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식품-소비자분과회의 개최 • 신식품정책 추진방안 설명 및 토론
2014.01.15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SPC-동반위-녹색소비자연대-밀산업협회) • 국산농산물 원료사용 및 신제품 개발 확대, 수출협력 지원

월 일	주요 내용
2014.01.22~28	'14년 농업전망대회 개최(서울, 영남권, 호남권 분산 개최) • 국내외 경제동향 등 향후 10년간의 장기전망 등 발표
2014.01.23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14년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사업 계획 심의·확정(품목 추가·보상 확대 등)
2014.02.10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및 일반단체 대상 공모
2014.02.19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개선 수요조사 및 토론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 개선의견 수렴
2014.02.20	농업보험사업 약정 체결 • 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정책보험 사업 약정·서명
2014.02.21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안건 심의
2014.02.26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설명회 개최 • 시·도 및 시·군 담당자 등 60명
2014.02.27	한·중 FTA, TPP 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한·중 FTA, TPP 등 최근 FTA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014.02.28	모태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식품투자조합 대표이사 및 운용 관계자
2014.03.06	'14년도 제1차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15명)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VIP 주재)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대책 등 보고
2014.03.21	'14년 농업인행복버스 출범식 개최 • 의료지원, 장수사진촬영, 문화공연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014.04.01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및 지정서 전달 • 완도(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돌담 밭
2014.04.03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MOU 체결 •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식품 R&D투자효율화 및 중자분야 지재산 창출·활용 강화를 위한 MOU 체결
2014.04.04	제9차 국제식물보호위원회(IPPC) • 제8대 의장으로 선출(농림축산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
2014.04.11~12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전남 강진, 완도)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4.04.12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선포식 참여 • 완도(청산도) 구들장 논 등재 선포식
2014.04.29	제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 "ICT 융합 스마트농업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이다."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4.04.3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농심-동반위-여성소비자연합-감자연구회) • 수미칩 등 국산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판매 확대, 해외법인 활용 수출확대 등 협력
2014.05.02	제2차 민간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1차 회의 이행과제 추진실적 점검,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 보고 등
2014.05.02~04	베트남 호치민 K-FOOD FAIR 개최 • 전략 : VIP 등 신흥거점시장 개척, 젊은층·중상류층 시장공략, K-FOOD 프리미엄화
2014.05.09	농촌마을 리모델링 한·일 심포지엄(aT센터) • 주제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2014.05.12	'14년 제1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최 • '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14년도 시행계획
2014.05.14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매일유업-동반위-소비생활연구원-낙농육우협회) • 원유 등 국산 농축산물 구매확대 및 대중국 우유수출 확대 등 협력
2014.05.15	녹비작물 증자생산 및 녹비이용 친환경 쌀 생산 워크숍(농촌진흥청) • MOU 체결, '민·관·학·연 협의회' 발족식, 녹비 토양환원 시연 등 ※ 민·관·학·연 협의회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농촌진흥기관·학계·KRF·재배단체 등 43개 기관
2014.05.16	농업인 단체 간담회 • FTA 협상동향 및 한중 FTA 국내대책 수립방향 등 농정현안 설명 및 의견수렴
2014.05.21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서울)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등
2014.05.22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 '14년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2014.05.28~29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강원)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4.05.28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14년 공감위 운영현황 및 계획, '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농정현안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4.05.30	농업재해보험 내실화방안 토론회 • 농업인단체, 학계, 보험업계 등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2014.06.01	SNS 기술 컨설팅 실시 • 품목별 기술,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6개 품목 시범사업 추진
2014.06.02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외식기업 해외진출 및 지원현황 보고 및 개선방안 등 논의
2014.06.10	국가농업유산 지정(제3, 4호) •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
2014.06.13	FTA 협상동향 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한·중 FTA 등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014.06.16~24	'14년도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1차 :6.16, 2차 : 6.18, 3차 : 6.23, 4차 : 6.24) • 한·중 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 설명(농업인 단체, 등)
2014.6.19~21	제4회 식생활 교육박람회 개최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정책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관람객 30천명)
2014.06.20~22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 한-투르크 농업협력 MOU 체결 등
2014.6.20~22	'14년 귀농·귀촌창업박람회(서울무역전시장) 개최
2014.06.25	제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 '농산업발전을 위한 농학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4.06.25	가축전염병 확산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KT 업무협약(MOU) 체결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람·차량 이동과 AI 확산 간의 연관관계 분석, AI 확산 경로 규명, 사전 방역을 위한 발병 예상지역 선정 등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
2014.06.25	2014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농촌진흥청) •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생산·판매를 위한 구매패턴 분석 ※ 유망시장 및 상품분석: 곡류, 과일류, 육류 등 6개 부류, 발표회 참석자(선도농가 등 1,000여명)
2014.06.26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 32개 체험마을, 6차산업 업체 등이 참여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기회 제공
2014.06.26	현장문제 해결 '창조농업 7대과제 사업단' 출범 • 농업에너지절감, 가축분뇨자원화, 6차산업화 등 정책·현장·R&D 연계 프로젝트 추진
2014.06.27~07.06	제1회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 개최 • 말 산업전, 승마대회 등을 통해 승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발과 승마 대중화에 기여

월 일	주요 내용
2014.06.27~29	중국 상해 K-FOOD FAIR 개최 • 전략 : 중국시장 전역 진출기반 확충, 유망품목 확대진출 배가, K-FOOD 프리미엄 강화
2014.07.01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수원-양재역) 및 상담서비스 개선
2014.07.09 2014.07.17~18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7.9 :경남 함양, 7.17~18 : 경북 안동, 의성)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4.07.22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 농가소득 안정, 수출확대 등을 위해 기존정책 점검, 향후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선정
2014.07.23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 '14년 상반기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협의
2014.08.06~08	농촌재능나눔 제1회 나누미 캠프 개최(강원 정선)
2014.08.08	농산지역계 모델개발 위한 현장토론회(산림청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등 50여명) • 산지역계 모델개발 연구 경과 및 계획 보고, 발전방안 토론 등
2014.8.8.~11.23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대비 행사추진단 구성·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미래과제반, 홍보반 등 5개반으로 구성·운영
2014.08.12	'14년 제2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최 • 제2차 기본계획('10~'14)추진현황 및 제3차 기본계획('15~'19) 수립방향 등
2014.08.12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농림축산식품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산업통상자원부) 등
2014.08.14~12.12	쌀산업 발전협의회 운영(13회) • 양허표 수정안 및 쌀산업 발전대책 논의
2014.08.20 / 09.15	농림축산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 간 농식품 수출 및 소비확대를 위한 MOU 체결(8.20) • 대한상공회의소 내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9.15)
2014.08.21	제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 정책"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4.08.26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심의
2014.08.27	농촌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행사 추진 • 문화융성위 및 문체부와 연계, 농촌지역 주민 및 방문객 대상 문화공연 제공
2014.09.01	쌀산업 한마당 행사('쌀산업에 미래를 건다') 개최 • 우리 쌀산업의 과거·현재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쌀산업 정보 공유

월 일	주요 내용
2014.09.02	'14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통령상 1점 등 22점 선발·시상)
2014.09.02~05	'14년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양재 aT센터) • 개최실적 : 14천명 방문, 369개 식품기업 참가, 바이어상담액 455억원 등
2014.09.03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VIP 주재) •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 및 국민 규제건의 과제 면밀 점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등 보고
2014.09.14~20	'14년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제22차 광주 총회 개최 • 관개, 배수, 홍수조절 및 하천개수에 관한 과학기술개발
2014.09.17	'14년도 제2차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 15명)
2014.09.19	'14년도 6차산업화 지구 선정('14년 3개소 선정 : 영동, 순창, 하동) • 생산·유통·관광·체험 등 농촌산업 주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6차산업화 지구 지정
2014.09.19~21	중국 청도 K-FOOD FAIR 개최 • 전략 : 중국시장 전역 진출기반 확충, 유망품목 확대진출 배가, K-FOOD 프리미엄 강화
2014.09.23	제3차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제6차 무투회의 안건 사전 보고 등
2014.09.23	제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 "농산업발전을 위한 농학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4.09.25~26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경남 창녕, 거창)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4.09.25~27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개최 •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유형별 부스 운영, 직거래 체험의 장 마련
2014.10.06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1차 회의 건의사항 조치계획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 공유 등
2014.10.14	농식품 6차산업화 벤처창업 경진대회(농촌진흥청) • 공모 108건중 본선 진출 12개팀 참가
2014.10.17	FTA 협상동향 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한·중 FTA 등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014.10.28	중자산업진흥센터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 • 종자 기업 연구개발 및 수출 등 일괄지원체계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관리

월 일	주요 내용
2014.10.28	제17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등 발굴·포상
2014.10.29~11.01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 • 정보교환으로 농업의 미래상 제시 및 경쟁력 강화, 국내 농기자재 수출촉진
2014.10.30~31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전남)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4.10.31~11.02	싱가포르 K-FOOD FAIR 개최 • 전략 : 성숙시장 진입발판 마련, 현지 메인마켓 공략 강화, 신선식품 시장확산
2014.10.3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환경부 그린카드 MOU 체결 •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이마트 등 유통업체-BC카드 간 협약체결
2014.10.31~11.02	한국유제품 페스티벌 2014 in Shanghai 개최 • 중국 소비자에게 한국유제품을 소개하는 장 마련, 수출확대에 기여
2014.11.03	제6차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 '13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11.05	제8회 전국농업인 두레품물 경연대회 개최 • 농업인 두레품물경연(8개팀), 어린이 국악경연(17개팀), 축하공연, 전통문화체험 등
2014.11.07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현장조사 및 콘테스트 발표를 통해 발굴하여 포상(98점 : 대통령상 12, 총리상 11, 장관상 75)
2014.11.07	'14년 대학생 농업·농촌 6차산업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마을의 유무형 자원들을 농업과 융합한 혁신적인 6차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2014.11.10	한중 FTA 협상 타결 관련,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 협상결과, 향후 국내대책 수립방향 등 설명 및 의견수렴
2014.11.14	제4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주제 : 식품산업 변화의 시기! 혁신과 창조적 도전)
2014.11.19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및 전시회 개최(VIP 주재, 안성 팜랜드) • 전시 관람·시연, 상생협약식 및 토론(농고·농대 학생, 농·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432명 참석)
2014.11.2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한국농축산연합회-경제4단체(사회공헌형))
2014.11.20~21	'14년 농협경제사업 시도별 순회설명회 • 농·축협 경제상무, 농협지역본부 경제사업 담당자, 각 시군 농정지원단장 등
2014.11.20~22	'14년 과일·화훼산업대전 •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확대유도

월 일	주요 내용
2014.11.2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개최(전북 익산) • VIP 및 내외빈 약 500명 참석
2014.11.25	'14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개최 • 김장채소 소비촉진 홍보 및 사회취약계층 김치 전달
2014.11.27	제5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 '친환경농업 가치 재인식 및 성장 생태계조성 전략 모색'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4년 생명산업대전(11.27~29)'과 연계하여 개최)
2014.11.28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코레일 MOU체결 • 철도인프라와 농촌관광 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상품 개발 운영 관련 협약
2014.12.02	'14년 농업안전보건센터 심포지엄 개최 • 농업인의 주요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종합 토론
2014.12.05	'14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성과보고대회 • 농식품 분야 '14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2014.12.09	'14년도 제5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한·중 FTA 협상결과 등 FTA 협상 동향 설명
2014.12.10	'14년도 제6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한·중 FTA 협상결과 등 FTA 협상 동향 설명
2014.12.11	'14년도 제7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한·중 FTA 협상결과 등 FTA 협상 동향 설명
2014.12.12	'14년도 제8차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회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한·중 FTA 협상결과 등 FTA 협상 동향 설명
2014.12.12	제4차 민간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마무리 계획보고, 수출개척협의회 확대 개편안 논의 등
2014.12.14~21	유럽 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 국외출장 • 덴마크(코펜하겐, 호르센스), 스페인(마드리드, 발렌시아)
2014.12.19	한·중 FTA 국내대책 경남도 지역 설명회 • 국내대책 수립 기본방향 등을 경남도 공무원, 농업인 단체 등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2014.12.19	'14년 제3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최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안)' 심의
2014.12.22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전통식품명인 지정 심의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방안 보고

월 일	주요 내용
2014.12.23	한·중 FTA 국내대책 전남도 지역 설명회 • 국내대책 수립 기본방향 등을 전남도 공무원, 농업인 단체 등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2014.12.23	제2회 농촌사회공헌인증 수여식 및 도농교류 정부포상 시상식 • 농촌사회공헌인증('15.10.20) 기업·단체(19개 기업·단체) 인증서 수여 및 도농교류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5)
2014.12.24	한·중 FTA 국내대책 경북도 지역 설명회 • 국내대책 수립 기본방향 등을 경북도 공무원, 농업인 단체 등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2014.12.30	FTA 협상결과 등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최근 FTA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014.12.30	한·중 FTA 국내대책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 국내대책 수립 기본방향 등을 주요 농업인 단체장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2014.12.30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미래부 간 MOU 체결 • 육종 등 생명산업분야 연구개발을 협력하여 국가 R&D 효율성 제고 및 산업화 촉진
2014.12.31	스마트 팜맵 구축(1차) • 3개 권역(강원, 충남·북) 농경지 전자지도 구축 및 행정·통계정보 연계
2015.01.12	제3차 민간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회의 개최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 정보 공유, 애로사항 논의
2015.01.28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15년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사업 계획 심의·확정(품목 추가·보상확대 등)
2015.01.29	조합장선거 공동담화문 발표 및 공동서한문 발송 • 선관위 사무총장, 우리부·해수부·산림청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 천명
2015.02.03~27	'15년 농업전망대회 개최(중부,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권역별 개최) • 국내외 경제동향 등 향후 10년간의 장기전망 등 발표
2015.02.04	FTA 등 농업통상관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 최근 FTA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015.02.10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 농식품 관련 15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325종 개방)
2015.02.11	'전통주 갤러리' 개소(서울 인사동, 문화체육관광부 협업) • 전시·홍보, 체험, 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소비 및 수출확대에 기여
2015.02.11	'15년 농촌복지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농촌복지관련 사업의 이해도 제고 및 수요 발굴(지자체 담당자, 관련 종사자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5.02.17	식육즉석가공판매업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신설('13.10월)에 따른 메뉴얼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2015.02.27	수출용 벼 재배 MOU 체결(농촌진흥청) • 대호간척지 수출용 원료 벼 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확대 협력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회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쌀수출협의회
2015.03.04~10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및 이스라엘 방문 • 정상순방 계기 한-UAE 할랄식품 및 농업협력 MOU 체결, 이스라엘 창조농업 사례 점검 등
2015.03.05	한-UAE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 • 할랄식품 시장 동향 관련 정보 교환, 할랄식품 분야 정보·기술 공유, 인증기준 의견 교환, 할랄푸드파크 개발 정보·기술 공유 등 협력
2015.03.06	'15년 제1차 희망농업분과위 • FTA 협상 동향 및 기 체결 FTA 국내대책 수립 방향 설명 및 의견 수렴
2015.03.06	'15년 제1차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15명)
2015.03.09	국민축산포럼 발족 • 학계, 언론계,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 축산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
2015.0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 결과(농협) : 참여조합 1,326개(1,115), 선거인 2,297천명(1,843), 투표율 80.2%(81.7)
2015.03.1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이마트) • 국내 우수 생산자 발굴 및 전략상품을 개발해서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 및 판매
2015.03.16	국가농업유산 지정(제5, 6호) • (제5호) 금산 인삼농업,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2015.03.19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획재정부) 등
2015.03.24	농식품분야 펀드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4개사
2015.03.24.~03.25	발작물 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세미나 및 농기계 전시회(농촌진흥청) • 발작물 기계 220점 전시 및 연시(100여개 농기계생산업체 참여)
2015.03.26	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 1차점검 회의 개최
2015.03.27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경북 성주) • 민관이 함께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참석 및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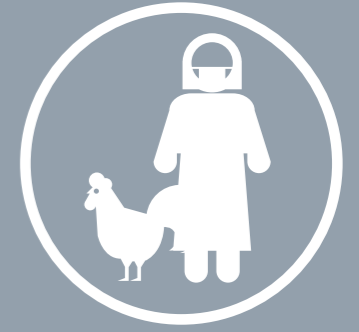
월 일	주요 내용
2015.03.30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식(전북 김제, '16.8월 완공예정)
2015.03.31	제5차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및 산하 할랄분과위원회 구성 • '15년 농식품 수출촉진 계획 및 할랄식품산업 발전 대책 관련 8대분야 과제 발굴
2015.03.31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 구축(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참여) • 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발굴·해소 추진
2015.04.0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SPC-의령군-농촌진흥청-국산밀산업협회) • 빵 가공 적합 품종 생산, 수매 및 제품개발 확대, 전소재배단지 조성 등
2015.04.11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 구축(교육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 체계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자체, 도시농업단체·농업인단체 등 민간조직 참여
2015.04.12~17	제7차 세계물포럼(WWF) 참여(특별세션 고위급회담 참여 및 농업부장관 양자회담) • 홍보관(한국관) 운영 및 증가음식 홍보
2015.04.15~06.17	할랄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추진(6회) •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세부추진 계획' 논의
2015.04.20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15년 식품정책 및 수출진흥 방향 보고
2015.04.27~28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경북 문경)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5.04.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롯데그룹-농협-대한상공회의소-동반성장위) •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해외 매장을 통한 수출 확대, 6차산업화 협력 등
2015.05.02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학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입학식 • 초등학교생(50명) 및 학부모 대상, 20주간(5.2~10.31) 텃밭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5.05.04	어린이 농촌체험 행사(안성 팜랜드) • 봄철 관광주간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가족 등 100여명과 장관님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5.05.06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VIP 주재)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 등 보고
2015.05.08	G20 농업장관회의(차관보, 터키 이스탄불) •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마련'을 주제로 세계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
2015.05.08	재단법인 친환경축산관리원 설립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이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구 신설
2015.05.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함께하는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행사 • 코레일과 협업, 단양 한드미 마을 체험행사 실시

월 일	주요 내용
2015.05.13~05.21	선진 금융제도 및 협동조합 발전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낙농육우협회, 새김천농협, 파주연천축협(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015.05.19	FTA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 선정 및 국내대책 심의
2015.05.20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및 제3기 분과위원회 구성안 심의
2015.05.20	제1차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추진과제(2개) 및 수시대응과제 선정 부처협업을 통한 해소 추진 ※ 중점추진과제(연내 해결추진) : 중국 유제품 등록 및 김치 위생기준 과도한 적용
2015.05.21	'15년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 개최(식품·외식산업계, 학계, 지자체 등 15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정보 심층분석 사업성과 발표 및 식품산업 시장전망 공유
2015.05.21	'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성과보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및 홍보 활성화 방안
2015.05.26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 합동 브리핑(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 참여(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룸)
2015.05.26	농업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분야 과학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간 협약 체결
2015.05.27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한국마사회 협약(동부지방산림청-강원랜드-강릉영동대학교 업무협약 병행)
2015.05.27	산악승마 시범행사(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승마 현장 점검을 위한 산지 시범행사(시승마 11필 운용)
2015.05.27	제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소비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 및 유통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 및 토론
2015.05.27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강원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등
2015.05.28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롯데슈퍼-친환경농업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농산물 판매장 확대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체계 마련 등
2015.05.29	제5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업무계획 및 주요 추진 성과, 개방대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제20회 농업인의날 행사 기본계획(안)

월 일	주요 내용
2015.05.31	제2회 동물보호 문화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단체 주도로 정책 홍보, 반려동물 문화 활동,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 다양한 관람·참여활동 마련
2015.06.04~08	이탈리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9차 FAO 총회 및 밀라노 엑스포 국제농업포럼 참석, 이탈리아 6차 산업화 사례 점검 등
2015.06.05~07	귀농귀촌·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최(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희망자에게 귀농·귀촌 관련 정보, 상담, 홍보 실시
2015.06.09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CJ중국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수출 유망상품 개발 및 시장정보 공유, TV홈쇼핑 등을 활용한 수출확대
2015.06.09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가축방역 관련 해외사례 및 가축질병관련 경제학적 접근 방식 등에 대해 논의
2015.06.09	'15년 제1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5년도 시행계획, 농어촌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및 정책모니터링단,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14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
2015.06.1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프랜차이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 개발을 통한 국내 농식품 소비 확대, 우수 산지·생산자 정보 제공 등 협력
2015.06.17~18	OECD 기후스마트농업 워크숍 개최(제주 신라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대응 정책 대안 및 정책평가 지표 모색
2015.06.29	제6차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보고 등
2015.07.01~04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추진(전북 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 고쳐주기, 의료재능 나눔, 대학생 재능 나눔 발대식, 토크콘서트, 방과 후 캠프 등 농촌과 대학생들의 어울림의 장 마련(36개 대학교 282명 참가)
2015.07.02	농업·농촌 광복 70년 학술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 광복 70주년 농업·농정의 회고와 전망
2015.07.06	제3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C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아시아지역 식품규격인 인삼제품의 세계 식품규격 승인
2015.07.06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학동 '기가 창조마을'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협력
2015.07.07	제3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5), 축하공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홍보 행사 등

월 일	주요 내용
2015.07.09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토론회
2015.07.09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청와대 영빈관, VIP 주재) •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산업통상자원부),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문화체육관광부), 투자활성화 대책(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
2015.07.10	농업·농촌 광복 70년 토크 콘서트(1) 개최 • '농업·농촌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이슈토크(발표) 및 릴레이 토크(토론)
2015.07.14	6차산업 가공식품 시장론칭 상품 품평회(농촌진흥청) • 상품진열, 온-오프라인 입점 순위 방법, 유통기업 입점 절차, 유통업체 바이어 1:1 컨설팅 등 ※ 우수가공식품 경영체 100개소(300여개 상품) 참가
2015.07.14	농업·농촌 광복 70년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 한국농업기술의 발자취와 미래기술
2015.07.14~16	'15년 창조농생명과학대전 개최 • 농림업 과학기술의 70년사와 ICT 등 첨단과학을 만나 발전해 가는 농업의 미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
2015.07.15~	식량정책포럼 운영(주요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 • 식량 분야의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2015.07.16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회 4차 회의 개최 • 외식기업 해외진출 방안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등
2015.07.16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네이버) • IT기반 6차산업 전용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정보 검색기능 강화 등 협력
2015.07.16	농업·농촌 광복 70년 토크 콘서트(2) 개최 • "농업·농촌의 성과와 미래 도전"을 주제로 이슈토크(발표) 및 릴레이 토크(토론)
2015.07.17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서울청계광장) • 동아일보 공동주최, 경제단체장, 체험마을 대표, 시민 등 참가
2015.07.18	농촌관광 체험단 발대식(아산 외암민속마을) • 장관, 여행업계, 가족, 교사 등 80여명 참가
2015.07.20~21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및 식재료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경북) • 식재료 품평회, 1:1 바이어 상담, 생산지 견학,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등
2015.07.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지원네트워크 출범 협약식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논의
2015.07.23	농업·농촌 광복 70년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으로 미래 70년 개척

월 일	주요 내용
2015.07.29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경남) • 상생협력 정책방향 설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경영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2015.07.30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 공장 신증설 및 산단 활성화 과제 보고
2015.08.05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전남) • 상생협력 정책방향 설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경영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2015.08.07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5개 주제 토론
2015.08.07~.16	광복 70년, 농업농촌 사진전 개최(서울 세종로공원) ※ 개막 행사 : 2015.8.7(금)
2015.08.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보완
2015.08.21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충남) • 상생협력 정책방향 설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경영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2015.08.24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 실시 • 농식품 창업, 스마트농업 등 농식품 분야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업체제 추진 논의
2015.08.26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점검 및 지자체 규제개혁 관련 과제 발굴
2015.08.26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LG유플러스) •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식품 판매 촉진
2015.08.27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MOU 체결(농림축산식품부-편의점협회) • 우리쌀로 만든 제품 소비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협력 등
2015.08.28	'15년 A Farm Show 개최(aT전시장) • 주최·후원 : (주최) 동아일보, 채널A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 : 창조농업관, 농업창업관, 6차산업관, 귀농귀촌관 등 운영
2015.08.28	'15년 대학생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 농업·농촌 6차산업화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의 국내 농업생산과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 분야의 사업모델 공모
2015.08.31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전북) • 상생협력 정책방향 설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경영자문 및 현장컨설팅 등



〈부록〉

박근혜정부 농정 평가

1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인지도 및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2 박근혜정부 농정 성과에 관한
워크숍 개최 결과

1 박근혜정부 농정방향 인지도 및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농정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3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체감도, 농정방향에 대한 인지도 및 5대 농정과제 성과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

조사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대상 농업인,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공무원, 학계,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등 671명

조사방법 2015.7.29 ~ 8.4 기간 중 이메일과 전화 등을 활용하여 조사

농식품정책

설문조사 결과 요약

공통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높게 평가된 정책



정책 체감도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

- 농업인은 직불제 확충 등 소득증대 관련 정책에 체감도가 높음
- 전문가, 언론, 지자체 등은 정책금리 인하, 농촌관광, 귀농귀촌 제도 기반 등 농촌 활성화 관련 시스템 확충에 관심이 높음

33개 세부정책과제 체감도

농업계, 학계 및 전문가, 지자체·언론 등 모든 계층에서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직거래·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과제를 공통적으로 체감도 높은 과제로 평가

나머지 정책과제 체감도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이는 이해관계자별로 농정에 대한 요구가 다를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정책고객의 특성과 정책간 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농정을 수립·추진할 필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체감도 조사 결과〉

상위 상 ● 상위 중 ● 상위 하 ●

주요 정책 과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언론	지자체	농민단체	농업인
농촌의 6차산업 활성화		●	●	●	●	●
직거래·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	●		●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	●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	●	●	●	●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	●	●	●
농촌관광 활성화		●	●	●	●	●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	●	●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				●
친환경 농식품 인증관리 시스템 강화			●	●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요 및 수출 확대					●	●
장기적 농정숙제인 쌀 관세화 문제 해결			●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 홈 등 공동시설 지원					●	
농촌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	
도시농업 실천기반 확충		●	●	●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			●			
알리바바/티몰 등을 통한 중국시장 적극 개척			●			
곤충 등 유망자원의 규제개선 추진			●			
영농재개의 디딤돌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 지원 내실화						●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1차산업인 농업과 제조·가공·체험·관광 등 2차·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 지원, 현장규제 개선 등

6차산업 창업자 수(8.8%) 증가
인증사업자 매출액(11.2%) 증가('14년 기준)



하우스맥주 외부반출 허용('14.4)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14.12)



전통주 인터넷판매 확대('15.4)



건축물 진입도로 의무확보 규정 완화('15.5)



민박 조식제공 허용('15.7)

직거래,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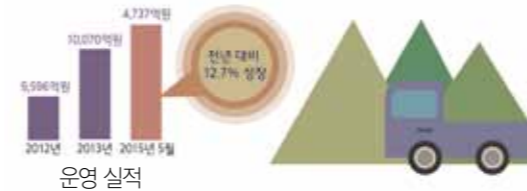
직거래 인프라 대폭 확충, POS-Mall 등 ICT 기반의 신유통모델 확산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액 증가



2015.6.22 직거래법 제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15. 6. 22)
농수산물 전용 공영홈쇼핑 개국('15. 7. 14)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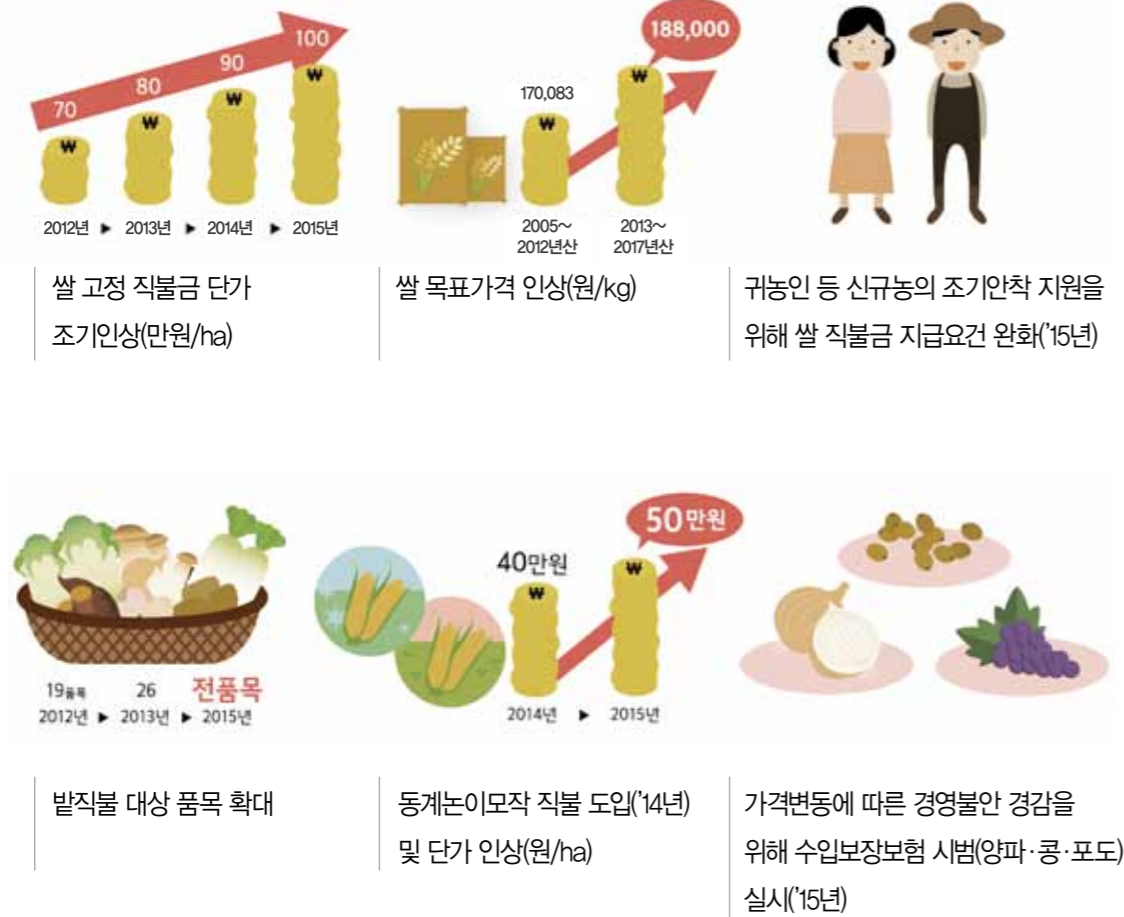
농가소득 증대, 판로확대
유통비용 절감 효과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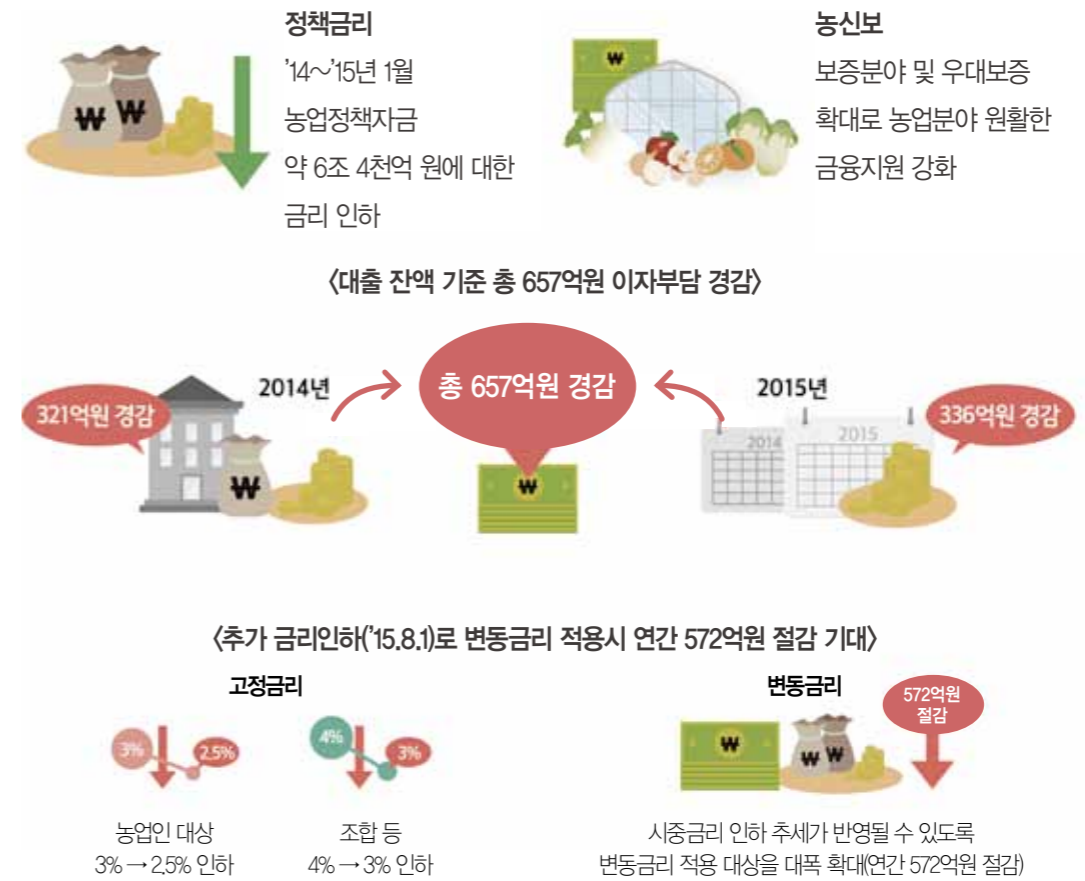
운영 실적

안성물류센터 운영으로 유통단계 축소, 산지 직공급을 통한 유통 효율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설문조사 대상

33개 주요 정책과제

주관국	과제명
농촌정책국	1.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2. 농촌관광 활성화 3.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4.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 홈 등 공동시설 지원 5. 농촌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6.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7.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8.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농업정책국	9.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10. 영농재개의 디딤돌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 지원 내실화 11.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식량정책관실	12. 장기적 농정숙제인 쌀 관세화 문제 해결 13. 동계이모작 대폭 확대 14. 들녘경영체 확대 및 내실화
축산정책국	15. 민관협업 축산물 수급조절 위원회 구성·운영 16. 말산업특구 지정 17. 식육가공 즉석판매업 신설 18. 동물약품품 수출 약진 19. GPS와 KAHIS 접목을 통한 상시방역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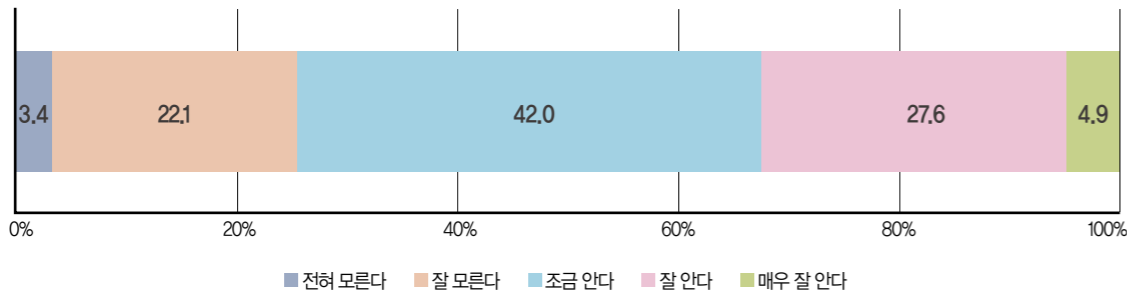
주관국	과제명
식품산업정책관실	20. 알리바바·티몰 등을 통한 중국시장 적극 개척 21. 삼계탕·우유 등 수출난제 해결 2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요 및 수출 확대 23. 식품 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현장규제 대폭 완화
유통소비정책관실	24. 직거래,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25.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26.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창조농식품정책관실	27.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 28. SNS를 활용하여 영농현장 애로 실시간 해결 29. 농식품 창업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30. 친환경 농식품 인증관리 시스템 강화 31. 곤충 등 유망자원의 규제개선 추진 32. 도시농업 실천기반 확충
정책기획관실	33.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 체계 구축

농정추진 방향에 대한 인지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고령화 및 양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는 농정방향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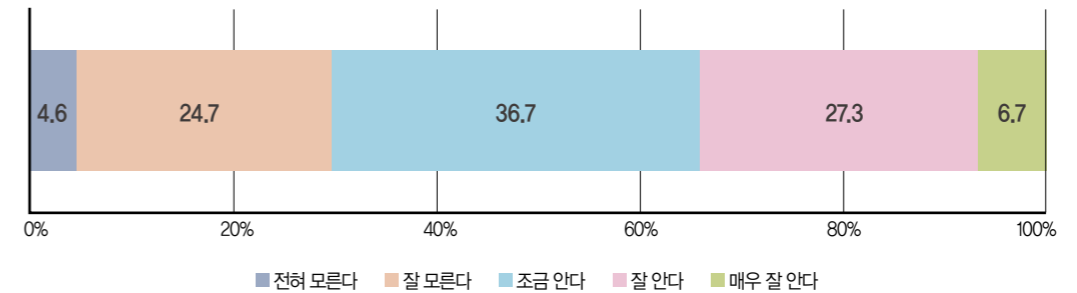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인지도가 높았지만, 농업인의 농정 방향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18.5%)
- 전문가 그룹 등 정책파트너와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은 충분하고, 농업인과 공감대 형성노력이 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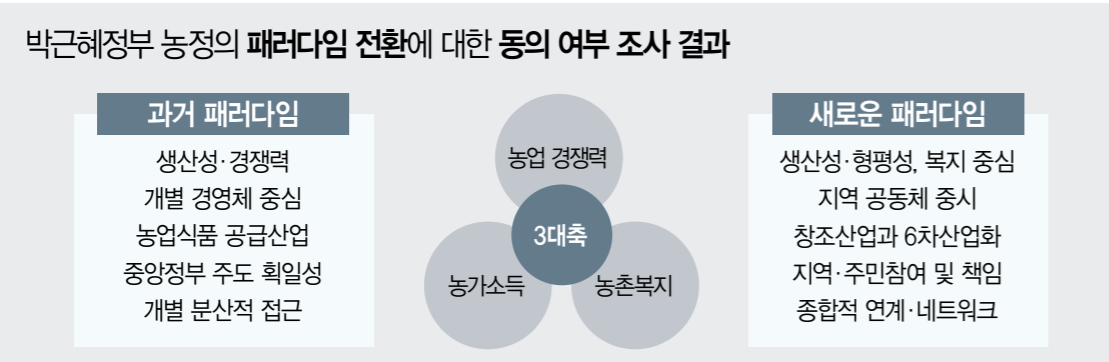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5년간의 농정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2013~17)’ 인지도 조사 결과



- 농정방향 인지도에 비해 구체적 계획인 5년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학계, 지자체에서는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지만(10%p) 언론, 농업인 그룹에서는 인지도가 낮아짐
- 상대적으로 농정에 대한 비전문가 그룹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 홍보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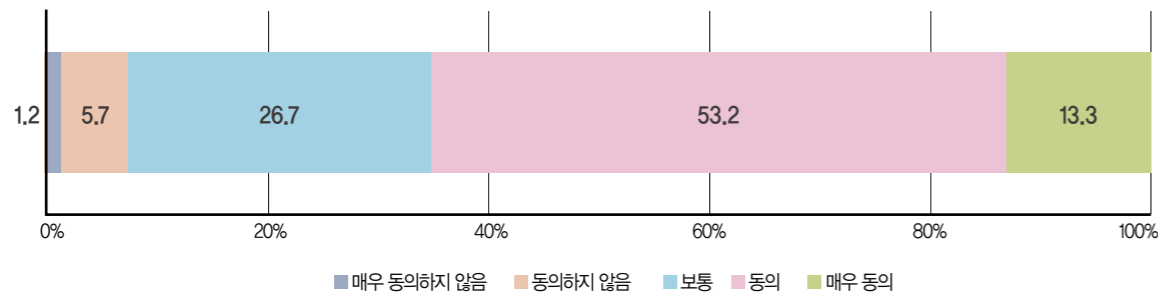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한다 **66.5%**
3.72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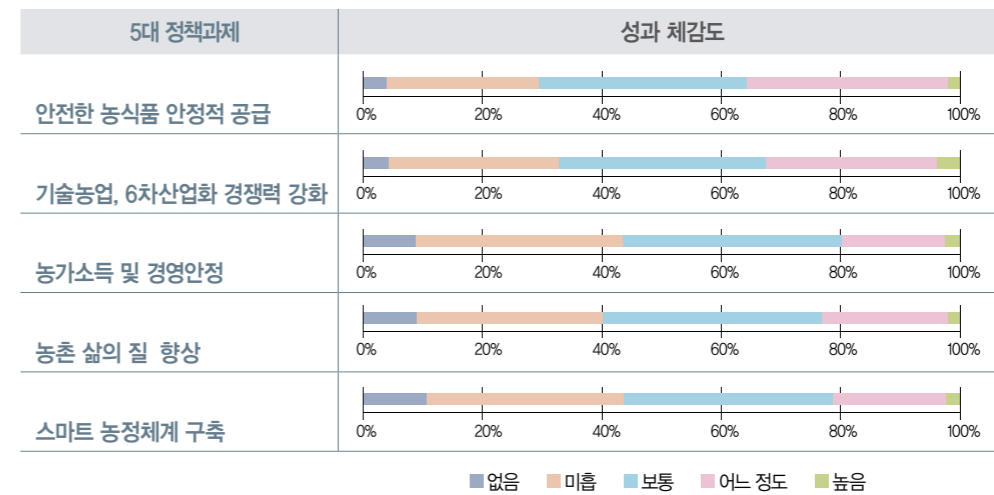
- 모든 유형그룹에서 70~80% 이상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동의하고, 농업인도 약 60%가 동의하고 있어 정책조정이 요구
- 농업·농촌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도농 간 격차확대, 양극화 및 고령화)를 관련 그룹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역시 필요하다고 인식



5대 농정과제별 성과 체감도

종합적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과제의 체감도가 가장 높고, 이어 '기술농업, 6차산업화' 과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

〈5대 정책과제별 성과 체감도 조사결과〉



이해관계자별 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

이해관계자별	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학계 및 전문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18점),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3.15점)
언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58점),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3.42점)
농민단체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20점), 농촌 삶의 질 향상(2.87점)
지자체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3.42점),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3.32점)
농업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2.90점),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2.89점)

2 박근혜정부 농정 성과에 관한 워크숍 개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2년 반 동안의 박근혜농정이 추구해 온 성과와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도출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



워크숍 개요

일시

2015.8.7(금) 14:00 ~ 8.8(토) 10:00 (1박2일)

장소

산림교육원

(남양주 진접읍 장현천로 197(장현리 465-2))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유관기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언론계, 농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70여명

토론주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증진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과제별

발표 및 토론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정책업무 소관 실·국장이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를 발표 후 서울대 이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5개 주제별로 토론 실시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발표〉



〈5개 주제별 토론〉

발표

- 식량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축산분야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과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농업·농촌의 창조적 변화, 국민과 함께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 첨단 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연구정책국장
-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산림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산림청 기획조정관
- 6차산업화 및 복지농촌 건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일하는 방식 개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토론

- 좌장 : 서울대 이태호 교수
- 지정토론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안양대 김동환 교수, 충남대 박종수 교수, 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 농식품 경쟁력 제고 전남대 서종석 교수, 서울대 최영찬 교수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축산연합회 성효용 회장, 김태곤 박사
 - 농촌복지 증진 전남대 최수명 교수, 경남대 김종덕 교수
 - 일하는 방식 개선 경기대 송하성 교수



주요

의견 제기 내용



분야	주요 의견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수급 안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농식품 수급 안정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이 안정되고 식량 자급률 또한 증가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흡한 품목 및 분야의 정책을 통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수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들이 농산물 수급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품목별로 스스로 수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쌀 자조금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우유 수급이 불안한 이유는 국내산 원료로 만든 분유시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공원유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분유원료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기업이 농업을 주도하는 사례를 세심히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협동조합 패커를 집중 육성하고, 축산분야는 도축장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득안정망과 관련하여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분야에서 코리안 바비큐 소스 등 우리 입맛에 잘 맞으면서도 기발한 신제품을 다수 개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동북아시아식품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중 FTA 등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식품수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향한 축산물(우유 등) 수출을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이외에도 수요자, 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의 정책을 소비자·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모든 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무,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인상했을 때 소비자가 대체작물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다양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분야	주요 의견
농식품 경쟁력 강화	인력육성 및 소비자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부문의 인력육성이 필요하다.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농업인력 육성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의 농업에 젊은 인력을 어떻게 끌어들이 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도 중요한 정책고객 중 하나이다. 농진청 등이 농업기술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1인가구가 많아 이들을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지역별로 플래그쉽 농장을 만들면 다른 농가들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통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는 작은 규모에 맞게 지난 10년간 산지유통센터 정책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직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농산물은 외식·가공을 통해 소비되는 측면이 큰데, 규모화 된 협동조합이나 시군 단위의 기존의 협동조합을 단지형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기업의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수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가공·유통분야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분 야	주 요 의 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p>다양한 소득안정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쌀을 감산하면서 동시에 전락작물을 도입하거나, 발작물에 대한 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리스크를 줄이는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모델을 농촌에 적용·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어비엔비(숙소 제공 기업)' 또는 프랑스 지트제도와 같이 농촌의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도시민)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영홈쇼핑이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가격을 낮춰주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6차산업과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김영란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발급 하는 방법이 있다.
농촌복지 증진	<p>맞춤형 복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가 농정의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고령자·귀농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생활편의 증대, 사회복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농촌마을의 단위를 쪼개어 더 작은 단위로 바라보고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도 농업인에게 가장 큰 복지는 소득향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 개선	<p>농업·농촌 가치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다원적인 가치들을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농업으로부터 혜택과 보호를 받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알려 국민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 농업의 문제를 농식품부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지고 모두가 협업해야 한다. <p>현장중심 소통 농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변화된 농정의 패러다임은 칭찬할 만하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찾아가는 방식의 농정과 소통노력은 훌륭하다.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책임집필자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정빈 1장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형석 2·3장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팀장 박종민 4장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팀 사무관 강희중 부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황의식
편집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팀 박종민 팀장, 강희중 사무관, 남경원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정승화 이슈관리팀장, 김인득 전문관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디자인·제작	벤티카주식회사 Tel 02-2281-7701, www.vetica.co.kr

※ 이 책에 수록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